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김윤기 · 유승선 · 황종률 · 오현희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2016. 4

경제현안분석 제90호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총괄 | 박용주 경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정문종 조세분석심의관
김윤기 거시경제분석과장

작성 | 김윤기 거시경제분석과장
유승선, 황종률, 오현희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

지원 | 강숙자 거시경제분석과 행정실무원

「경제현안분석」은 국회가 관심 있게 다룰 재정 현안이나 정책 이슈에 대해 객관성 있는 분석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및 법안 심사와 의제 설정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 :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 02) 788-3775 | me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2016. 4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 위원회」의 심의(2016. 4. 1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일본경제는 1990년대 자산버블이 붕괴된 이후 장기간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정부는 2013년 초부터 일본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이전에 비해 더욱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성장전략 등 3가지 화살로 대표되는 과감한 경제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을 대폭 확대하는 양적완화정책은 초기에 긍정적인 시장반응을 이끌어내며 일본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으며, 이에 고무된 일본정부는 2014년 소비세율을 8%로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성장과 저물가가 일상적인 세계경제의 뉴노멀 등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고령화도 심화되어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채무가 2014년 말 기준 GDP 대비 226%에 이르고 있으나 세출개혁 청사진 부족으로 재정개혁의 성공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경제의 회생 여부는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본경제의 회복여부는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아베정부의 경제활성화정책의 성공여부에 우리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아베정부의 경제활성화정책을 살펴본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에 대한 정책대응과 시사점」을 발간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국내경제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구조개혁측면에서도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시의적절한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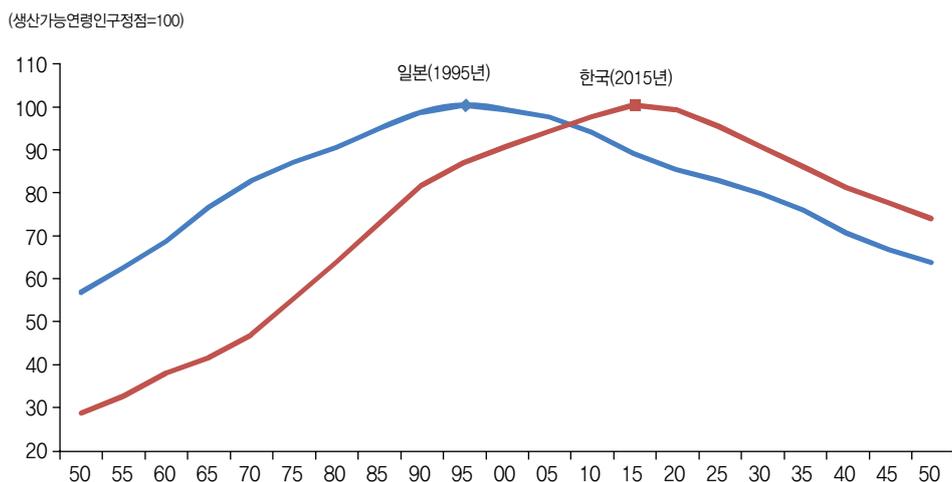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준 기

요 약

1. 서론

- 최근 우리 경제는 역동성 저하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하여 일본식의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
 - 2011년 이후 국내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 내외로 하락했으며, 수출은 세계 금융위기 직전 연평균 10%를 상회하며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2012년 이후 지극히 부진한 양상이 지속
 - 국내 고용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동생산성 하락, 서비스산업의 후진성 등 구조적인 문제점도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
 - 총수요 부족과 유가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세가 낮아지면서 저물가 기조의 장기화와 나아가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도 고조
 - 이러한 경제여건 하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1990년대 일본의 인구구조와 매우 유사해 우리 경제가 일본식 저성장·저물가의 전철을 밟아갈 우려가 점증

[일본과 한국의 생산가능연령인구 변화]



주: 15~64세 생산가능연령인구 정점=100 기준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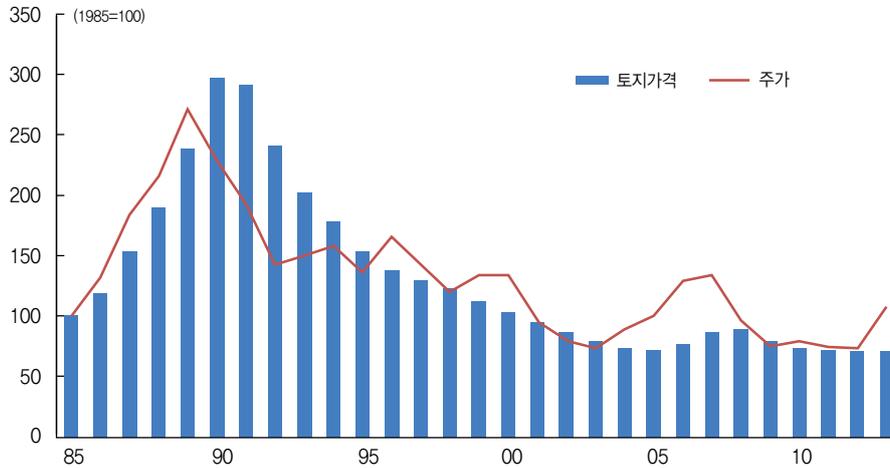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경제의 실패 경험과 경제재건을 위한 현 아베정부의 경제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음

2. 일본 장기침체의 진행과정

가. 버블발생과 붕괴 과정(1985~1990년)

- 일본 정부는 1985년 플라자합의로 엔화가치가 급등하자 경기위축 방지와 내수부양을 위해 전후 가장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실시
 -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확대 시정 등 세계경제의 불균형 심화를 조정하기 위한 G5(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국가들의 플라자합의(1985년 9월)로 일본 엔화가치는 1985년 말 달러당 238엔에서 1988년 말 128엔으로 무려 46.2% 절상
 - 이에 일본 금융당국은 경기위축 방지와 내수부양 차원에서 1986년 1월 이후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5%p 인하하였으며, 그 결과 총통화 증가율은 1985년 8.4%에서 1986~1990년 중 연평균 10.4%로 2%p 상승
- 이러한 금융완화정책에 힘입어 일본 금융기관들은 주식과 토지를 담보로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시켰고, 늘어난 유동성은 자산시장의 버블을 빠르게 형성
 - 일본 주가는 1989년 말 기준으로 플라자합의 이전인 1984년 말 대비 무려 237% 상승하였으며, 지가는 66% 상승
 - 국민총자산 규모는 1984년 4,007조엔에서 1990년 말 7,937조엔으로 98%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시 일본 GDP규모의 17.7배로 일본경제의 자산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줌

[일본의 자산가격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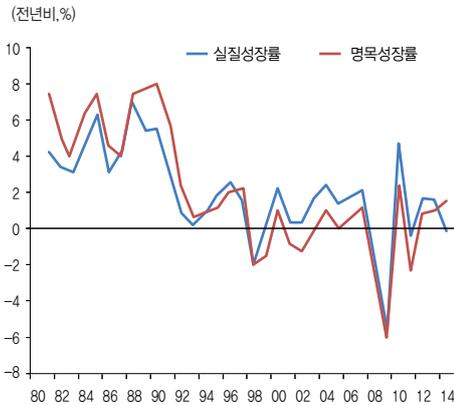
- 하지만 자산시장의 버블과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자 일본 금융당국은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등 긴축정책으로 선회하였고, 이의 충격으로 주가와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버블이 붕괴
 - 일본은행은 1989년 5월부터 1990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5%p 인상하였으며, 대출총량규제를 실시하여 부동산 관련 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금지
 - 닛케이 주가는 1989년 말 3만 8,000선대에서 1990년 4월 2만 9,000선대로 폭락하고 10월에는 일시적으로 2만선이 붕괴
 - 이에 따라 동경주가 시가총액은 1989년 말 5,909억엔에서 1992년말 2,810억엔으로 53.0% 급감
 - 주가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으로 민간 경제주체들의 순자산(자산-부채)은 급속히 축소되었으며, 가계와 기업은 자산매각과 투자 축소를 통해 부채 조정에 나서면서 일본의 내수경기는 더욱 빠르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

나. 경기침체 장기화 과정(1990~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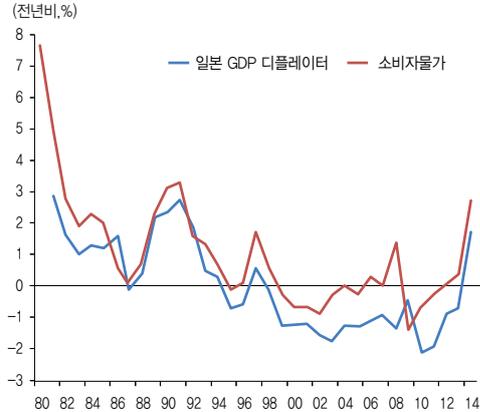
- 일본경제는 1980년대 후반 형성된 버블이 붕괴되면서 1990년대 초반 이후로 저성장·저물가·저고용으로 특징되는 장기침체에 진입

- 일본의 경상GDP성장률은 1980~1990년간 연평균 6.2%였으나, 1990~2014년간에는 연평균 0.4%로 급락하고, 동기간 중 실질GDP성장률은 4.6%에서 0.9%로 크게 둔화
 - 특히 1990년 중반 이후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디플레이션으로 경상GDP성장률이 실질GDP성장률 보다 낮아짐
 - 고용시장은 저성장과 저물가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됨
 - 취업자수 증가율은 1980년대 연평균 0.9%에서 1990년대 0.2%로 둔화된 뒤, 2000년대에는 -0.2%의 감소율을 기록
- 일본의 장기침체기를 좀 더 세분화해보면, 버블붕괴 및 경기침체 진입기, 디플레이션과 내수침체의 장기침체 본격화시기, 인구고령화와 해외경제 위기의 저성장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 경기침체 진입기(1990~1996년)는 자산버블 붕괴로 경기침체가 시작된 시기이며, 이 기간 중에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조정, 장기간의 설비투자 감소세가 성장률 하락을 주도
 - 장기침체 본격화시기(1996~2000년)는 본격적인 디플레이션과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부진이 심화
 -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상GDP는 1997년 523.3조엔을 정점으로 하락추세로 전환(2014년 경상GDP는 1997년 대비 6.9% 감소한 487.6조엔)
 - 소비부진은 일자리창출 지연과 임금둔화 등에 따른 피용자보수 둔화,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역자산 효과 등에 주로 기인
 - 저성장시기(2000년 이후)는 고이즈미 개혁과 세계경제 호조에 힘입어 일본 경제가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인구고령화와 반복된 해외경제 위기를 경험하며 낮은 경제성장률을 시현
 - 고이즈미정부(2001년)의 공급측면에 주목한 경제개혁으로 실질경제성장률은 1997~2002년 중 연평균 0.4%에서 2003~2007년 중 1.8%로 회복
 - 그러나 고이즈미정부 이후 개혁 모멘텀이 약화된 가운데 IT버블붕괴(2001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유럽재정위기(2012년) 등 일련의 해외경제위기를 경험하며 저성장이 지속

[실질 및 명목 성장률]



[물가 및 디플레이터]



자료: 일본은행, IMF

3. 장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 아베정부 이전(1990~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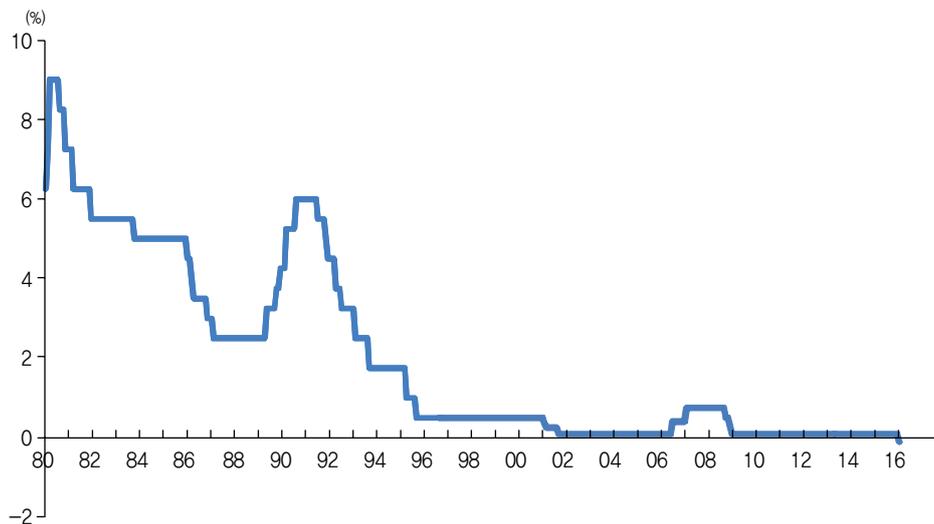
가. 통화·재정정책

- 일본 금융당국은 버블 붕괴 이전의 적절한 정책대응 실패, 버블 붕괴 이후의 불황에 대처한 소극적 금융완화정책으로 경기침체 장기화의 빌미를 제공
 - 일본은행은 버블 붕괴 이전 경제상황에 대한 오판으로 기준금리 조정시점과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자산버블의 발생과 붕괴를 야기
 - 버블붕괴 후 이어진 1990년대 불황에 대응해서는 경기부양에 필요한 과감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대처
 - 또한 명목금리인 기준금리 인하 수준이 물가상승률 하락을 고려한 실질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할 만큼 충분치 못하였음
 -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과 금융부실채권 처리 미흡 등 1990년대 일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일본은행은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등 보다 과감한 통화정책을 도입했으나 성급한 출구전략과 경제주체들의 신뢰 확보를 얻지 못해 디플레 방지와 경기부양의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

- 일본은행은 1999년 2월 기준금리(당시 콜금리)를 0.1%보다 낮추는 제로금리 채택에 이어, 2001년 3월부터 2006년 3월 중 최초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
 - 양적완화정책의 핵심내용은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를 금리에서 중앙은행 초과지준금으로 변경, 디플레이션 종료 시 까지 양적완화정책 지속, 장기국채 매입 등이 포함
- 양적완화정책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가 개선되자 일본은행은 경제회복을 낙관하여 성급한 출구전략을 시행
 - 경제성장률은 2003~2005년간 연평균 1.8%,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6년 전년도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0.2% 상승으로 전환
 - 일본은행은 2006년 3월 양적완화정책을 중단하고 통화정책 중간목표를 다시 금리로 변경한 뒤 12월에는 기준금리를 0.5%로 인상하는 등 성급한 출구전략을 시행
- 당시 과감한 통화정책은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의 자금조달여건 완화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경제주체들의 양적완화정책 지속에 대한 신뢰성 부족과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방지하지 못해 통화정책의 효과가 반감

[일본의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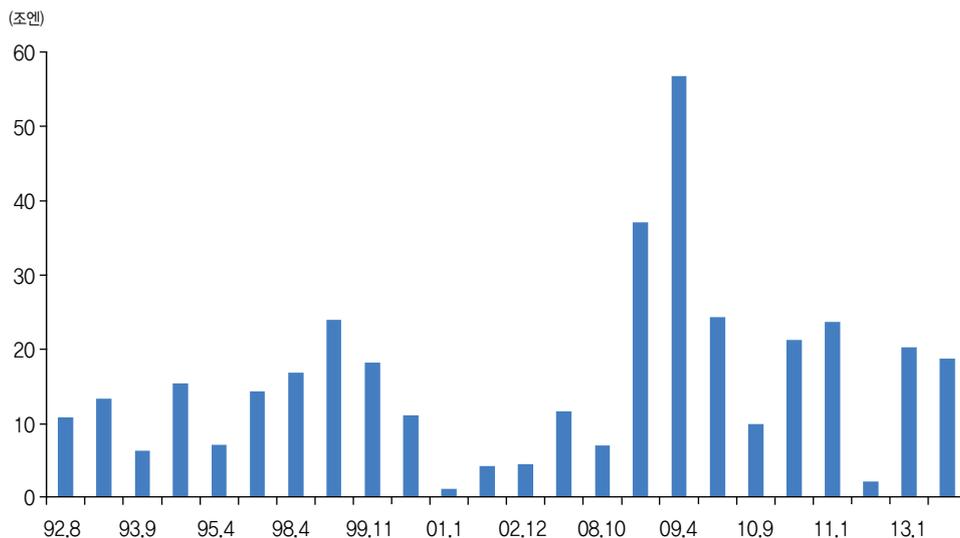


주: 2008년 이후 일본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없으며, 최근에는 중앙은행 예치금 일부에 적용되는 초과지준부금리(IOER)을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어 2008년 이후는 IOER을 이용
 자료: 일본은행, 국제금융센터

- 성급한 출구전략의 부작용과 해외경제위기가 중첩되면서 일본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져들자 금융당국은 제로금리정책으로 복귀
 - 양적완화정책 중단으로 본원통화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동아시아 외환위기 여파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2008년 -0.1%, 2009년 -5.5%)
 - 이에 금융당국은 2008년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11월에는 제로금리정책으로 복귀

-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버블붕괴 후 일본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기조를 줄곧 유지했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경기회복에 그침
 - 1990년부터 현 아베정부 이전까지 경기부양용 재정지출규모는 2015년 일반회계예산(96.3조엔)의 3.5배 수준인 339.7조엔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
 - 대규모 재정지출에도 경기부양 효과가 작았던 이유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 재정지출 승수가 낮은 사업에 재원이 집중,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이 충분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점, 경기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정책적 오판(예: 1997년 4월 소비세율 인상(3% → 5%), 재정구조개혁법을 추진하여 재정지출을 삭감) 등이 지적됨

[일본정부의 경기부양용 재정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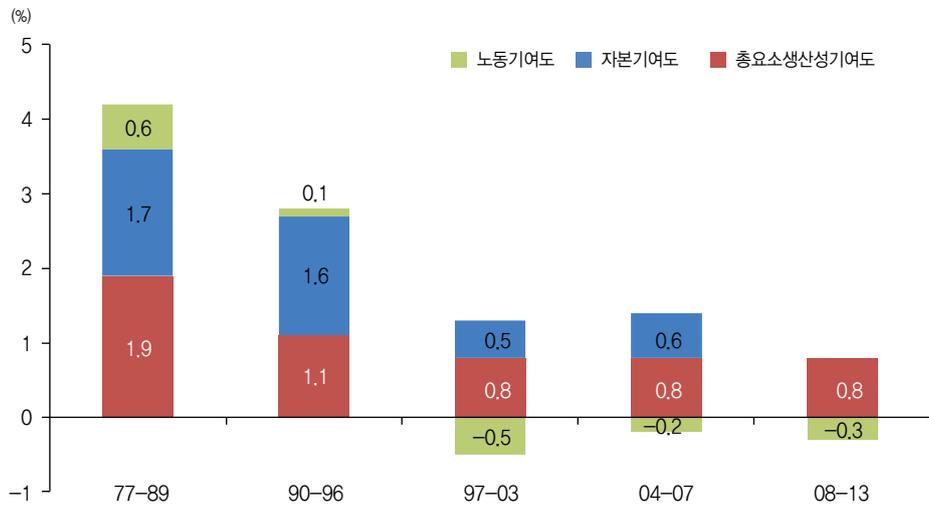


자료: 일본 내각부

나. 구조개혁정책

-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공급측면에서 강조하는 분석에서는 그 근본원인을 구조개혁 실패로 인한 생산성 하락에서 찾고 있음
 - 일본정부는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구조개혁 대신 정책금리 인하, 공공투자 확대 등과 같은 전통적인 경기대응책으로 총수요를 부양하여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데 집중
 - 이와 같은 경기부양책 남발은 국가채무 누적으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재정 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 일본의 중요소생산성증가율은 1990년대 들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일본 재무성은 중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1977~1989년간 연평균 1.9%p에서 1990~1996년간 1.1%p, 1997~2003년간 0.8%p로 각각 하락한 것으로 추정

[일본의 중요소생산성 기여도 추이]



자료: 일본 재무성

- 다만 2001년 출범한 고이즈미정부는 ‘성역 없는 구조개혁’이라는 정책목표를 표방하고 금융부실 해소, 재정건전화, 연금제도 개혁, 체신사업과 도로공단의 민영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구조개혁을 추진

- 고이즈미정부는 일본경제 장기불황의 주요인으로 부실채권 처리 지연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금융개혁과 부실채권의 조기 처리를 하나로 묶어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
 - 그 결과 부실채권비율은 2001년 8.4%에서 2005년 2.4%로 큰 폭 축소
-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에서 재정건전화로 방향을 전환하고, ‘신규 국채발행액 30조엔 상한목표’를 설정하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
- 그 외 연금, 의료, 노인복지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 우정사업과 도로 공단의 민영화 등 구조개혁정책을 추진
- 고이즈미정부의 구조개혁정책은 2005년 ‘금융기관 부실채권 처리 종료(9월)’ 선언 및 ‘우정민영화법안(10월)’ 성립을 기점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개혁 추진과 경기회복력 강화라는 선순환 구도가 형성
- 그러나 고이즈미정부 이후 개혁 모멘텀 약화, 세계 금융위기(2008년)와 동일본 대지진(2011년) 여파 등으로 일본경제는 다시 침체의 늪에 빠져들

4. 아베정부의 경제정책(2013~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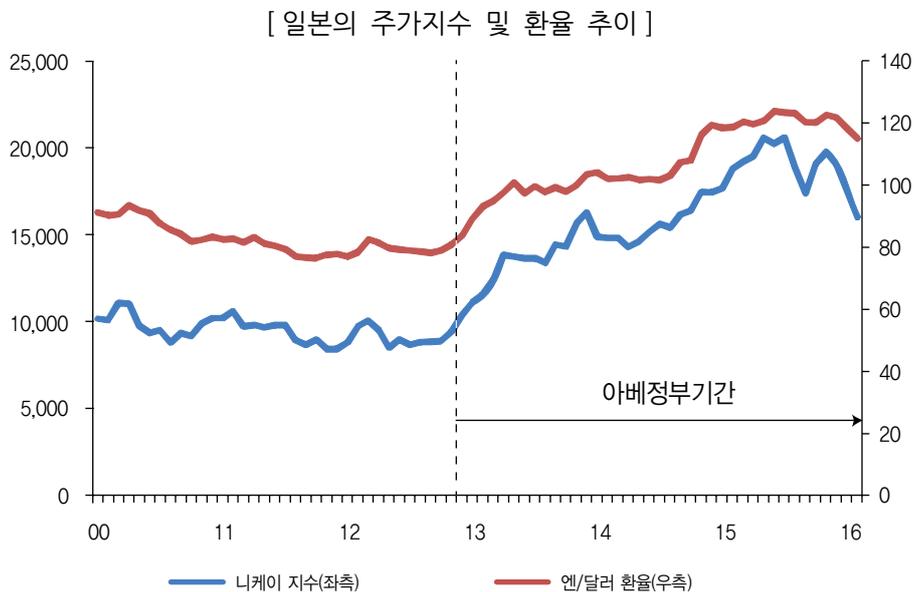
가. 통화·재정정책 추진

- 아베정부(2012년 12월 출범)는 경제주체들의 신뢰 확보를 중시한 과감한 통화정책(제1화살)과 확장적 재정정책(제2화살)의 경기부양책을 제시
 - 이전정부와 달리 확고한 물가목표달성과 엔화약세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경제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 확보를 중시
 - 일본은행은 2013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 달성목표를 2%로 하는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하고 4월에는 양적·질적통화완화정책(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netary Easing)을 발표
 - 주요 내용은 통화정책운용목표를 콜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변경, 본원통화 연간 60~70조엔 추가 공급, 장기국채매입 연 50조엔 증액, 위험자산인 ETFs와 일본부동산투자신탁(J-REITs)를 각각 연 1조엔, 300억엔 매입 등임
 - 2014년 10월에는 본원통화공급과 채권매입을 증액하여 보다 강화된 양적·질적통화완화정책을 발표

- 재정정책도 2013년부터 3차례의 경제대책을 추진하면서 본예산 이외에도 정부일반회계예산(2015년 기준)의 19.6%에 이르는 총 18.9조엔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확장적으로 운영
- 결국 아베정부의 통화·재정정책은 대규모 통화방출을 기반으로 한 엔화약세 유도, 실질금리 하락,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은 시행 초기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 실물경제의 회복세는 기대를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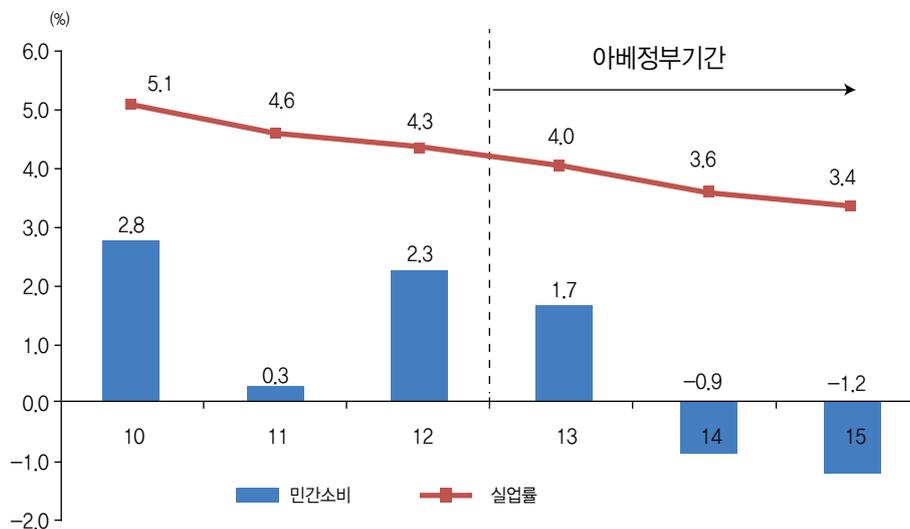
- 엔/달러 환율은 아베정부 출범(2012.12) 이후 2015년 말까지 약 42% 상승했으며, 실질 국채수익률(10년 만기)도 1.0% 내외에서 2014년 1월~2015년 12월 중 월평균 -0.8%로 하락
- 엔화 약세와 실질금리 하락에 힘입어 기업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닛케이지수는 2012년 말 10,395에서 2015년 말에는 19,033으로 83% 상승



자료: Bloomberg

- 하지만 실물경제 측면에서 보면, 고용과 임금이 개선되었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는 여전히 부진해 일본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를 크게 하회 (실질경제성장률 : 2014년 0%, 2015년 0.4%)
 - 고용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2012년 4.3%에서 2015년 3.4%로 상당 폭 하락하였으며, 임금상승률도 2013년 -0.7%(5인 이상 제조업 기준)에서 2014년 1.8%, 2015년 0.3%로 증가
 - 이에 반해 민간소비는 2013년(전년비 1.7% 증가)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듯 했으나, 소비세율 인상(2014년 4월 5%→8%)의 영향 등으로 2014년 -0.9%, 2015년 -1.2%로 감소 전환
 - 설비투자는 엔화약세와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미래 기대수익률 하락, 중국경제 둔화 등으로 낮은 증가세에 그침
 - 다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강력한 통화공급 확대에 힘입어 2013~2015년간 연평균 1.3% 상승해 2009~2012년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남

[아베정부 출범 전후 민간소비와 실업률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한국은행

□ 2013~2015년간 아베정부의 경제정책 시행으로 일부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으나, 아직은 경제성장동력을 되찾은 것은 아니라는 판단

-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기업수익 개선이 설비투자 증가로, 임금인상이 민간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지난 3년간의 디플레이션에서는 벗어났으나, 이는 무제한적인 통화공급에 의해 인위적으로 지탱되는 측면이 강하며, 아직 실물경제의 수요측면에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여기에 2015년 중 중국경제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일본경제는 추가하락과 엔화강세, 디플레이션 재 조짐, 실물경기 둔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2016년 들어 엔화약세 유도과 새로운 경기부양 수단의 확보 차원에서 일본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금리정책(1월 29일)를 도입
 - 마이너스금리정책 도입 이후 통화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엔/달러 환율이 112엔대까지 하락해 엔화강세가 더욱 심화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
 - 아베정부는 경제주체의 신뢰를 기반으로 경제회복을 도모해왔기 때문에 신뢰가 약화된다면 아베경제정책은 차질을 빚을 우려

나. 구조개혁 추진

- 아베정부는 구조개혁 없는 경기부양정책이나 공급부문 개선 없는 수요확대 정책은 그 효과가 한정적·일시적이라는 인식하에 신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제3화살)’을 추진
 - 신성장전략은 구조개혁에 중점을 둔 생산성 제고정책들인 규제개혁, 노동시장개혁, 기업투자환경조성, 재정부문개혁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평균 명목GDP성장률 3%와 10년 후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GNI)을 150만엔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현재 0.77%p에서 향후 1.18%p)하여 2015~2020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0.79%에서 2.0%로 높이려는 목표를 제시

(1) 노동시장 개혁

- 노동시장 개혁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노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지원, 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른 고급인력 유치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

- 이를 위해 기존의 고용 유지형 노동정책에서 노동 이동 지원형 노동정책으로 전환하고,
- 청년층·여성층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며, 대기 아동 해소 가속화, 대학 개혁, 글로벌 인력 양성 강화, 외국인재의 활용 확대 등을 추진
-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확충하고, 제조업·간병·가사도우미 등 세 분야에서 외국인의 일본 현지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 아베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노동 시간, 파견근로자 등에 관한 노동규제 개혁임

-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 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정 정규직¹⁾’의 확산을 유도
 - 아베정부는 일본식 정규직 제도의 개혁방안으로 ‘한정 정규직’에 주목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 정규직도 한정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미국·유럽식의 고용형태로 점차 이행한다는 계획
- 노동시간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과로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탄력근무제 청산기간의 연장, 재량노동제²⁾ 확대, 화이트칼라 면제제도³⁾ 도입 등을 추진
 - 아베정부는 노동시간 개혁을 통해 기존의 탄력근무제, 재량노동제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처럼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음
- 파견근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노동규제개혁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
 - 아베정부는 2015년 9월 통과된 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 규제를 완화하여 일용·단기 파견을 다시 허용했으며 업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오던 파견기간 제한을 사실상 없애 파견노동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1) 한정 정규직은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보장은 정규직과 동일하나 근무지역과 시간, 직무는 비정규 직처럼 한정적인 고용형태

2) 재량노동제란 기업에서 기획, 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 계약에 따라 일정 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3)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는 업무, 수입 등에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시간 규제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

(2) 기업투자환경 조성

- 아베정부는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국가전략특구지정, TPP체결,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과제들을 추진
 -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가까운 미래에 20%대로 인하함으로써 설비투자 확충을 통한 장기 안정적 성장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일본의 법인실효세율(2013년 35.64%, 도쿄도 기준)은 제조업 최대경쟁국인 독일(29.66%)은 물론 아시아 주요국인 중국(25.00%), 한국(24.20%), 싱가포르(20.00%) 등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
 - 국가전략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완화, 해외투자 유치, 전략거점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
 - 국가전략특구 지정은 역대 일본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총리 주도하에 중앙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임

- 아베정부는 TPP를 활용하여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강화, 국제경쟁력이 취약했던 부문의 암반규제 개혁, 역내 경제권에서의 경제적 영향력 회복 등을 기대
 - 일본은 2015년 10월 5일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참여한 TPP협정을 타결함으로써 세계GDP의 36%, 교역규모 26%를 차지하는 최대 자유무역경제권을 확보
 -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출확대와 소비증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그동안 국제경쟁력이 취약했던 농업, 노동 등 분야에서의 암반규제개혁을 좀 더 손쉽게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음
 -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에 밀려 FTA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어온 것을 만회하고 주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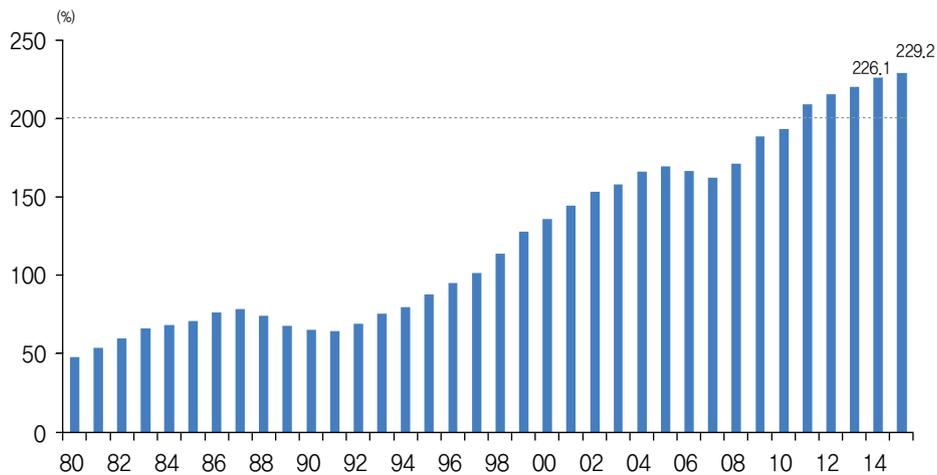
-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내 모노즈쿠리 기반 정비, 디지털화에 의한 변혁에 대응, 인재 육성, 수익력 향상 등을 제시

- 모노즈쿠리(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일본 특유의 제조문화를 의미) 기반정비를 위해 법인세 인하, FTA추진, 에너지 비용 상승 대응, 환경규제 대응, 임금인상 등이 정책방향으로 제시
- 디지털화에 의한 변혁에 대응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고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생산시스템에 대응하는 전략을 강화하기로 함
- 수익력 향상을 위한 과제로는 사업재편과 협력관계 구축, 신시장 진출, 글로벌 수익획득을 제시

(3) 재정부문개혁

- 일본의 국가채무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세입부진, 경기부양을 위한 반복적인 재정지출 등으로 재정적자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급증
 - 일본의 국가채무비율(명목GDP대비)은 1990년 65.3%에서 2000년 136.1%, 2011년 209.4%, 2015년 229.2%로 급증
 - 이는 장기간의 물가하락과 경기침체로 명목성장률이 마이너스(1998~2008년 기간 중 연평균 -0.6%)를 기록하면서 일반회계 기준 조세수입이 감소(2009년 38.7조엔으로 1990년 60.1조엔의 64% 수준)하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반복적인 재정지출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구조화된 데 기인(2009~2013년 중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조세수입 규모를 상회)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자료: OECD

- 이에 아베정부는 2015년 6월 30일 재정개혁을 위한 3가지 추진 방안(디플레이션 탈출·경제 재생, 세출개혁, 세입개혁)을 발표
 -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재정흑자를 실현하고, 그 이후에는 GDP대비 채무잔액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
 - 중간 목표로 2018년에 GDP 대비 적자비율을 1%로 축소
 - 경제회복과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경제회복이 재정을 건전화시키고, 건전성이 높아진 재정이 다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선순환의 고리 형성 도모.
 - 일본 내각부는 지금처럼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GDP 대비 기초재정적자비율은 2020년에 2.2%를 기록하지만, 아베 정부의 경제·재정재생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1.0%로 개선될 것으로 시산

- 하지만 현재 재정개혁정책으로는 2020년 재정흑자 목표달성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그 이유는 첫째 경제·재정개혁계획이 낙관적인 경제전망(명목경제성장률 3.0% 전제)을 기초로 수립되었으며, 둘째 세출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기 때문임

5. 시사점

- 우리 경제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요인으로 지목되는 엔화가치 급등, 자산가격의 급격한 붕괴와 대규모 금융부실, 경제정책 대응 실패, 막대한 규모의 국가부채 등과 관련해서는 차별성을 보임

-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우려 속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생산성 저하, 서비스산업 후진성,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에서는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유사

- 이 같은 우리경제가 처한 환경에서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과 특성, 경제 정책 대응실패의 경험, 현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과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음
-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통화당국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절한 처방이 중요하며,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의 하향 고착화를 경계할 필요
 - 일본 중앙은행은 경기침체기간 중에도 낙관적 경제전망으로 일관하여 잘못된 정책처방과 정책타이밍을 실기해 장기 디플레이션을 방지하는 데 실패함
 -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등 경제구조변화 가능성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
 -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향 고착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표 준수 의지를 분명히 전달할 필요
-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단기적 경기부양 차원의 재량적 재정지출확대를 지양하고 인구구조변화, 사회보장 지출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노력을 지속할 필요
 -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일본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노동력 감소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와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건전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실현 가능한 경제성장 전망이 바탕이 되어야 함.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기초로 작성된 재정건전화 계획은 과도한 세출 및 세입계획을 포함하게 되어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
 - 둘째, 재정건전화 정책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추진 로드맵의 제시, 재정수입 및 지출구조 변화에 대한 예상 등의 정보가 투명하게 사전에 공표될 필요

- 셋째,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이 필요할 경우에도 투자수요와 적절히 매칭되어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이중구조와 격차 해소,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특히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고용보호 수준을 충분히 완화할 필요
 - 향후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 등을 통한 고령자 인적자원의 활용,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외국 근로자의 적극적 활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아베정부의 구조개혁을 통해 중장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구체적 추진 과제인 국가전략특구 지정, 제조업경쟁력 강화 노력 등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을 참고할 필요
- 아베정부의 국가전략특구 지정은 핵심 성장전략 중 하나로 규제완화, 해외 투자 유치, 전략거점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계획
 - 국가전략특구는 총리주도하에 범 정부차원의 협업으로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2차 국가전략특구 지정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미래 신성장산업을 선정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
 - 우리나라도 ‘지역특화발전특구’, ‘R&D특구’ 등 다양한 특구제도가 시행중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만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
 - 일본은 4차 산업혁명인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분야에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들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음
 - 지방의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인재확보와 육성, 제품개발 및 생산, 글로벌 진출에 이르는 과정을 정책패키지로 지원

- 한편 대외교역 측면에서, 일본의 TPP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익극대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TPP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TPP는 다자간 FTA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통상규범을 제시하고 글로벌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파급효과가 크며, 관세철폐 품목비중의 자유화율이 높아 양자 FTA의 경제적 효과를 뛰어넘는 것으로 분석

- 일본정부는 산업 내 및 산업 간 활발한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정부도 산업구조조정을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펼치는 등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
 - 일본은 민간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하에 과잉투자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
 - 일본의 사업재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대일본 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에의 심각한 타격과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
 - 따라서 우리정부도 경쟁력이 약화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경쟁력과 경제체질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차 례

I. 서론 / 1	
II. 일본 장기침체 진행과정 / 4	
1. 버블발생과 붕괴(1985~1990년)	4
2. 경기침체 장기화(1990~2012년)	9
가. 장기침체기 일본경제의 특징	9
나. 1990년대 진행과정	11
다. 2000년대 진행과정	17
III. 장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 아베정부 이전(1990~2012년) / 20	
1. 통화·재정정책	20
가. 통화정책	20
나. 재정정책	27
2. 구조개혁정책	29
가.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구조적 요인: 생산성 하락	29
나. 2000년대 구조개혁정책의 성과: 고이즈미정부를 중심으로	34
IV. 아베정부의 경제정책(2013~2015년) / 45	
1. 통화·재정정책 추진	45
가. 통화·재정정책의 내용	45
나. 성과	48
다. 새로운 통화정책을 시도하는 일본은행	53
2. 구조개혁 추진	55
가. 노동시장 개혁	57
나. 기업투자환경조성	62
다. 재정부문 개혁	80

V. 요약 및 시사점 / 95

1. 요약	95
2. 시사점	99

부 록 / 103

참고 문헌 / 105

표 차례

[표 1] 1990년 이후 일본 경기침체 진행과정	12
[표 2] 일본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성장률 요인분해	32
[표 3] 고이즈미정부(2001. 4~2006. 9) 4대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	37
[표 4] 일본은행의 양적·질적통화완화정책 내용	45
[표 5] 일본경제 중기(2015~2020년) 성장 전망	56
[표 6] 일본재흥전략의 3대 실천계획의 주요 목표 및 내용	57
[표 7] 일본재흥전략의 노동시장개혁 정책 및 목표	58
[표 8] 일본의 법인실효세율 인하 계획	63
[표 9]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시산	64
[표 10] 일본 특구정책의 시대적 변천	66
[표 11] 6개 전략특구의 목표 및 중점과제	67
[표 12] 2차 국가전략특구의 주요 사업	69
[표 13] 일본 관련 주요 TPP 합의 내용	72
[표 14] 일본의 GDP대비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비중 추이	80
[표 15] 아베정부의 재정개혁정책 방향	87
[표 16] 일본경제연구센터 경제전망	93

그림 차례

[그림 1] 일본 경기침체 과정	4
[그림 2] 엔/달러 환율과 일본주가 추이	5
[그림 3] 일본의 자산가격 추이	8
[그림 4] 일본 가계자산규모 추이	9
[그림 5] 일본 실질GDP와 명목GDP 추이	10
[그림 6] 일본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10
[그림 7] 일본과 주요국의 취업자 수 증가율	11
[그림 8] 일본의 GDP와 국내수요(내수) 성장률 추이	12
[그림 9] 일본의 총고정투자 추이	13
[그림 10] 주요국 명목 총고정투자 추이	14
[그림 11] 일본의 GDP갭과 설비투자	15
[그림 12] 일본의 소비심리 및 민간소비	16
[그림 13] 일본 국내수요 증감의 지출부문별 증감기여도	16
[그림 14] 일본의 명목GDP와 실질GDP 지수 추이	17
[그림 15] 일본의 2000년대 이후 실질GDP 추이	18
[그림 16] 일본의 GDP대비 수출비중 추이	19
[그림 17] 일본은행 기준금리 및 경상수지 비율(GDP 대비) 추이	21
[그림 18] 일본의 국내은행 대출금 추이	22
[그림 19] 일본 실질금리 추이	23
[그림 20] 본원통화 및 M3증가율 추이	27
[그림 21] 일본정부가 추진했던 경기부양용 재정지출 추이	28
[그림 22] 일본의 잠재성장률 추이	30
[그림 23] 일본의 노동생산성 추이	31
[그림 24] 일본의 노동생산성 요인분해	31
[그림 25] 일본의 대분류 업종별 노동생산성 추이	33
[그림 26] 비제조업 노동생산성상승률 요인분해(2001~2010년 연평균)	33
[그림 27] 아베 집권 이후 추진된 본예산과 경기부양용 추경 증가분	46
[그림 28] 2001년 3월 및 2013년 4월 전후 M3증가율 비교	48

[그림 29] 아베정부 출범 전후 엔/달러 환율 추이	49
[그림 30] 아베정부 출범 전후 실질금리 추이	49
[그림 31] 아베정부 출범 전후 주당수익 및 니케이지수 추이	50
[그림 32] 아베정부 출범 전후 일본경제성장률 추이	51
[그림 33] 아베정부 출범 전후 수출과 설비투자 추이	51
[그림 34] 아베정부 출범 전후 민간소비와 실업률 추이	52
[그림 35] 일본의 GDP성장률 시나리오	56
[그림 36] 일본의 1인당 총노동시간 및 비정규직 비중 추이	60
[그림 37] OECD국가의 고용보호지수 비교	61
[그림 38] 주요국의 법인실효세율 비교	62
[그림 39] 일본의 세목별 세수액 추이	65
[그림 40] 주요국의 제조업 비중(GDP대비)	74
[그림 41] 일본 및 선진국 국가부채 추이	80
[그림 42] 일본의 명목GDP성장률과 세수 추이	81
[그림 43] 일본의 3대 주요 세율 추이	82
[그림 44] 일본정부의 일반회계 세출·세입과 재정적자 추이	83
[그림 45] 일본 공채 잔고와 이자율·이자 비용 추이	84
[그림 46] 일본정부의 채무비율 및 공채의존도 비율 추이	84
[그림 47] 일본 세입(일반회계)구조 변동	85
[그림 48] 일본 세출(일반회계)구조 변동	86
[그림 49] 시나리오별 실질GDP성장률(좌)과 명목GDP성장률(우) 비교	89
[그림 50] 시나리오별 기초재정적자 비율(좌)과 공채발행잔액비율(우) 비교	90
[그림 51] IMF 일본 명목경제성장률 전망	91
[그림 52] IMF 세계경제 전망	92
[그림 53] IMF의 일본재정 전망	92

I. 서론

우리 경제가 과거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와 전망에는 이론의 여지가 많다. 일본경제가 1990년대 이후 10년간의 장기침체에 접어든 원인으로 지목되는 엔화가치 급등, 자산가격의 급격한 붕괴와 대규모 금융부실, 반복적인 정책대응 실패, 재정적자 심화와 구조개혁 지연 등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경기부진 양상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내수부진과 수출 의존적 성장구조, 고용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동생산성 저하, 서비스산업의 후진성 등의 요인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일본식의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는 새겨들을 만하다. 특히 장기침체에 빠지기 전의 일본 경제가 보여주었던 역동성을 상기해 보면 이웃 나라의 경험은 우리 경제가 유사한 경로와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것이다.

국내경제는 2011~2014년 중 연평균 3.1%의 부진한 성장세를 보였고 2015년 들어서도 2.6%로 둔화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수출은 세계 금융위기 직전(2006~2007년 중)과 세계 금융위기 직후(2010~2011년 중) 각각 연평균 12.4%, 13.9%가 늘어나며 국내경제 성장세를 주도해왔으나 2012년 이후 부진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요위축과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세가 낮아지면서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매출 부진으로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2010~2011년 중 연평균 14.8% 증가세를 보였던 전산업 매출액증가율(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기준)이 2012~2014년 중 1.4% 증가에 그쳤고, 2015년 1/4분기 들어서는 4.7% 감소했다. 2010년 중 6.7%에 달했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2012년 중 4.6%, 2014년 중 4.3%로 낮아졌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는 중기적으로 3%대 중반을 하회하는 저성장, 2%에 미치지 못하는 저물가, 3%를 하회하는 저금리(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기준)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본 보고서는 먼저 1990년대 시작된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진행 과정에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나타난 특성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는 데서 출발하였다. 엔화 가치 급등에 따른 경기위축과 공격적인 통화정책, 자산 버블 붕괴와 대규모 금융부실, 대규모 재정지출과 재정건전성 악화,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현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음으로는 장기침체 극복을 위해 추진한 아베정부 이전의 통화재정정책과 구조개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통화정책은 1985년 플라자합의에 따른 엔화가치 급등으로 인한 경기위축, 일본 정부가 시도한 경기부양을 위한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자산버블의 발생, 금리 인상으로 인한 버블붕괴와 실물경기 위축으로 묘사되는 2000년대 이전의 통화정책과 그 이후 나타난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에 대응한 제로금리정책 및 양적완화정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재정정책은 자산버블붕괴 이전과 1998년 금융위기 이후의 막대한 공공투자지출과 2000년대의 재정적자 누증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또한 아베정부 이전의 구조개혁의 성과를 개괄하는 장에서는 전통적인 통화·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못한 시기적, 또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다. 이는 현 아베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의 배경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를 위해 2003년부터 독일이 실시한 노동시장 개혁을 중심으로 한 슈뢰더 개혁 프로그램과 각 부문에서의 성과에 대해서도 개괄하여 보았다. 2000년 초반까지 독일경제는 막대한 통일 비용,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 과도한 사회보장지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경제구조 개혁의 지연, 낙후된 산업구조 등의 구조적 문제로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높은 실업률과 재정적자 심화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슈뢰더 구조개혁을 계기로 기업의 경쟁력과 고용 유지 여력을 확보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위기이전보다 늘어나는 가운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세 개의 화살’로 지칭되는 현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는 장에서는 노동시장, 기업투자환경조성, 재정개혁 등의 부문별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은 공격적인 양적 완화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일시적으로 경기를 호전시킬 수 있으나,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만이 과거의 저성장 추세로부터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책과 병행하여 구조개혁에 중점을 둔 생산성 제고정책(규제개혁, 노

동시장개혁, 재정재건, 로봇산업 혁명, 서비스산업 육성 등)으로 중장기적인 성장률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성장전략을 통해 향후 10년간 평균 명목 GDP성장률 3%, 실질GDP성장률 2%와 10년 후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GNI)을 150만엔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총요소생산성 제고로 2015~2020년 중 연 평균 경제성장률을 0.79%에서 2.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베정부의 구조개혁의 내용을 주요 부문별로 정리함과 동시에 개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이 우리나라의 통화·재정정책, 노동시장 개혁, 제조업 경쟁력 제고, 재정건전성 유지 등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았다.

II. 일본 장기침체 진행과정

1. 버블발생과 붕괴(1985~1990년)

일본경제는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버블의 형성과 붕괴를 겪으며 경기침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일본 경기침체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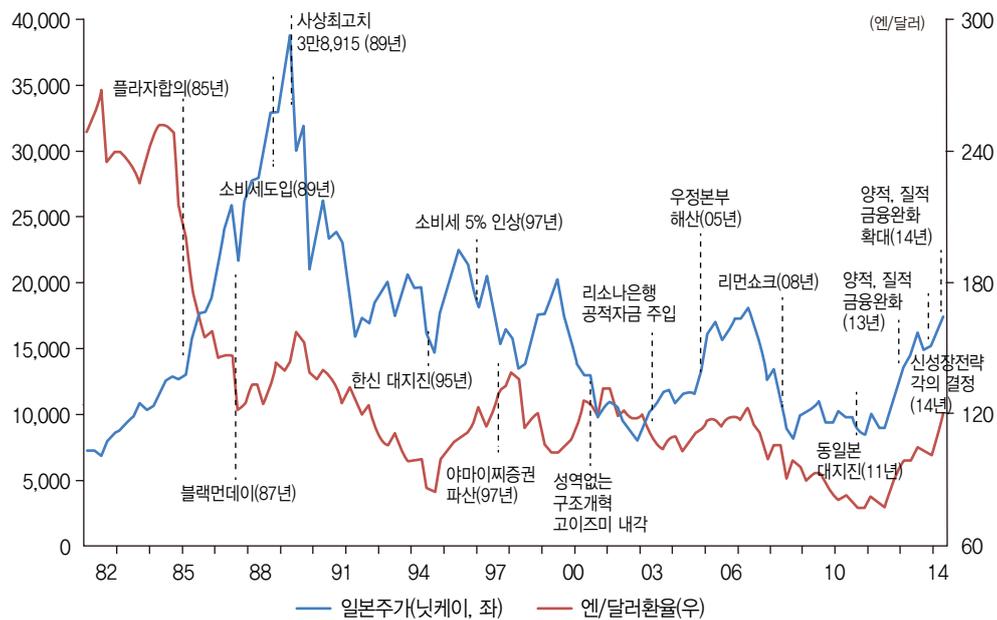


자료: IMF

1990년 이후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은 1985년 플라자합의에 따른 엔화가치 상승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은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 일본 제조업의 품질경쟁력이 높아지면서 1973~1985년 중 순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38.4%(1980~1985년 중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1.5%p)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이 1981년 0.4%에서 1985년에 3.7%까지 높아졌다. 반면 미국경제는 수출품의 품질경쟁력 약화와 달러화 강세 등으로 무역적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반면 일본과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크게 증가하는 등 세계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자 원활한 불균형 조정을 위해 G5(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국가들은 1985년 9월 플라자합의를 체결하였다. 플라자합의를 통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함에 따라 엔화가치는 1985년말 달러당 238.1엔에서 1988년말 달러당 128.2엔으로 3년 동안 46.2% 절상되었다. 엔화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일본의 총수출물량은 1985년 중 5.3% 증가에서 1986년과 1987년 중 각각 -5.1%, -0.1%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수출환경 악화로 GDP대비 일본의 수출비중도 1985년 14.1%에서 1995년 중 9.1%로 낮아졌다.

[그림 2] 엔/달러 환율과 일본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플라자합의로 엔화 가치가 급등하자 통화당국은 수출부진으로 인한 경기위축을 억제하고 내수부양정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했다. 세계경제 불균형(미국의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 대 일본과 서독의 거대한 무역수지 흑자)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일본은 내수와 수입 확대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 도시재개발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소비확대, 지방채발행 증가 등을 통해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내외수 균형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였다. 일본은행은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1986년 1월 이후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2.5%p)하여 1987년 2월 2.5%까지 내리고 이렇게 낮은 금리수준이 2년 3개월간 지속하여 전후 가장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1985년 중 8.4%가 늘었던 총통화는 1986~1990년 중 연평균 10.4%로 2%p 높아졌다.

이러한 금융완화정책에 힘입어 일본의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주식과 토지를 담보로 가계와 기업에게 대출을 확대하였고 늘어난 유동성은 토지, 주택,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어 자산시장의 버블이 빠르게 형성되었다. 일본경제는 1984~1985년 중 연평균 성장률 5.4%에서 1986년 2.8%로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1987년부터 회복세를 나타내어 1987~1990년 중 연평균 5.6%의 고성장국면을 유지하였다. 또한, 1985년 중 5.3% 증가했던 총수출물량이 엔고의 영향으로 1986년과 1987년 중 연평균 -2.6%로 일시 부진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여건 개선¹⁾과 일본 제조업의 품질 및 기술 경쟁력 제고 등으로 1987~1990년 중 연평균 5.8%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기업들은 비용을 절감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제품의 고급화(차별화)와 다양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갔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985년 중 12조엔, 1986~1989년 중 연평균 11.2조엔, 1989~1991년 중 연평균 8.1조엔으로 일본정부가 당초 우려했던 경상수지 흑자 예상치보다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경제호황과 금융완화정책으로 일본주가는 1989년 말 기준으로 플라자합의 이전인 1984년 말 대비 237.1%(니케이 225 기준)상승하였다. 1985년 말 35.2배였던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주당 순익)이 1989년 말에는 70.6배에 달했다. 동기간 중 지가(시가지 가격 기준)는 66.1% 상승했다. 국민총자산 규모는 1984년 4,007조엔에서 1990년말 7,937조엔으로 98.1% 증가했다. 이는 당시 일본 GDP규모에 비해

1) 이 당시에 글로벌 물가하락세로 인한 국제금리 하락과 국제유가 하락이 세계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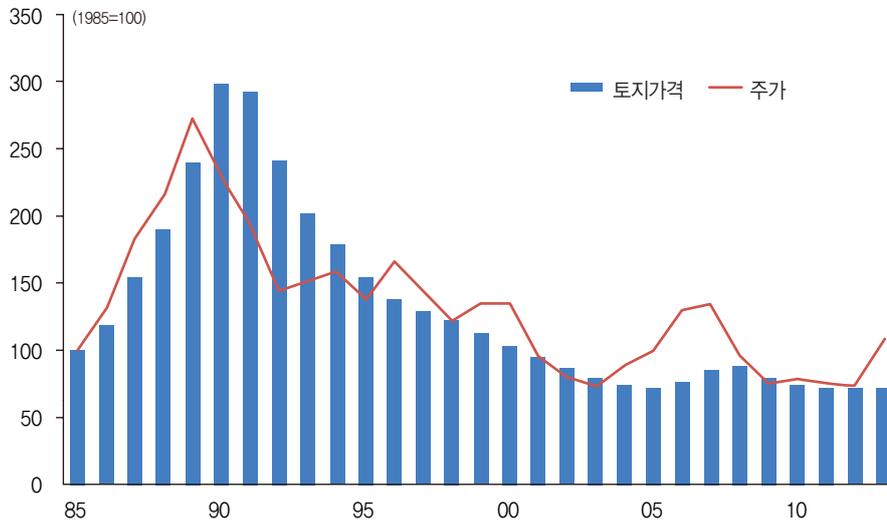
17.7배나 많은 것으로, 1980년대 후반 들어 일본경제의 자산화가 빠르게 진행된 결과이다. 일본경제의 자산화는 장기간의 고성장과 저축 증가 등에 기인한 바도 있으나, 1980년대 후반에 발생한 자산가치의 급격한 상승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중 야기된 자산가치 급상승이 일본의 소비, 투자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일본경제 대호황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내수급증으로 일본경제가 과열되면서 자산버블과 물가상승이 나타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일본 금융당국은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등의 긴축조치들을 실시하였다. 일본은행은 1989년 5월부터 1990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3.5%p의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1990년 8월에 기준금리가 6% 수준에 달했다. 긴축정책으로 인해 총통화 증가율은 1990년 중 11.7%에서 1991년 중 3.6%, 1992년 중 0.6%, 1993년 중 1.1%로 빠르게 둔화되었다. 금리인상과 더불어 공공주택토지 개발공사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관련 대출을 일정 규모로 규제하는 대출총량규제를 실시하여 부동산 관련 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 강화조치의 충격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자²⁾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행은 1991년 8월부터 1993년 10월까지 기준금리를 6.0%에서 1.75%까지 인하하였다.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지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현재까지 하락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리인상, 대출규제로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폭락하면서 일본경제는 침체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말 3만 8,000선대인 니케이주가는 1990년 4월 2만 9,000선 대로 폭락하였고, 1990년 10월 일시적으로 2만선 수준이 붕괴되었다. 이에 따라 동경주가(1부)시가총액이 1989년말 5,909억엔에서 1992년말 2,810억엔으로 동기간 중 52.5% 감소했다. 시가지 지가지수는 1990년말(147.8)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말(50.5)에는 1990년말 대비 65.8%가 떨어졌다. 자산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부동산가격과 주가는 버블붕괴 이전(1990년)의 고점을 단 한번도 넘어서지 못한 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 GDP성장률 1990년 5.6% → 1991년 3.3%

[그림 3] 일본의 자산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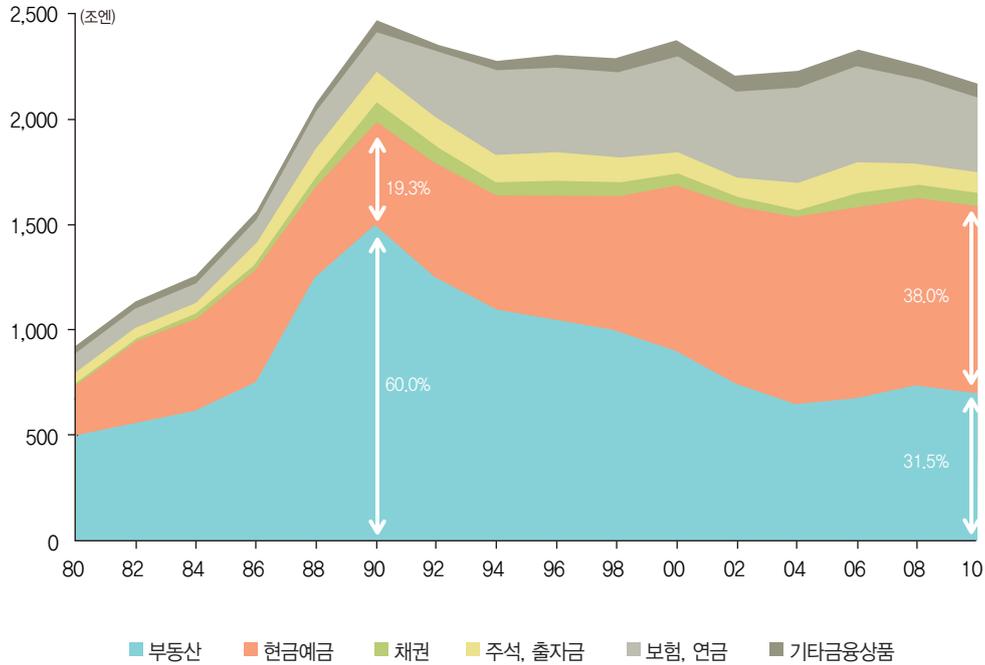
자료: 일본 내각부

자산가격 하락으로 일본의 국부³⁾가 1990년 3,531조엔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2년말에 2,987조엔으로 544조엔 감소했다. 특히 일본가계의 자산규모 추이를 보면 부동산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1990년 60.0%였던 부동산 보유비중이 2010년 31.5%까지 하락하였다. 가계는 위험자산 보유대신 안전한 현금과 예금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여 1990년 19.3%였던 현금 및 예금 비중이 2010년 38.0%까지 상승하였다.

주가와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민간 경제주체들의 순자산(자산-부채)이 급속히 축소되자 기업과 가계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내부자금으로 부채규모를 본격적으로 감축했다. 기업들이 부채 상환에 집중하자 장기간 설비투자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등 민간경제주체들의 부채조정으로 일본의 내수경기가 빠르게 위축되었다.

3) 국가 순자산으로 토지 등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규모

[그림 4] 일본 가계자산규모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국민경제계산확보”

2. 경기침체 장기화(1990~2012년)

가. 장기침체기 일본경제의 특징

1980년대 후반 형성된 일본경제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경제는 1990년대의 장기 침체기에 진입하였다. 자산버블이 붕괴된 1990년대 초반 이후 일본경제는 저성장·저물가·저고용이 나타나며 경기침체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장기침체기에 나타난 일본경제의 특징으로는 성장률 둔화,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GDP 감소, 고용환경의 악화를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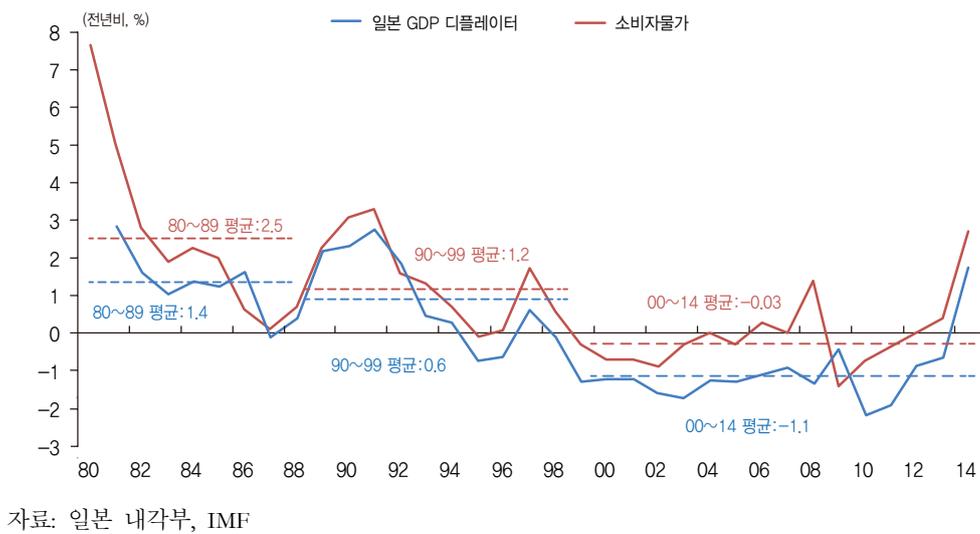
일본의 명목GDP는 1981~1990년 중 연평균 6.2% 성장하였으나, 1991~2014년 중 연평균 0.4% 성장에 그쳤다. 한편 동기간 중 실질GDP는 4.6% 성장에서 0.9% 성장으로 둔화되었다. 명목성장률의 둔화 폭이 큰 것은 실질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림 5] 일본 실질GDP와 명목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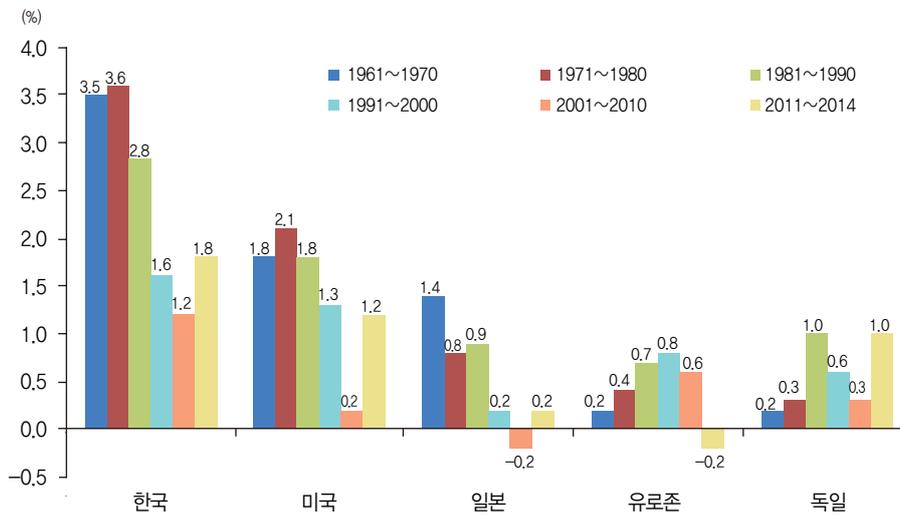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1990년 중반 이후 일본경제는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며 명목GDP가 실질GDP보다 낮은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일본의 GDP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1990년 이후 둔화세를 보인 물가관련 지표가 동아시아 위기 이후(1997년)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2000~2014년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0.03%,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은 -1.1%를 기록하였다.

[그림 6] 일본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저성장·저물가와 더불어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고용환경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1980년대 연평균 0.9% 증가를 보인 일본의 취업자수는 1990년대 0.2%, 2000년대 -0.2%, 2010년대(2011~2014년) 0.2% 증가하는 데 그쳐 1990년대 이후 부진한 모습이다. 한편 1980년대 1.8%의 증가세를 보인 미국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1990년대 1.3%, 2000년대 0.2%, 2010년대(2011~2014년) 1.2%로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0년대 1.6%, 2000년대 1.2%, 2011년 이후 1.8%를 나타내며 일본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7] 일본과 주요국의 취업자 수 증가율



주: 1. 연평균 2. 유로존은 12개국
 3. 독일은 동독 포함 수치
 4. 한국 1961~1970 기간은 통계가 수집되기 시작한 1964~1970의 수치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 통계청

나. 1990년대 진행과정

1990년 버블붕괴 이후 일본 경기침체 진행과정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5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990~1996년 중 일본경제는 버블이 붕괴되며 경기침체에 진입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디플레이션과 내수침체를 겪으며 장기침체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로는 인구고령화 및 2000년 IT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등 반복된 해외경제위기를 경험하며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1990년 이후 일본 경기침체 진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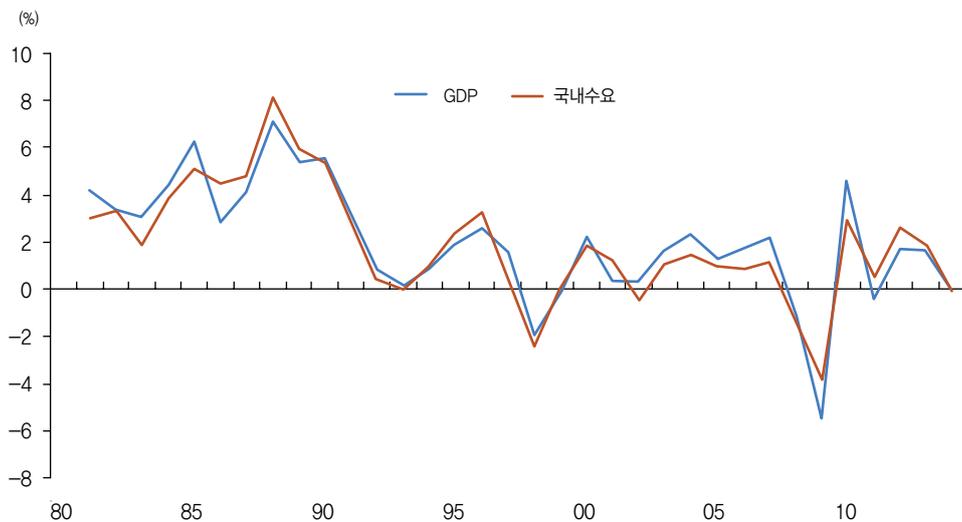
시기	1990~96년	1996~00년	2000~07년	2007~11년	2011~14년
충격요인	주식 및 부동산 버블 붕괴	동아시아 외환위기, 일본은행 도산	글로벌 IT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동북대지진, 유럽재정위기
실질GDP 성장률	5.6% → 0.2%	2.6% → -2.0%	2.3% → -0.3%	2.2% → -5.5%	4.7% → -0.5%

주: 연간실적 최대치 → 최저치

(1) 1990~1996년

1990~1996년은 1980년대 후반 형성된 자산버블이 붕괴되며 주식 및 부동산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경기침체가 시작된 시기로, 동기간 중 경제성장률은 5.6%(1990)에서 0.2%(1993)로 하락하였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내수증가세를 비교해보면 두 지표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강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일본경제의 침체는 내수부문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초반에는 투자부문이 일본의 내수경기 침체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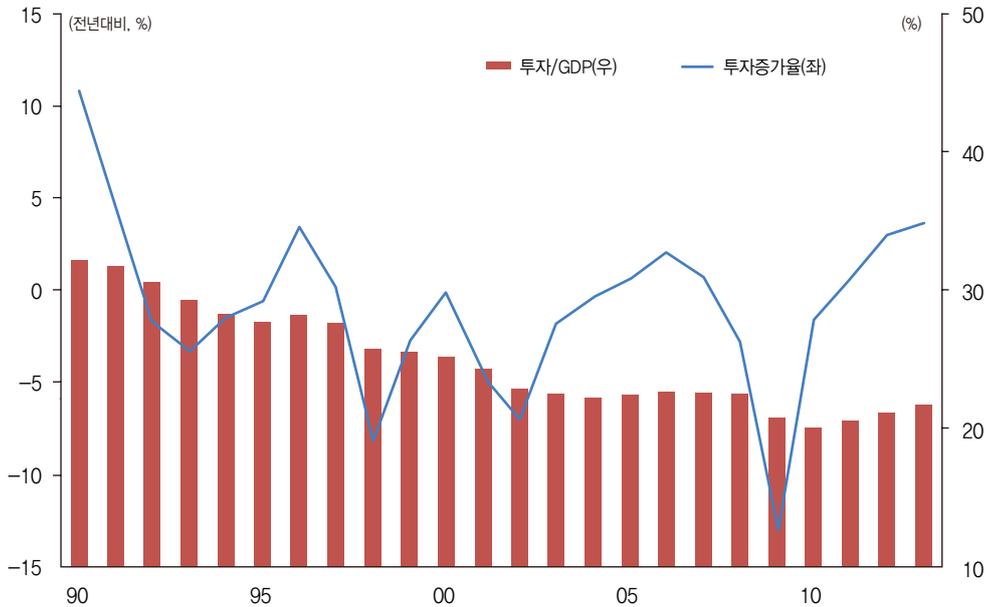
[그림 8] 일본의 GDP와 국내수요(내수) 성장률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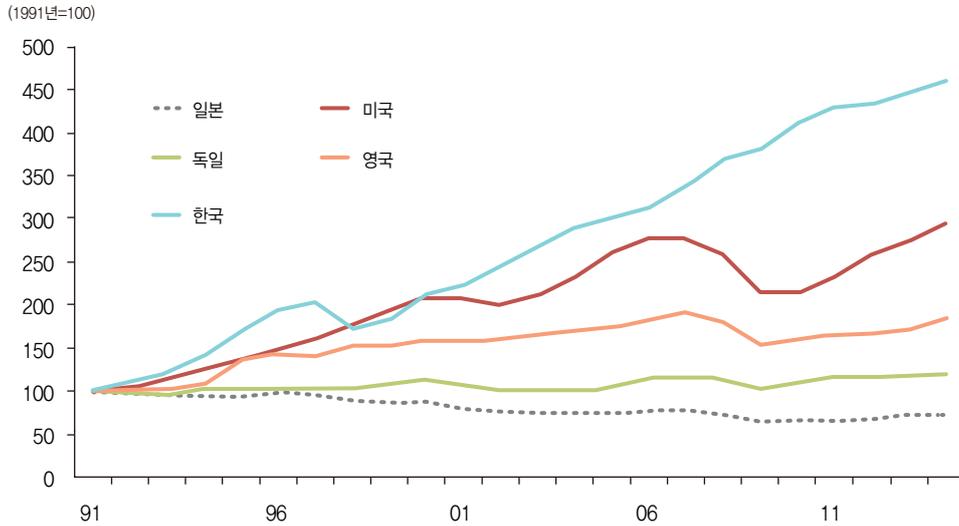
구체적으로는 1988~1990년 중 연평균 14.1% 증가세를 보인 설비투자가 1991~1993년 중 -6.9%로 크게 감소했고, 건설투자는 1986~1988년 중 연평균 13.0%에서 1991~1992년 중 -6.3%로 급감하였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일본의 설비투자는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1991년을 100으로 총고정 투자를 변환하면 일본은 199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71.4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미국, 독일, 영국, 한국은 1991년을 100으로 변환하였을 때, 2014년 각각 294.6, 120.1, 184.2, 459.2를 기록하여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총고정투자가 여타 경쟁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9] 일본의 총고정투자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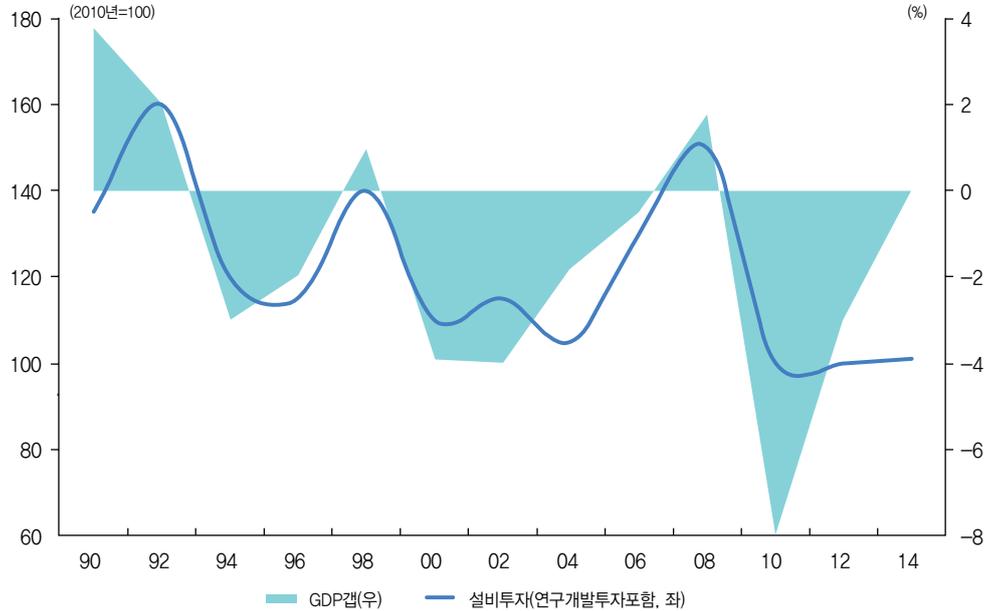
[그림 10] 주요국 명목 총고정투자 추이



자료: Bloomberg

1990년 이후 일본의 투자 부진은 과잉투자(과잉공급)로 인한 설비투자 위축과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기업과 민간부문의 부채조정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990년 이후 일본의 GDP갭(실질GDP - 잠재GDP)이 빠르게 하락하여 마이너스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본 내수가 급격히 하락하여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이 수요량을 상회하는 과잉공급 상태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초반 이후 일본경제가 과잉공급 상태(GDP갭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자 일본의 설비투자도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주가와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민간경제주체들의 순자산(자산 - 부채)이 급속히 축소되자 기업과 가계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기업잉여로 부채규모를 감축하는 등 부채조정을 시작하였다. 기업들은 내부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집중함으로써 장기간 설비투자가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림 11] 일본의 GDP갭과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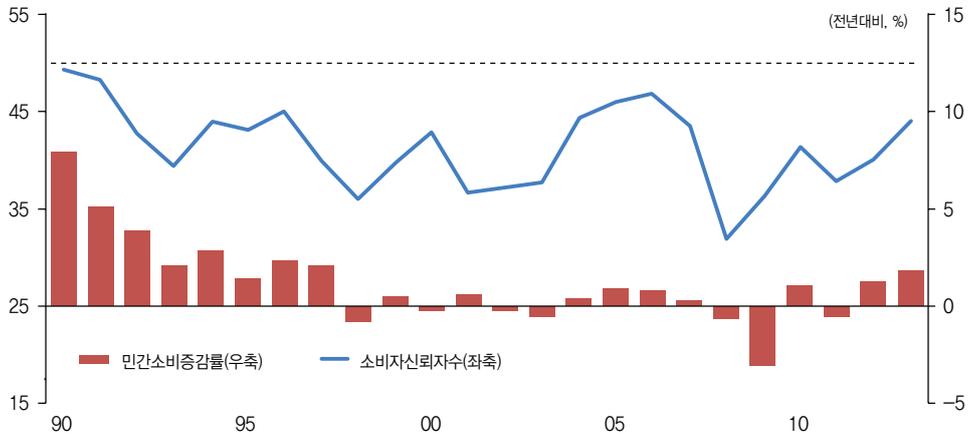


주: 1. 설비투자는 법인기업통계(명목)의 4분기 이동평균
 2. GDP갭=(실제GDP-잠재GDP)/잠재GDP
 자료: 재무성, 내각부

(2) 1996~2000년

1996년부터는 버블붕괴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시점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부진이 나타난 시기이다. 또한 디플레이션이 가시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1995년 고베대지진으로 일본경제가 재건축수 등을 누리면서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며 1996년 실질성장률은 2.6%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진입하였다고 판단하여 정부지출을 축소하고 1997년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외환위기와 금융기관 부실이 이어지며 다시 경기가 둔화되어 1998년 경제성장률이 -2.0%로 전후 최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로는 민간소비가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이는 등 내수부진이 장기간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소비둔화는 최근까지 지속되며 1997년부터(아시아 외환위기) 2000년(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일본의 민간소비증가율은 연평균 0.8%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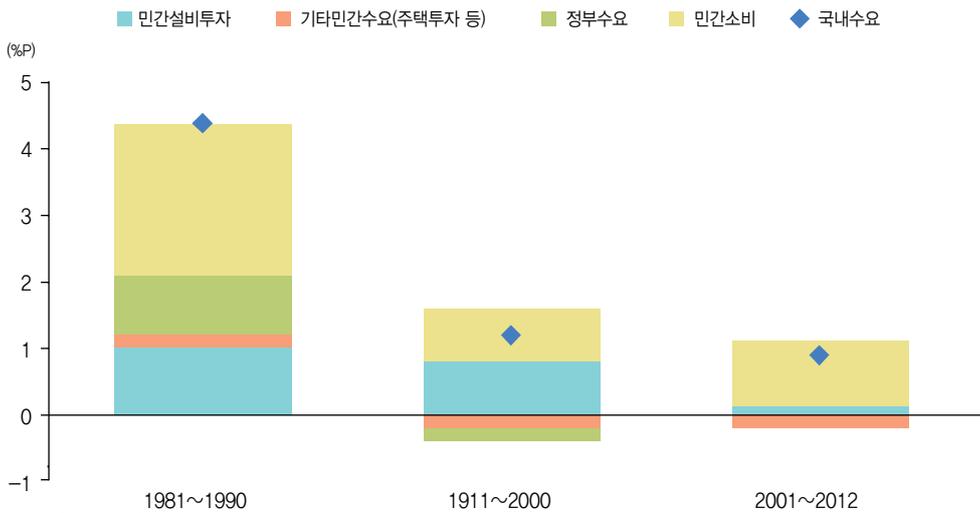
[그림 12] 일본의 소비심리 및 민간소비



자료: 일본 내각부

한편 1980년대(1981~1990년)와 1990년대(1991~2000년) 일본의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를 보면 1990년대 들어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내수부진이 소비부진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시기에 나타난 일본의 소비부진은 무엇보다도 일자리창출 지연과 임금둔화 등에 따른 피용자보수 둔화,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역자산 효과 등에 기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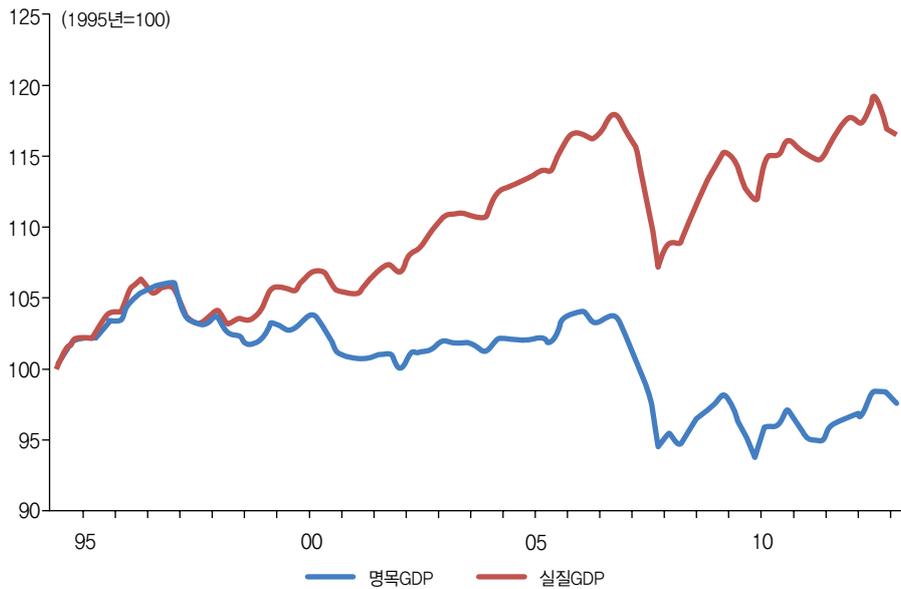
[그림 13] 일본 국내수요 증감의 지출부문별 증감기여도



자료: 일본 내각부

또한, 이 시기에는 버블붕괴 이후 GDP디플레이터가 하락하며 실질GDP보다 명목GDP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에 머무르기 시작하였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GDP디플레이터가 하락세를 보이자 1997년 이후 명목GDP규모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1970년 중 77조엔이었던 명목GDP가 1980년 중 252조엔, 1990년 중 457조엔으로 급격히 늘었다(5.9배 증가). 그러나 명목GDP는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1997년(523.5조엔)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4년 중 487.6조엔(1997년 대비 6.9% 감소)에 그쳤다. 물가하락과 저성장으로 일본의 명목GDP 수준은 회복세를 보인 반면 미국은 동기간 중 2.0배(1997년 8조 6,085억 달러 → 2014년 17조 3,481억 달러)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디플레이션으로 일본의 명목지표들이 여타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극히 부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 일본의 명목GDP와 실질GDP 지수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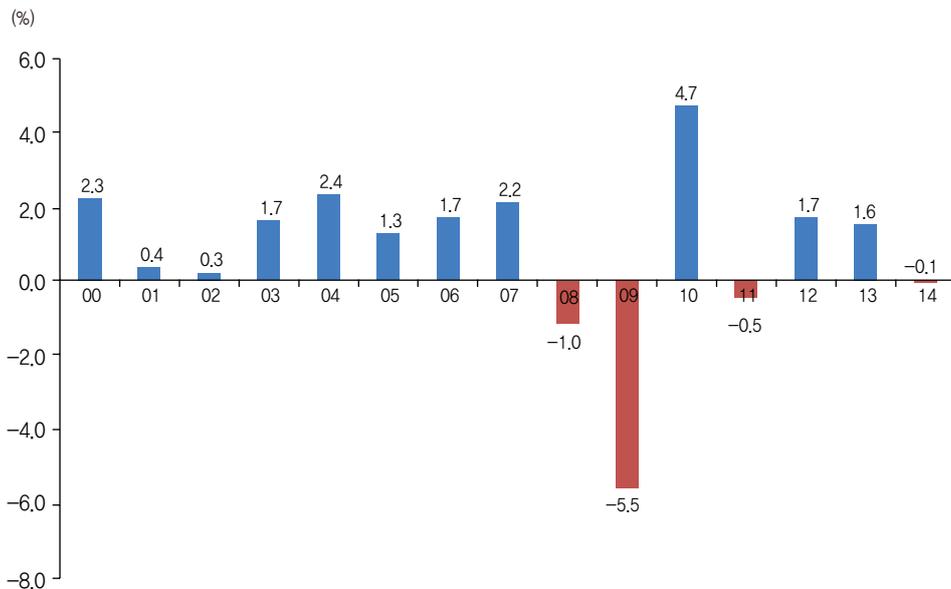
다. 2000년대 진행과정

2000년대 초반 IT버블 붕괴 및 미국경제 악화로 일본경제는 다시 침체기로 들어서며 2000년 2.3%였던 성장률이 2001년 0.4%로 하락하였다. 이에 2001년 고이즈미정부

는 경제의 공급측면에 주목한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고이즈미정부는 공공개혁, 금융개혁, 규제개혁과 민영화 등 과감한 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행정기구 축소·개편, 국가자산 매각(10년 간 1/2수준으로 감축), 국가채무상환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재정정책의 방향을 경기부양에서 재정건전화로 전환하였다. 부실채권 처리와 정책금융 축소를 위하여 국영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였고,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각종 규제 철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설비투자를 촉진 시키고자 하였다. 최저 자본금 규제 철폐, 유한책임사업조합 도입, 출자이익에 대한 비과세 등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 지역의 투자 규제 등 기업활동을 가로 막는 1,000건 이상의 규제를 철폐하였다. 또한 우정 사업을 공사화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자금(우편저금 360조엔)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전환되도록 하여 금융 및 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2003년 이후 고이즈미 개혁과 세계경제 회복으로 일본경제도 활기를 보였다. 2003~2007년 중 일본의 실질경제성장률은 평균 1.8%로 1997~2002년(0.4% 성장)보다 성장률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림 15] 일본의 2000년대 이후 실질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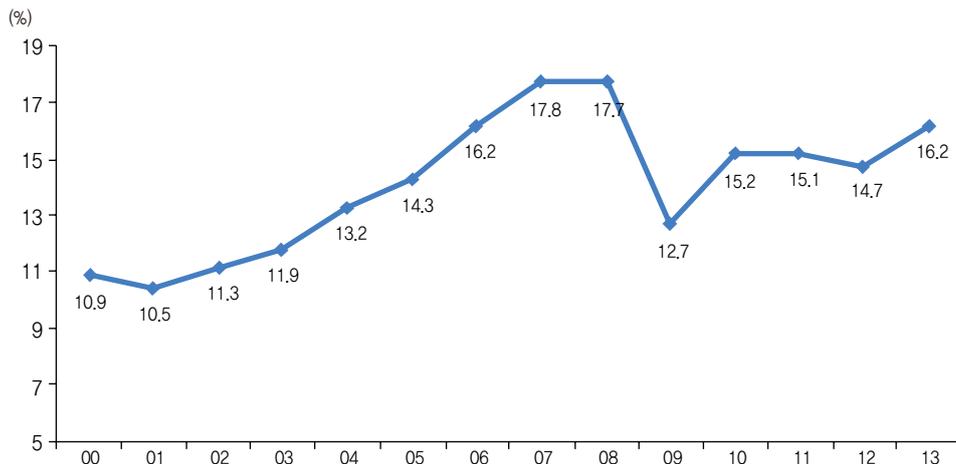


자료: IMF

그러나 고이즈미 이후 5명의 총리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서 개혁의 모멘텀을 이어가지 못하였으며,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경제가 다시 침체를 겪기 시작하였다. 금융위기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일본의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다시 투자와 고용둔화를 가져와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일본경제 전체가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일본의 실질GDP성장률은 2009년 -5.5%까지 하락하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큰 성장률 둔화를 기록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실질GDP성장률이 4.7%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경제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2011년 이후 유럽의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성장세가 다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유럽의 경제위기 및 엔고로 인하여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대내적으로는 엔고, 높은 법인세율, 자유무역협정의 지체, 엄격한 노동규제, 환경규제의 강화, 전력부족 등 이른바 6중고가 일본기업의 경제활동을 압박하였다⁴⁾.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일본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일본의 GDP 대비 수출비중은 2009년 12.7%까지 하락한 이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내수와 수출이 동반부진해지면서 일본경제의 침체양상이 길어졌다. 아베정부가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이전까지 2011, 2012년 중 경제성장률이 각각 -0.5%, 1.7%에 그친 것이다.

[그림 16] 일본의 GDP대비 수출비중 추이



자료: World Bank

4) KIEP,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12-28, 2012

Ⅲ. 장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 아베정부 이전(1990~2012년)

1. 통화·재정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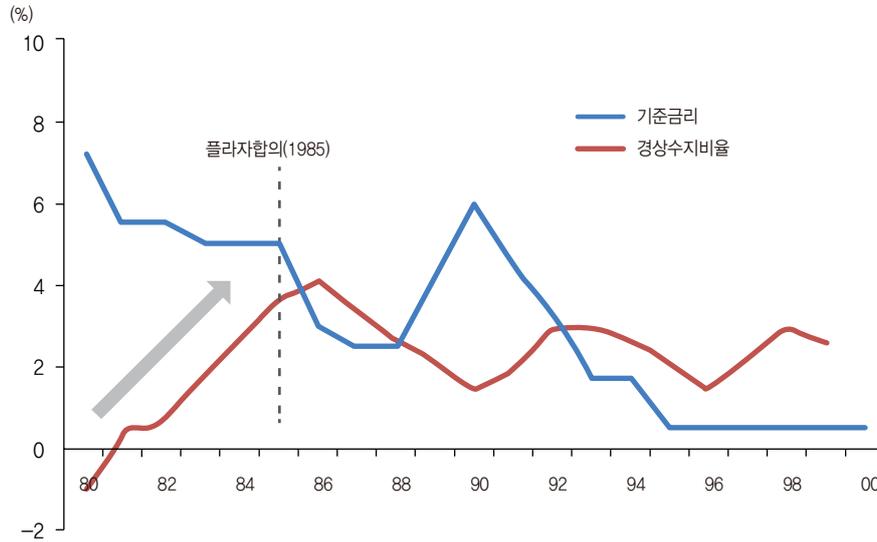
가. 통화정책

(1) 버블붕괴 전후 미흡했던 정책대응

일본의 장기침체가 시작되는 직접적 계기는 자산버블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버블의 붕괴원인으로 1985년 5월 플라자합의 이후 급변하는 경제환경 하에서 드러난 일본은행의 미흡한 대응력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플라자합의 직후부터 일본경제는 급격한 엔고에 직면하였고 이로 인한 대외수출의 타격과 경기침체를 우려한 일본은행은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하였다. 1985년 12월 5%였던 기준금리를 1987년 2월에는 2.5%까지 낮춘 것이다. 실제로 1985년 6.3% 성장했던 일본경제가 1986년에는 엔고의 영향으로 2.8%로 침체되자 경기부양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행의 예상과는 다른 현상이 일어났다. 엔고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되었던 일본의 기업들이 비용절감과 기술혁신을 통해 엔고를 극복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본기업의 경쟁력 회복으로 일본경제도 다시 호조를 보이기 시작하여 경제성장률이 1987년 4.1%, 1988년 7.1%로 상승하였다.

일본은행의 행보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성장률이 회복되면 당연히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를 유지한 것이다. 1987년 2월 2.5%로 낮춘 기준금리를 1989년 4월까지 유지하였다. 저금리를 유지한 이유는 엔화의 강세기조가 계속된 데다 1987년 10월 미국에서 주가가 대폭락했던 블랙먼데이가 발생하자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 일본은행 기준금리 및 경상수지 비율(GDP 대비) 추이



주: 일본은행 기준금리는 기준할인율(공정보합)로 연말기준
 자료: 일본은행

이러한 정책적 판단은 결과적으로 국내 자산버블을 야기하였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저금리 기조가 일본 국내유동성을 팽창시켜 자산가격을 높인 것이다. 주가의 급등이 장기간 계속되자 경기과열을 우려한 일본은행이 두 번째 정책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적기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놓친 일본은행이 뒤늦게 1989년 5월부터 1990년 8월까지 1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6%까지 3.5%p를 인상하였다. 짧은 기간에 지나치게 강한 금융긴축은 결국 자산버블을 붕괴시키고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야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변하는 상황에 적절한 기준금리 조정시점과 강도를 조절하지 못했던 일본은행의 대응능력 부재가 자산버블의 발생과 붕괴에 큰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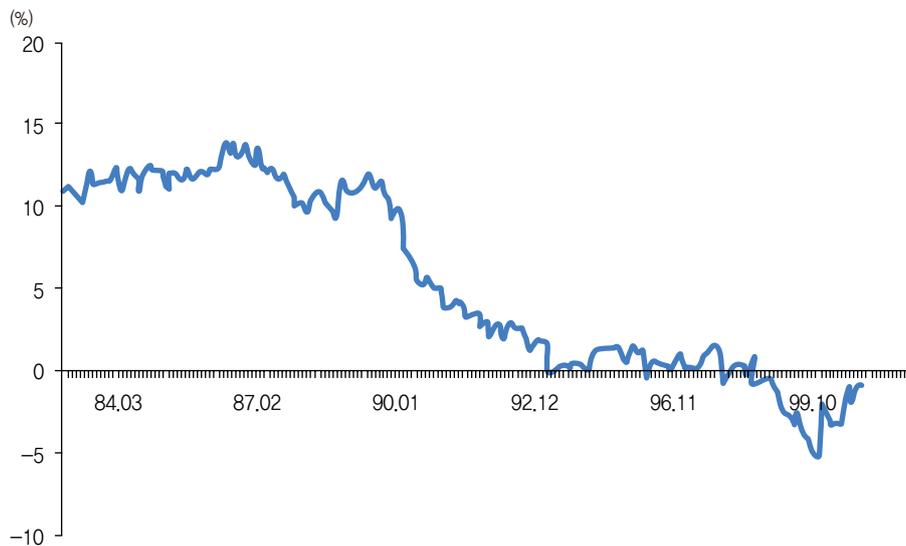
그러면 버블붕괴에 뒤이은 경기하락에 대해 일본은행의 대응은 효과적이었는가? 일본 장기침체에 대응하여 시행된 통화정책은 대부분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경제를 1990년대 1997년까지와 1998~2012년으로 구분하였다. 경기침체의 특성이 1997년 아시아

5) 물론 당시 정부도 부동산융자총량규제(1990년 4월), 지가세(1992년 1월)를 도입하여 자산버블 붕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여 일본은행과 정부가 모두 경기침체 유발에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하겠다.

외환위기 이전과 그 이후에 다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장기불황은 버블 붕괴로 주가 및 자산 가격이 급락하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급증, 기업 재무구조 악화를 동반하여 실물경기가 급격히 침체하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후반 버블형성기에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기업이나 가계에 대해 토지 등 부동산 담보의 시가 이상으로 과도한 대출을 실행하였다. 버블이 붕괴하자 기업과 가계가 과도하게 차입했던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투자 및 소비 등 내수가 위축되었다.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화 및 부실채권 증가는 경제 전반에 자금경색을 일으켜 실물 부문에 재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의 국내은행들은 대차대조표의 부실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출을 대폭 억제하였는데, 1990년 전년대비 10.4% 증가했던 대출증가율이 1993년에는 1.9%에 그쳐 일본의 경기침체의 주요인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불황을 많은 연구에서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림 18] 일본의 국내은행 대출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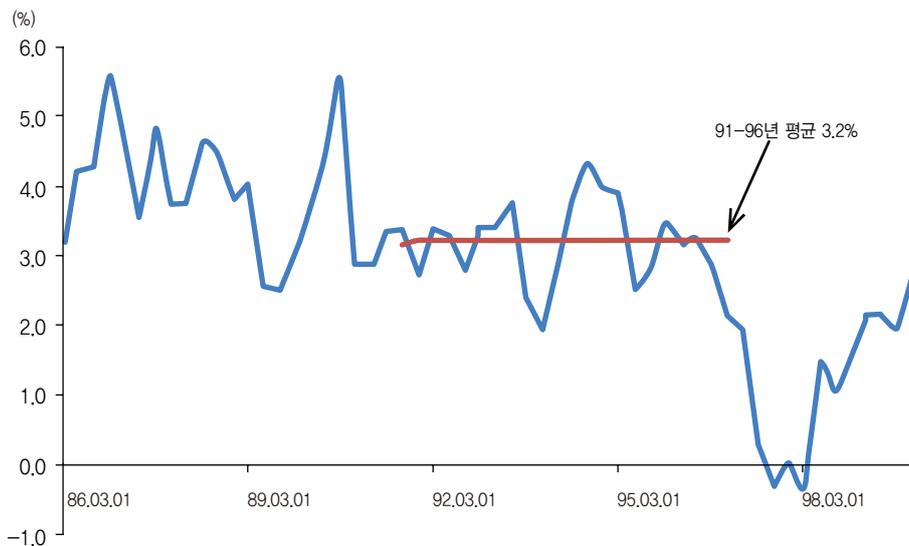


자료: 일본은행

미흡한 통화정책적 대응은 버블형성과 붕괴에서 뿐만 아니라 버블붕괴 후 대처과정에서 반복되었다. 일본은행은 자산가격의 급락에 이어 은행대출 공급이 급격히 축소되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다. 1991년 7월 6.0%이던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여 1995년 9월 0.5%까지 5.5%p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기준금리 하락에 힘입어 시장금리도 하락하였는데 동기간 중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6.52%에서 2.86%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실질금리는 이와는 다른 추이를 보였다. 10년 만기국채수익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차감하여 조정한 실질금리는 3.2% (1991~1996년 평균)를 중심으로 변동하였던 것이다. 1993년 3/4~4/4분기에 실질금리가 2%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1994년에는 다시 반등하여 3/4분기에는 4.3% 내외 수준으로 급등하였다. 이와 같이 명목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가 좀처럼 하락하지 않은 것은 금리인하 만큼 물가상승률도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19] 일본 실질금리 추이



주: 실질금리는 10년만기 국채수익률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차감하여 계산
 자료: 데이터스트림

대차대조표 불황 시에는 금융기관들에게는 부실대출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축소하려는 동기가 커진다. 기업이나 가계도 부채조정을 우선 시 하기 때문에 투자와 가계소비는 위축된다. 이러한 때에는 실질금리를 대폭 낮추고 유동성을 확대하여 금융기관들의 소극적 대출 및 안전자산 선호 성향, 기업과 가계의 부채조정을 완화 시켜야 했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당시에 표면화되었던 경기상황 수준에 맞추어 기

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실질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도하지 못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기부양의 실패요인이 되었다. 즉 보다 과감하고 공격적인 금융 완화정책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일본의 금융시스템이 취약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 자체가 낮았던 점도 경기부양에 실패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시에 크게 증가하고 있었던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금융부실채권의 처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1990년 초 일본의 부동산버블 붕괴로 기업부실이 증가했으나 일본의 상업은행들은 정상 기업에 대한 여신은 축소한 반면 자본적정성 훼손을 우려하여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출기간 연장 및 이자면제 등을 통해 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경기부진이 계속되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증하였는데 1995년 5.9%였던 금융기관 부실채권비율이 2001년에는 9.54%로 상승하였다. 1990년대에는 정부도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소극적이었다. 경기가 회복되면 부동산가격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여 부실채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었던 일본정부는 직접적인 부실채권 처리보다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보강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였다.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금융부문에 체계적 위기가 부각된 1997~1998년에 이르렀을 때이다.⁶⁾ 이처럼 부실채권의 증가와 부실금융기관의 존재가 통화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한 것이다.

(2) 디플레이션경제 하 제로금리와 양적완화정책

1997~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통화정책 여건은 더욱 어려워졌다. 199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3%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장기간 물가가 하락기조(디플레이션)를 보이자 낮은 물가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형성된 것이다. 금리인하 혹은 통화공급은 일정 경로를 통하여 실물경제를 촉진시키게 되는데,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통화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⁷⁾ 예를 들면 장기간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주체의 물가하락 기대가 형성되고,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가 충분히 하락하지 않는다.⁸⁾

6) 1990~1996년 중 19개에 불과했던 금융기관 파산이 1997년 17개, 1998년 30개로 크게 증가하자 일본정부는 1998년 2월 ‘금융기관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법’을 제정하여 21개 은행에 대해 1.8조엔을 투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7) 전통적 통화정책은 금리, 환율, 신용, 자산, 기대 경로를 통하여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2000년대 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소위 ‘유동성함정’에 빠져 이러한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당시 콜금리)를 1999년 2월 0.1%보다 낮추어 제로금리정책을 채택한 데 이어 2001년 3월부터 2006년 3월 중에는 일본으로서는 최초로 양적완화정책을 도입하였다. 2001년 3월 일본은행은 양적완화정책을 발표하면서 핵심적 3가지 항목을 포함하였다.⁹⁾ 첫째, 일본은행은 중간목표를 금리에서 중앙은행 초과지준금으로 변경한다. 둘째, 양적완화정책은 경제상태(state-dependent)에 따라 추진되며 디플레이션이 종료 시까지 실행된다. 셋째, 장기국채를 매입한다는 것이다. 양적완화정책에 따라 일본은행은 장기국채, ABCP 및 ABS, 금융기관 보유 주식, 환매 CP 등 자산을 매입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게 되었는데 경기상황에 따라 공급액을 확대하였다. 장기국채매입은 정책실행 초기 월 4천억엔에서 추후 월 1.2조엔으로 확대하였고, 공개시장조작을 위한 일본은행 당좌예금잔고¹⁰⁾를 4조엔에서 30~35조엔까지 확대하였다.

양적완화정책은 명목금리를 낮추거나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여(즉 실질금리를 낮추어) 경기부양을 도모하는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한다하여도 양적완화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6년 3월 일본은행은 양적완화정책을 중단한다. 또한 2006년 3월 통화정책 중간목표를 다시 금리로 변경하고 공개시장조작용 당좌예금잔고를 줄이기로 한다. 2006년 6월에는 기준금리를 0.1%에서 0.25%로, 12월에는 0.5%로 인상하였다. 이처럼 일본은행이 금융긴축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일본경제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다. 경제성장률이 2003~2005년 연평균 1.8%를 나타내고 2006년 소비자물가가 0.2% 상승하면서 전년 마이너스(-0.3%)상승률에서 벗어나자 일본경제의 회복세를 낙관하였기 때문이다.

8)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는 점 이외에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첫째,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은 노동의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실질임금을 상승시키고, 자연실업률도 높아지게 된다. 둘째,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로 부를 재분배하며 채무자로 하여금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이는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야기하여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재정측면에서는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소득 감소로 납세자의 세율 등급이 점차 하락, 저소득 구간으로 이동시켜 세수입이 감소한다. 또한 국가부채의 실질이자비용을 증대시켜 재정부담이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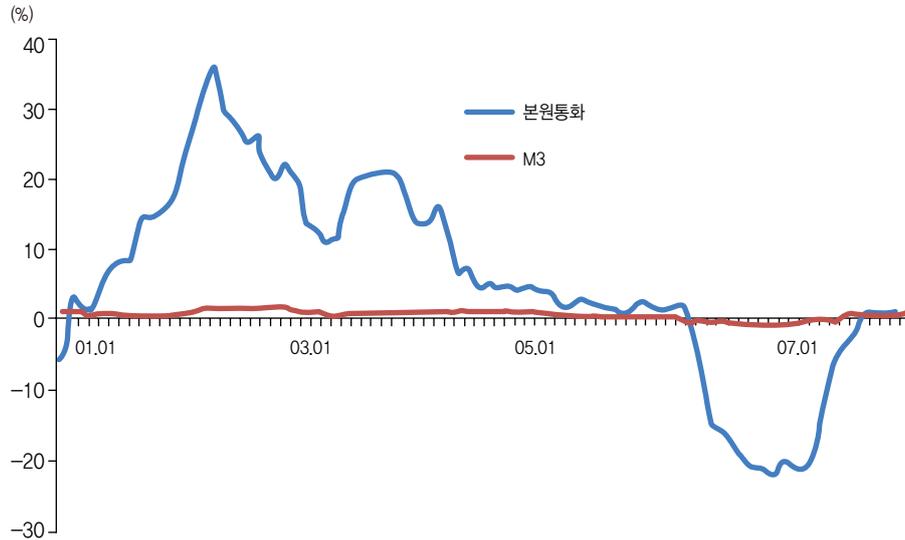
9) Hausman and Wieland(2014)

10) 금융기관들은 콜자금과 국채 거래의 최종결제에 일본은행 당좌예금시스템을 이용한다. 또한 일본은행이 공개시장조작 시, 국채발행 상황에도 당좌예금시스템을 통해 결제한다. 일본은행이 당좌예금잔고를 늘려 민간의 증권과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다.

양적완화정책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통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약화된 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Ugai(2007)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회복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다. 그는 많은 연구들이 제로금리 하에서는 경제주체의 기대를 활용하는 것이 통화정책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던 Krugman(1998)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였다. Krugman(1998)은 일시적인 통화의 공급은 인플레이션 기대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여 정책효과가 적다고 하였다. Hausman and Wieland(2014)는 Krugman(1998)의 주장을 인용하여 2000년대 일본은행 양적완화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하였는데, 당시 경기회복의 징후가 보이면 일본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미 경제주체들이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통화완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인플레이션 기대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2001년부터 본원통화(base money)가 양적완화정책에 따라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광의의 통화인 M3의 반응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일본은행의 통화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는 화폐수요를 늘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화폐수요를 늘리지 않은 것은 지출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지 가계는 예금대신 현금보유량을 늘렸고 금융기관들은 중앙은행 지준예치금을 늘렸을 뿐이다. 이처럼 통화정책이 경제주체의 기대를 변화시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경기부양효과와 경제성장세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일본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을 중단하자 2006년 2/4분기부터 본원통화가 급격히 감소하고 M3도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경제주체가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동아시아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2008년(-0.1%), 2009년(-5.5%) 일본경제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었다. 일본경제가 다시 침체 되자 일본은행은 또 다시 2008년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11월에는 제로금리정책으로 복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충분한 경제적인 부양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적완화 및 제로금리의 중단은 성급한 출구전략이었던 것이다. 이후 일본경제는 2012년 아베정부가 들어서기까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제로금리정책도 유지되었다.

[그림 20] 본원통화 및 M3증가율 추이



주: 본원통화=화폐발행액+지준예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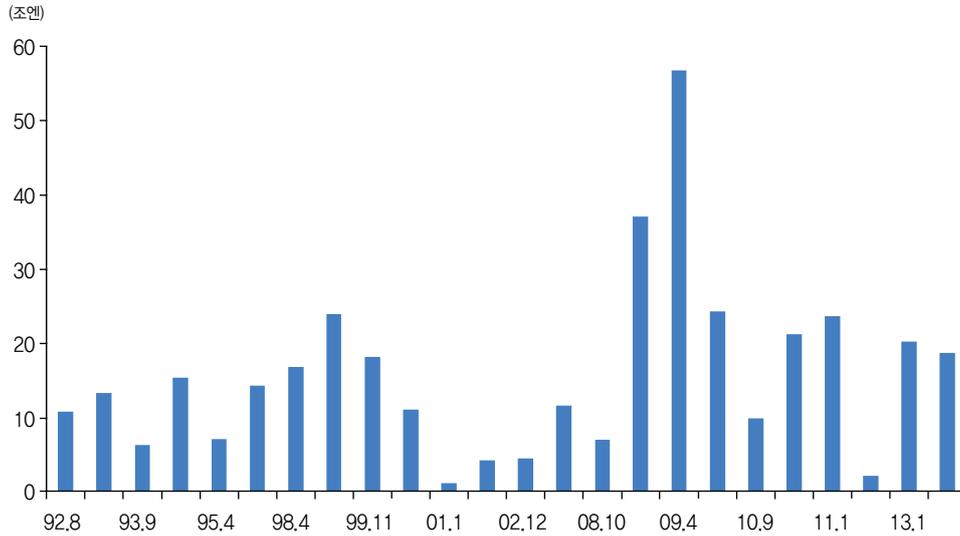
M3 = M1 + 준통화 + CD, 이때 준통화=정기예금+거치적금+ 정기적금 + 외화예금

자료: 일본은행

나. 재정정책

일본정부는 버블붕괴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하여왔다. 1990년대 일본정부는 총 126.3조엔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는데, 경기부양책에는 소득세 등의 감세, 공공투자의 확대, 공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과 같은 금융대책 등을 포괄하였다. 2000년부터 아베정부가 들어서기 전 2012년 10월까지 기간 중에도 213.4조엔에 이르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여 버블붕괴 후 아베 정부 이전까지 경기부양 규모는 2015년 일반회계 예산 96.3조엔의 3.5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대책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경기부양효과는 일시적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일본정부가 추진했던 경기부양용 재정지출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재정지출의 경기부양효과가 적었던 요인은 첫째, 재정지출이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재정승수가 낮은 사회보장 부문, 공공일자리사업, 건설업과 농촌의 공공사업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 대 집권했던 자민당의 정치인들이 재정지출을 배분하는 기관의 대부분을 운영함으로써 전통적인 자민당 지지층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다.¹¹⁾ 이들은 지방 토건업자를 포함한 토호세력의 이익을 위해 공공토목과 같은 사업에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실질 수요와는 배치된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둘째, 1990년대 하락하는 산업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구조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다. 1990년대 일본정부는 일본경제구조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산업의 재편, 공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에 소극적이었다. 고이즈미정부(2001~2006년)가 행정기구 축소, 국영은행의 민영화, 수도권 투자규제 등 규제 철폐·완화를 추진하면서 일부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경기안정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로 부각되자 구조조정이 재정효과를 현저히 개선시킬 정도로 충분히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11) 원중학·전병목(2010)

셋째, 경기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정책적 오판까지 하게 된다. 1995년부터 일본경제는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정부(하시모토 내각)가 1997년 4월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하고, 재정구조개혁법을 추진하여 사회보장비를 비롯한 재정지출을 삭감한다. 그러나 소비세율의 인상은 가계소비 지출을 위축시켰고 때마침 동아시아 위기가 겹치면서 일본경제는 둔화되기 시작, 1998년 -2.0%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었다.

경기부양효과가 크지 않았음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반복하여 추진된 결과 재정적자는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고베대지진(1995.1), 동일본대지진(2011.3), 글로벌 금융위기(2008, 2009)를 극복하는 데 재정이 동원되면서 야기된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해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하여 경제에 부담이 되었다.

2. 구조개혁정책

가.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구조적 요인: 생산성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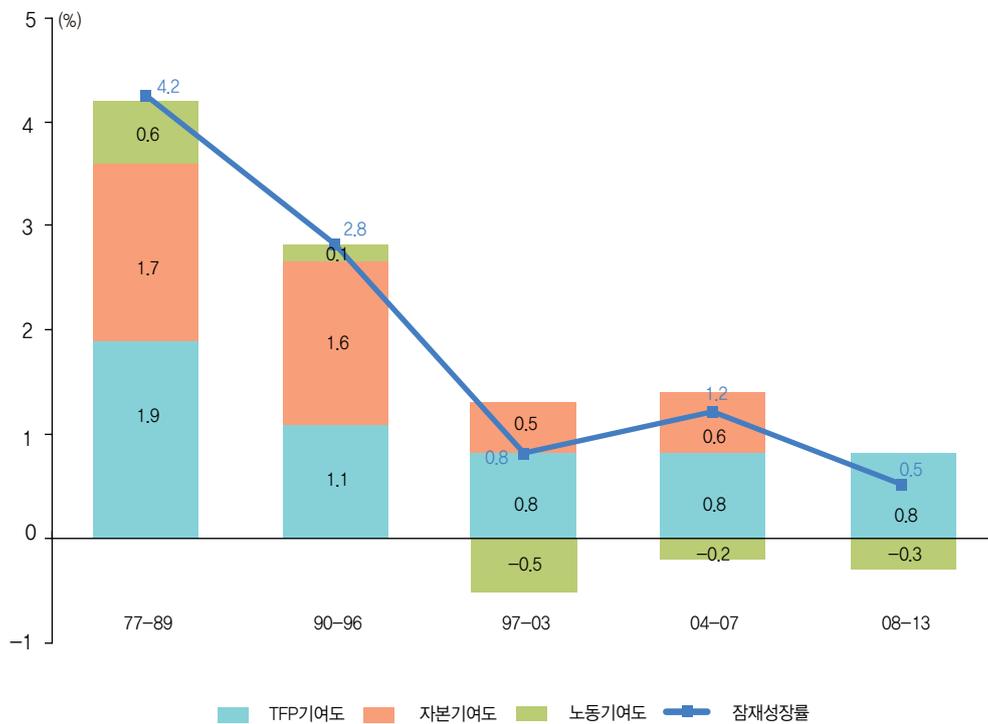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원인은 크게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요인으로 구분되어 설명된다.¹²⁾ 총수요 부진에서 장기침체의 원인을 지적하는 분석 (Krugman(1998); Bernanke(2000); Makin(2001))에서는 경기침체와 함께 나타난 장기간에 걸친 디플레이션을 연관 지워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의 경기침체가 생산성 하락에 따른 공급측면의 요인에서 비롯되었다면 초과수요에 의해 물가수준이 상승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동성 함정, 금융부실, 비효율적인 재정정책 등으로 장기침체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로에 가까운 공격적인 금리인하와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수요가 회복되지 못한 현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공급측면의 요인을 강조하는 분석(Porter et al.(2000); Hayashi and Prescott (2002))에서는 생산성 하락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Hayashi and Prescott(2002)는 1990년대 들어 일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198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간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노동공급이 둔화된 것을 장기침체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12) 박종규(2007)

일본 재무성은 1977~1989년 중 연 평균 1.9%p였던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1990~1996년 중 1.1%p, 1997~2003년 중 0.8%p로 각각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U KLEMS(국제생산성 측정기관)”도 일본GDP의 성장요인 분해 방법을 통해 1990~1994년 중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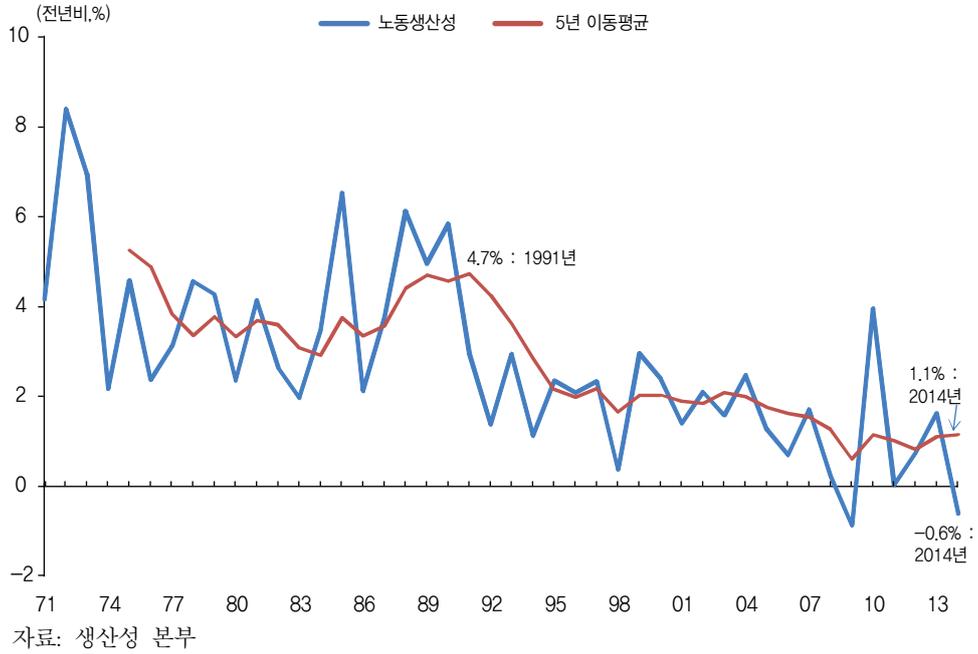
[그림 22] 일본의 잠재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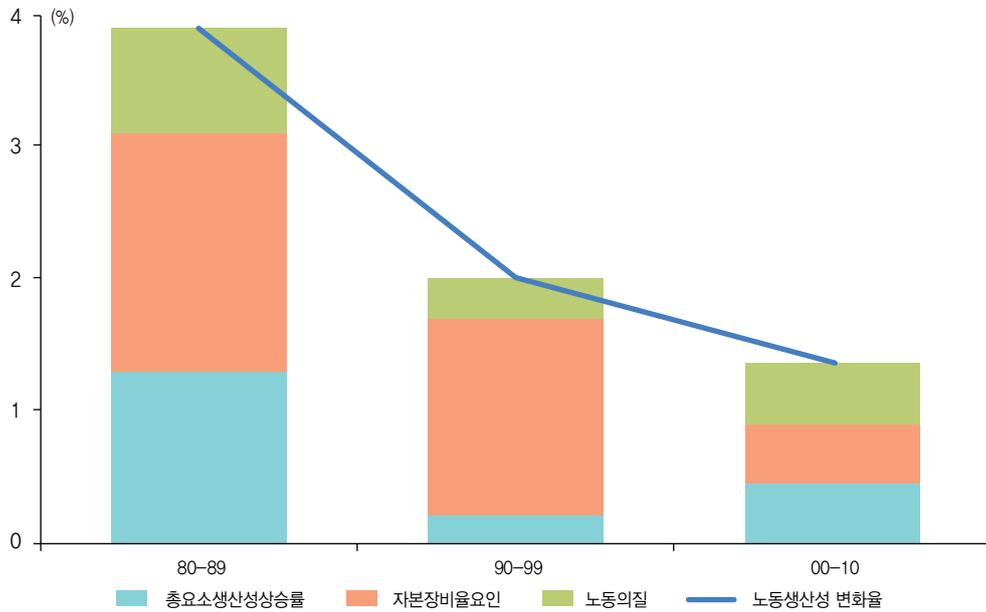
자료: 일본 재무성

1990년 이후 지속된 노동생산성 둔화추세도 일본의 장기경기침체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991년 4.7%였던 노동생산성증가율이 2014년 중 1.1%(5년 이동평균)로 추세적으로 낮아졌다. 일본의 노동생산성이 하락한 것은 무엇보다도 총요소생산성 하락과 노동의 질적수준 개선 둔화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림 23] 일본의 노동생산성 추이



[그림 24] 일본의 노동생산성 요인분해



반면, Porter et al.(2000)은 일본경제의 이중구조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제조업 부문은 치열한 국제시장의 경쟁에 노출되면서 꾸준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으나, 비제조업 부문은 사양산업의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와 관행, 보호정책들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었고 이러한 비효율적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대해지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의하면 은행대출 축소나 부실채권 문제는 장기침체의 근본원인이 아니라 공급측면의 문제로 인해 금융부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제조업백서(2015년 6월)에서 1990년 이후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요인은 제조업 부문의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크게 낮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1980~1990년 중 연평균 3.28%p였던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1990~2000년 중 1.02%p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동기간 중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는 0.72%p에서 1.06%p로 소폭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표 2] 일본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성장률 요인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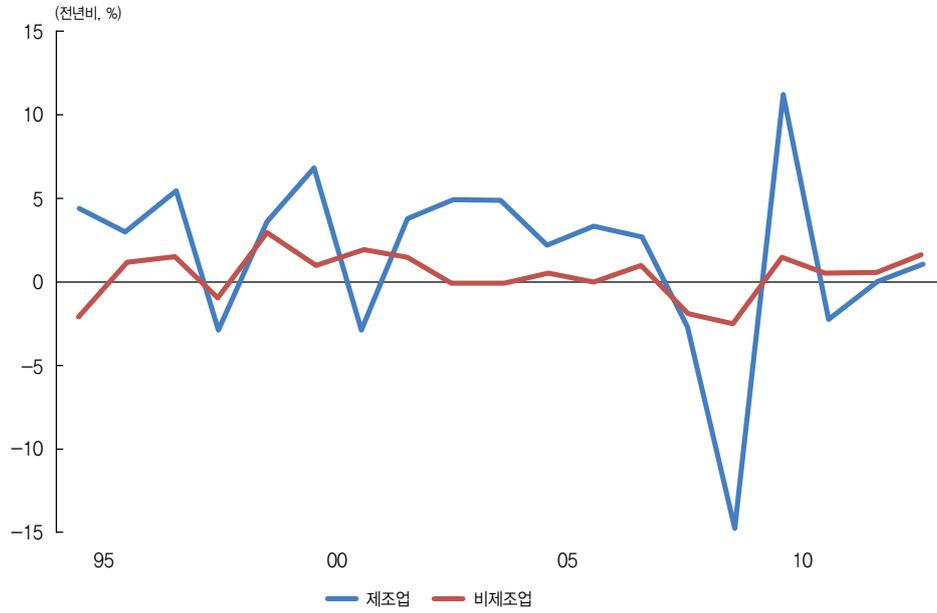
(단위: %)

	제조업				비제조업			
	1970~1980	1980~1990	1990~2000	2000~2011	1970~1980	1980~1990	1990~2000	2000~2011
노동	0.12	1.09	-1.22	-0.87	1.68	1.08	-0.35	0.18
자본	0.77	1.73	0.90	0.38	1.52	1.93	0.31	0.19
총요소 생산성	4.23	3.28	1.02	1.99	1.23	0.72	1.06	0.05
합 계	5.12	6.10	0.70	1.50	4.43	3.73	1.02	0.42

자료: 일본제조업백서(20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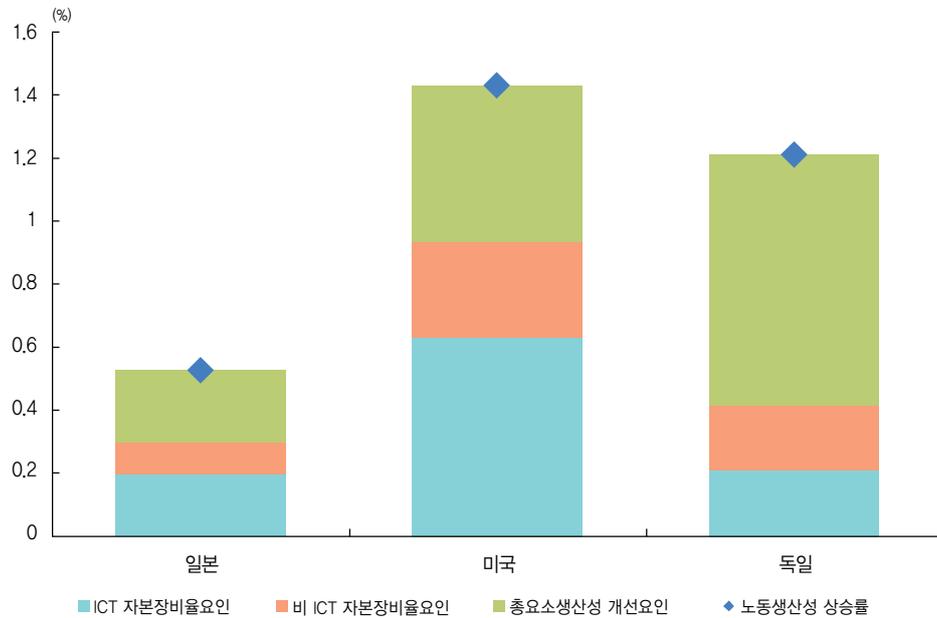
일본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비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타 선진국(특히 미국)과 비교하여 볼 때 일본 비제조업부문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은 정보통신기기 부문의 자본장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5] 일본의 대분류 업종별 노동생산성 추이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그림 26] 비제조업 노동생산성상승률 요인분해(2001~2010년 연평균)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관련하여, 1980년대 후반 형성된 자산가격의 거품 붕괴 이후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진입한 근본 원인으로 생산성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의 실패가 지적된다. 자산가격 거품 붕괴 이후 정책 당국은 일본 경제가 과잉공급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구조개혁 대신 정책금리 인하, 공공투자 확대 등과 같은 전통적인 경기대응책으로 총수요를 부양하여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기부양책은 그 규모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경제주체들이 소비나 투자보다는 부채 조정을 우선시켰기 때문이다. 오히려 잦은 경기부양책은 국가채무 누적으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재정 여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본의 정책 당국은 경제가 과잉공급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을 정리하기보다는 공동 감산으로 대응하는 등 소극적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1990년대 초반에 공적자금 투입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제때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도 부실 채권 문제를 심화시켰다.

금융기관은 거품 붕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의 경영 상태도 정상화돼 부실 부채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부실 기업에 대출 상황을 연기하거나 추가 대출을 실시했다. 1995년 들어 심각성을 깨달은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을 줄이기 시작했으나 뒤늦은 대응으로 부실 부채가 크게 누적되어 2000년대 중반까지 부채를 축소하는 디레버리징을 진행해야 했다. 기업은 은행의 느슨한 신용심사 및 대출 확대 방침 속에서 긴박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생산설비 폐기 등의 생산성 제고 노력을 상당 기간 본격화하지 않아 공급과잉 상태가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됐다. 이 같은 부실 기업의 지속 등으로 경제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1990년대 중반부터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나. 2000년대 구조개혁정책의 성과: 고이즈미정부를 중심으로

2001년 출범한 고이즈미정부는 ‘성역 없는 구조개혁’이라는 정책목표를 표방하고 이후 5년간 금융부실 해소, 재정건전화, 연금제도 개혁 및 체신사업과 도로공단의 민영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고이즈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금융개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기부양책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이즈미정부는 2001년 4월 출범 당시부터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 요인이 부실채권 처리 지연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금융 개혁과 부실채권의 조기 처리문제를 하나로 묶어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2년 10월부터 금융청의 ‘금융기관 재생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꾸준히 처리한 결과 부실채권비율은 2001년 8.4%에서 2005년 2.4%로 축소되었다. 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지원 확대 및 산업재생기구를 활용한 기업재생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금융·산업의 재생을 도모하였다. 전체적으로, 금융개혁 시나리오는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업적 관련 수치 목표를 설정하며, 그 수치에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업무개선조치와 같은 책임을 은행경영자에게 물었다고 할 수 있다.

고이즈미정부는 재정정책 방향을 경기부양에서 재정 건전화로 전환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채 신규발행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재정 재건과 지방분권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중앙·지방 정부에 대한 세제 및 재정 개혁을 본격화하는 삼위일체(三位一體)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2년 1월 고이즈미 총리가 공약한 ‘신규국채 발행액 30조엔 상한목표’에 따라 2006년도 예산안에서는 국채의 신규발행을 29조 9,730억엔으로 억제하였다.¹³⁾ 삼위일체 개혁은 재정 재건을 위한 세출 삭감의 일환으로써,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분배하는 지방특별교부금 및 지방교부세를 삭감(약 4조엔)하는 동시에, 일부 세원을 지방세로 이전, 지방정부의 세입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¹⁴⁾

고이즈미정부의 우정사업 민영화는 일본의 금융, 재정, 행정 및 사회시스템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핵심적인 개혁조치로 메이지유신 이래 가장 큰 개혁으로 지칭되어졌다. 우편사업은 민간기업의 택배 등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우체국 지점망을 바탕으로 예금 및 보험을 통해 막대한 금융자산이 집중¹⁵⁾되고 있었으나 자금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과거 1997년 하시모토 행정개혁의 초안에서 우정사업을 3사업으로 분리하여 보험은 민영화, 예금은 민영화 준비, 우편은 국영으로 분할하여 민영화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결국 기득권층의 반대로 우정 3사업을 국영공사로 유지한 채 직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으로 한다는 최종안이 채택되면서 민영화 추진이 좌절되었다.

13) 신규국채발행액 추이 : 2002년도 30조엔 → 2003년도 36.4조엔 → 2004년도 36.5조엔 → 2005년도 34.3조엔 → 2006년도 29.9조엔

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3)

15) 일본 개인금융자산의 1/4을 초과하는 약 360조엔(예금 235조엔, 보험 124조엔)을 보유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고이즈미정부는 우정공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사업별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였다. 민영화 추진의 목표는 정부기관(우정사업청)에서 우편, 예금, 보험 3개 사업을 동시에 취급하면서 나타나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사업별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영화가 달성되면 350조엔(개인금융총자산의 25%)에 달하는 우편금융 자금이 민간 금융시스템으로 이행하고, 27만명(국가공무원총수의 28%)의 우편 공무원이 민간인화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 10월 우정민영화법이 성립되었고, 2007년 4월 우정공사를 일본우정주식회사로 민영화하고 산하에 창구네트워크, 우편사업, 우편은행, 우편보험의 4개 자회사로 분리하여 2017년 3월까지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이 과정에서 민영화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2004년에는 의회를 해산하고 내각의 재신임을 위한 총선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2005년 10월 ‘우정민영화법안’이 성립되면서 고이즈미 개혁의 추진 성과가 구체적인 결실을 맺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고이즈미정부의 사회보장개혁은 연금 일원화(국민·후생·공제연금 통합) 및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률 확대 등을 통한 사회보장재원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⁶⁾ 일본의 연금제도는 세대 간 부양을 원칙으로 하는 부과방식¹⁷⁾이나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연금제도의 본격적인 개혁 없이는 연금제도의 지속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노인인구 부양비율(65세 이상/20~64세)이 1975년 13.0%에서 2000년에 27.8%로 급상승하였고 2025년에는 52.6%, 2050년에는 71.4%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당시 일본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과 피고용자 연금, 사적연금인 기업연금의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피고용자 연금은 민간 회사 피고용인 대상의 후생연금과 공무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연금으로 구분되며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기업연금은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사적연금으로 후생연금기금, 적격퇴직연금, 확정기여연금, 확정급여기업연금 등이 있었다.

16) 한국은행(2007)

17) 현역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로 은퇴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현역 기간 동안 스스로 적립한 자금을 은퇴 후 연금으로 받는 제도를 적립방식이라 한다.

2004년에는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 납부액을 높이고 수령액을 낮추는 1차 개혁을 단행하였다.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을 2004년 13.6%에서 매년 0.354%p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8.3%로 상향조정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월 13,330엔에서 매년 280엔씩, 2017년도까지 16,900엔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보수대비 연금 지급액 비율을 낮추어 소득대체율¹⁸⁾을 2004년 59.2%에서 2020년 50.2%까지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였다. 또한 연금재정의 안정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부담비율을 2004년도의 1/3에서 2009년도까지 1/2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에 따른 국고부담 증가분 연간 2.7조엔(2004년도 기준)은 감세 제도 폐지, 세제개혁 등을 통하여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2007년부터는 부담과 혜택에 있어 격차가 있는 민간대상 후생연금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연금의 일원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공제연금을 후생연금과 통합함으로써 공무원 및 교직원 등에 대한 연금제도상 혜택을 폐지하고자 한 것이다. 2012년에는 일반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의 근로자연금 모두를 후생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근로자연금일원화법안이 통과되어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민관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표 3] 고이즈미정부(2001. 4~2006. 9) 4대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

부문	주요 내용
금융 개혁	○ 금융·세제·규제·세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디플레이션 극복, 경제 활성화 도모
재정 개혁	○ 2010년대 초반에 재정수지 흑자를 목표 ○ 삼위일체(지방분권)개혁, 구조개혁특구, 도시재생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방경제 활성화 도모 - 2003년 12월 지방에 대한 보조금 삭감 시작
사회 보장 개혁	○ 연금, 의료, 노인복지 등 사회보장제도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혁 - 2004년 중 연금제도 개혁법 통과 - 2007년 3월까지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일괄적 제도 개선안 마련
특수 법인 개혁	○ 우정 3사업의 민영화는 2007년 4월을 목표로 전개하며, 2004년 가을까지 민영화 방안을 정리, 2005년 법안의 국회 통과 추진, 2007년 4월 민영화 ○ 도로 4공단의 민영화는 2005년을 목표로 전개하며, 2004년도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통과 추진

자료: 일본 내각부

18) 연금 납부기간의 평균소득에 대한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나타낸다.

고이즈미정부는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그리고 민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 조치도 실시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각종 규제 철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설비투자 증가를 촉진하였다. 최저 자본금 규제 철폐, 유한책임사업조합 도입, 출자이익에 대한 비과세 등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 지역의 투자 규제 등 기업 활동을 가로 막는 1,000건 이상의 규제를 3년 동안 철폐했다. 예를 들어, 임시직에 대한 고용요건을 완화시켜 기업의 임금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직업소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반경쟁적 행동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경쟁을 촉진시키고자 하였으며 “구조개혁 특구(Special Zones for Structural Reform)”라는 특구를 설치하여 그 지역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하였고 실제로 일정부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IMF 2005).

결과적으로, 2000년대 들어 대외 경제여건이 서서히 호전되면서 일본의 정책당국이 재정정책의 방향을 경기부양에서 재정 건전화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개혁을 가속하여 부실채권 청산을 통한 은행의 건전성 개선 및 민간 기업의 과잉시설 및 과잉부채 축소 노력 등의 구조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본 경제는 장기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¹⁹⁾ 세계경제가 2002년부터 IT버블 붕괴 이후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대중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도 서서히 침체에서 벗어나 일본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고이즈미정부는 집권 2년째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경기상황을 바탕으로 장기안정 성장을 목표로 하는 개혁정책이 힘을 얻게 되었다. 2005년 9월말의 ‘금융기관 부실채권 처리 종료’ 선언 및 동년 10월의 ‘우정 민영화법안’ 성립을 기점으로 고이즈미 개혁의 추진 성과가 구체적인 결실을 맺으면서 경제개혁 추진과 경기회복력 강화라는 선순환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사업 등 재정지출을 통한 일시적 경기부양 조치를 지양하고 정부차원의 구조개혁을 슬로건화함으로써,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촉구하는 효과를 유발시켜, 결과적으로는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경기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고이즈미정부 5년간의 성장률 추이를 보면 2001년 0.4%,

19) 박종규(2007)

2002년 0.3%에서 2003년 1.7%, 2004년 2.4%, 2005년 1.7%로 성장률이 높아졌다. 반면, 재정 건전화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했고 구조개혁 추진의 반향으로 소득 격차 및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비판도 대두되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2011년 대지진 여파로 다시 경기부진의 늪에 빠져들었다. 이후 일본경제가 침체양상이 지속되자 아베정부에 이르러 구조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경제정책이 추진되었다.

<BOX> 독일의 구조개혁정책(슈뢰더개혁)

여타 유로존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독일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은 무엇보다도 노동시장 개혁을 중심으로 한 슈뢰더개혁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3년 독일 슈뢰더 전 총리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여 “아젠다 2010”(2003년에 시작된 일련의 사회시스템 및 노동시장 개혁 프로그램으로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독일경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구조 개혁안을 추진했다. “아젠다 2010”에서는 독일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 패키지를 경제, 직업훈련, 과세, 교육 및 연구, 노동시장, 보건, 연금, 가족 지원 등으로 나누고 각 부문에서의 현안과 해법을 제시하였다. 경제 분야의 핵심은 중소기업 진흥과 투자 강화, 그리고 경제활동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직업 훈련분야는 청년들에게 질 높은 훈련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연금 및 보건 분야의 핵심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부담 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한다는 것이고 의료 수준 개선과 양질의 보건 의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독일경제는 세계경기 위축(IT 버블 붕괴 등에 의한 영향)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높은 실업률과 재정적자 심화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2002년 독일의 재정수지적자비율은 GDP 대비 3.6%로 “안정 및 성장 협약”의 상한선(3%)를 상회하여 유로지역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하락시킬 정도로 악화되었다. 당시의 독일경제 부진은 막대한 통일 비용,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 과도한 사회보장지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경제구조 개혁의 지연, 낙후된 산업구조 등의 구조적 문제로 경제 활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슈뢰더 개혁의 개별 분야 내용]

	내 용	비 고
노동시장 개혁	① 실업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 축소와 노동 촉진 - 실업조기 통지 의무화 - 실업보험 급부일수 단축 - 실업부조와 사회부조 통합 - 직업소개 기능 강화 ② 노동시장 유연화 - 노동자 파견기간 상한 철폐	- 신속한 직업소개 수행 - 실업보험가입 기간 최장 32개월→12개월~18개월(55세 이상)로 단축 - 이직 전 소득 53~57% 실업부조(12개월 급부) → 월 345유로로 인하 - 민간 인재파견 회사와 직업소개소 공적 지원 - 파견기간 상한(24개월)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니잡, 미디잡 등 저임금직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니잡: 월 근로소득 400유로 이하,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내 • 미디잡: 월소득 401~800유로 - 해고제한 완화(해고제한 적용 제외 대상사업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및 사회보험료 면제 - 사회보장 보험료를 차등화(4~21%) - 종래 종업원 5명 이하 기업→10명 이하 기업
사회보장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급부 수준 하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65→67세) 하고 퇴직전 최종소득 대비연금액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 - 적립 방식의 사적연금 도입 - 연금 재원 다각화(가솔린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의 70%→67% - 기업 연금, 개인연금 신규 도입(2001년): 세제상 우대 조치 - 가솔린세 증세→사회보험료를 인하(20%→19.1%)
의료제도개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피보험자, 환자자기부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진료 등에 자기부담제 도입 - 의료보험료 부담 증가 ② 보험 적용 범위 축소 ③ 의료보험업자간 경쟁촉진 ④ 의료효율화와 서비스양과 질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자 기능 고도화와 비용삭감 - 진료보수제도 개혁(진단군별 포괄지급 방식 도입) - 말기환자 케어시스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방약 조제시 자기부담 5~10유로, 입원시 1일당 10유로 환자부담 - 종업원은 임금의 0.9% 추가 부담 → 고용주 부담경감(의료 보험료는 종업원과 고용주가 50%씩 분담) - 안경·콘택트렌즈, 시판의약품, 통원 교통비 등 보험 지급 대상 제외 - 공적의료보험 합병(1992년: 1,223개 → 2013년: 134개) -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축소(과잉의료), 적정 의료 서비스 안내 확대 - 과잉의료비용 억제 - 재택치료 확대
세계·기업제도개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지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인하(2000년 세제개혁법) - 소득세율 인하 ② 기업재편 촉진, 성장산업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주식 양도 차익 과세 폐지(1998년: 은행, 생보사의 일반기업 주식 보유과다, 주식 매각이익의 실효세율 50%) - 기업재건형 법적 정리와 사업재생 촉진 ③ 기업 지배구조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실효세율(1999년 51.8%→2001년 38.6%) - 최고 세율 인하(1998년 53%→2005년 45%) - 금융기관의 일반기업 주식 축소 → 외국법인이나 일반법인의 보유 주식증가(산업재편 촉진) - 조기에 법적 정리 신청(3개월 지불정지 허용) - 주주, 투자가 권리보호 확충, 경영정보와 기업 경영 투명화, 감사기능 확충명확화

자료: OECD

노동시장과 복지부문에 초점을 둔 구조개혁 정책이 하르츠 개혁이다. 큰 틀에서 “하르츠 개혁”은 “아젠다 2010”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아젠다 2010”의 복지 및 노동부문과 관련된 부분이다. 하르츠 개혁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차례대로 시행되었으며 각 개혁별로 실직자를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특징적인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르츠 개혁 I”은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청의 취업알선 활동을 개선하고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르츠 개혁 II”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히 고용률이 낮은 저숙련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시장 공급 측면의 개혁 방안으로 미니잡(월급여 400유로 미만 일자

리), 미디잡(월급여 401~800유로 미만 일자리), 개인자영업 창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하르츠 개혁Ⅲ”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급여와 실업부조를 담당하는 연방청의 행정구조 시스템을 개혁하고 노동정책의 수단을 단순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2004년 1월 1일부터 관련 사항을 적용했다.

“하르츠 개혁Ⅳ”는 근로능력이 있는 장기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실업급여 체제를 설립하였다. 실업급여 I(실업급여 수급기간 최대 12개월로 축소, 다만 55세 이상의 수급자는 최대 18개월 동안 지급 → 이후 58세 이상에 한하여 수급기간 최대 24개월로 확대), 실업급여Ⅱ(기여금 없이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부조적 성격의 정액급여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실업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급하되 수급 조건을 거부하는 경우 급여액 부분 혹은 완전 삭감하도록 함) 시스템을 도입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였다.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여 혜택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실업급여Ⅱ를 지원하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새로운 사회부조의 지원을 받도록 조정했다. 실업급여Ⅱ와 사회급여(Social benefit)는 공공복지의 일부분으로서 생계비용을 지원(월 345유로)했다. 새로운 사회부조는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수혜자에게 최소한의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이다. 슈뢰더 정부의 구조개혁(하르츠 개혁) 핵심 내용은 결국 평등과 분배구조를 다소 희생시키는 대신 효율과 생산성을 제고시킨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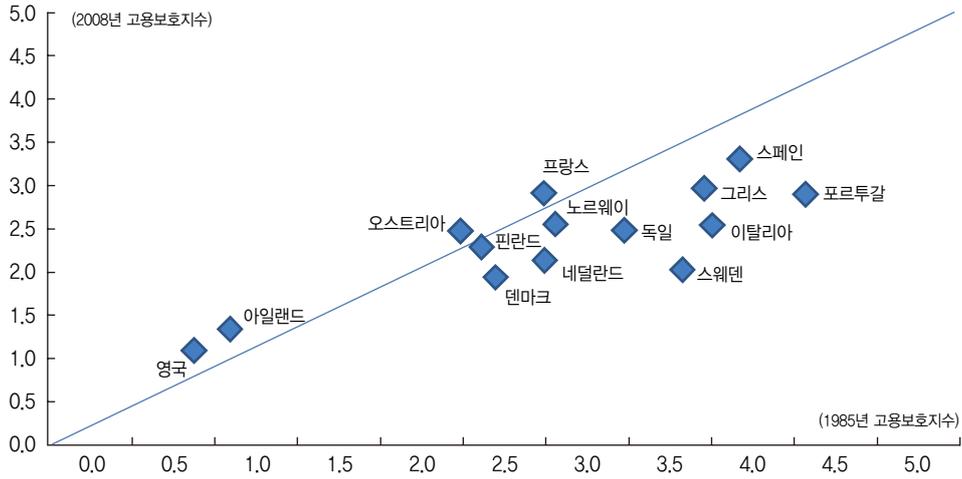
[하르츠 개혁 구분과 내용]

	주요 내용	시행시기
하르츠 개혁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알선 대행사 설립 - 인력알선 대행사에서 임시직 알선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 적절한 일자리에 대한 정의 재고(일자리 거부 사유 명확히 명시) - 고용청에 사전 고지 의무(해고 통보 등) - 지속적 교육(교육 바우처 제도)을 위한 새로운 규정(고용청) -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경쟁유도(성과중심의 보너스 제도) - 근로자 파견 제한 규정 완화(24개월로 제한된 최고 파견기간 폐지) 	2003년 1월 1일
하르츠 개혁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니잡과 미디잡이라는 새로운 일자리 도입 - 개인자영업 창업 시 보조금 지급 	2003년 1월 1일
하르츠 개혁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연방 고용청의 구조조정 및 개혁 - 윈스탑 고객센터(맞춤서비스) - 시장제도의 도입 확대(서비스의 외주) 	2004년 1월 1일
하르츠 개혁 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와 사회부조시스템을 개혁·재조정 - 일자리센터 설치 - 원유도 잡(one euro job)도입 - 기존 제도 개혁 	2005년 1월 1일

자료: 한독경상학회, 경산논총 32권(독일 하르츠 개혁 10년의 성과)

슈뢰더 정부의 구조개혁(하르츠 개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2008년 중 고용보호지수(OECD)가 1985년보다 크게 낮아졌다.

[독일과 주요 선진국의 고용보호지수 변화]



주: 0은 규제가 약하고, 5는 규제가 강한 것을 의미하며, 45도선 아래에 위치하는 것은 노동경직성의 완화를 의미.

자료: ILO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의 등록 실업자수가 크게 줄기 시작했다. 2003년 483만 명이던 실업자수가 2007년 중 378만명, 2012년 중 290만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실업 관련 재정지출액도 2003년 915억유로에서 2012년 538억유로로 낮아졌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하르츠 개혁)이 노동생산성, 경쟁력, 부가가치를 개선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의 실업 비용 추이]

(단위: 천명, 천유로, 억유로)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등록 실업자수(천명)	4,830	4,812	4,861	4,487	3,776	3,268	3,423	3,245	2,976	2,897
실업자 1인당 비용(천유로/연간)	18.9	19.2	18.0	18.3	17.8	17.1	17.5	18.5	18.9	18.6
실업관련 재정 지출액(억유로)	915	922	877	822	672	559	598	602	563	538

자료: 독일연방정부 통계국

[슈뢰더 개혁 전후 독일 경제 비교]

	1997년 (슈뢰더 취임 전년)	2005년 (슈뢰더 퇴임년)	최근	비고
GDP성장률 (%)	1.9	0.9	2.6(06~13년평균)	08~09년 제외
재정수지 (억유로)	△527	△741	5.2(2013년)	
재정수지비율 (%)	△2.8	△3.3	0.2(2013년)	GDP 대비
실업률 (%)	9.7	11.3	5.3(2013년)	
실업자수(만명)	438	486	295(2013년)	
무역수지 (억달러)	712	1,939	2,446(2013년)	
경상수지 (억달러)	△100	1,338	2,735(2013년)	
대외직접투자 잔고비율 (%)	14	36	57(2013년)	GDP대비
대내직접투자 잔고비율 (%)	9	29	43(2013년)	GDP대비

자료: 독일연방정부 통계국

결론적으로 슈뢰더 구조개혁 조치가 경제성장률 제고(2005년: 0.9% 성장 → 2006~2013년: 2.6%, 2008년과 2009년 제외), 재정수지 개선(재정수지 적자 비율, 2005년: -3.3% → 2013년: 0.2%), 실업률 하락(2005년: 11.3% → 2013년: 5.3%)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에 바탕을 둔 성장패턴을 보여 왔던 독일경제는 기업의 경쟁력 및 고용 유지 여력을 토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에도 고용이 위기이전보다 늘어나는 가운데 세계경제 회복과 함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노동생산성이 위기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여타 경쟁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독일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축근로제도 이외에도 근로시간 계정제도(경기 호황기에 근로시간을 기준보다 늘려 계정상 초과분을 비축하고 불황 시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 등으로 고용 감축 압력을 상쇄했다. 이러한 정부의 고용중시 전략으로 인해 독일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인적자본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은 상회함에 따라 고용탄력성이 위기 이전보다 상승했다. 이는 여타 유로존 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뛰어난 경제적 성과인 것이다.

IV. 아베정부의 경제정책(2013~2015년)

1. 통화·재정정책 추진

가. 통화·재정정책의 내용

아베정부는 2012년 12월에 출범하면서 이른바 세 개의 화살을 축으로 하는 경제활성화정책을 추진하여, 그 중 통화정책(제1화살)과 재정정책(제2화살)이 초기 아베정부의 경기부양 역할을 담당하였다. 일본은행은 아베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여 2013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 달성목표를 2%로 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고 4월에는 양적·질적통화완화정책(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netary Easing)으로 명명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 2%를 2년 내 가능한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운용목표를 콜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변경하고, 2년내 본원통화를 2배로 확대시키기 위해 연간 60~70조엔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자산매입프로그램으로 국채잔액을 매년 50조엔씩 증액하고 40년 만기물을 포함하여 보유 국채잔액의 평균만기를 3년 이하에서 7년 수준으로 연장기로 하였다. 또한 위험자산인 ETFs와 일본부동산투자신탁(J-REITs)도 각각 연 1조엔, 300억엔씩 매입기로 하였다. 2014년 10월에는 연간 국채매입을 80조엔으로 확대하고 국채의 평균잔존 만기를 7~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양적·질적통화완화정책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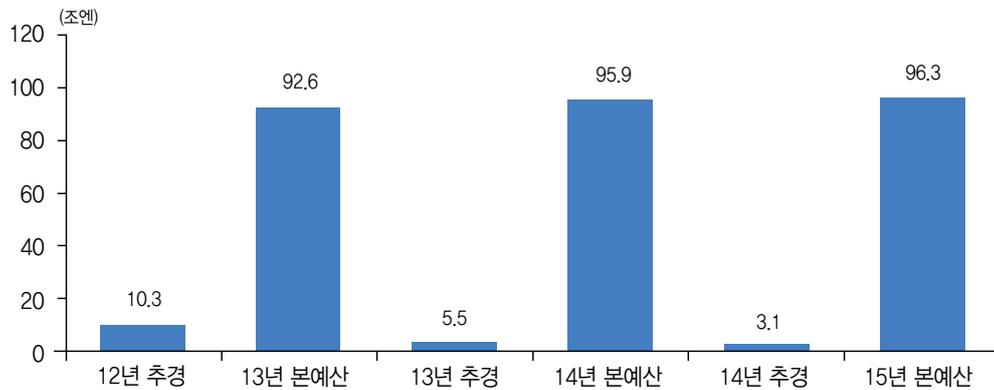
[표 4] 일본은행의 양적·질적통화완화정책 내용

	2013년 4월 4일 발표	2014년 10월 31일 발표
본원통화공급	연 60~70조엔	연 80조엔
장기국채매입	연 50조엔(평균잔존만기 약 7년)	연 80조엔(평균잔존만기 약7~10년)
ETFs 매입	연 1조엔	연 3조엔
J-REITs 매입	연 300억엔	연 900억엔

자료: 일본은행

아베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였다. 2013년부터 3차례의 경제대책²⁰⁾을 추진하면서 본예산 이외에도 2013년 10.3조엔, 2014년 5.5조엔, 2015년 3.1조엔 등 총 18.9조엔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였다. 이는 2015년 정부예산(96.3조엔)의 19.6%에 이르는 규모이다. 아베정부는 지출대상부문에 경제부흥, 안전 및 재해방지, 지역활성화,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시켰지만 이와 더불어 공공사업 관련 전통적인 지출 분야도 늘려 지출 분야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27] 아베 집권 이후 추진된 본예산과 경기부양용 추경 증가분



자료: みずほ総合研究所, “安倍改造内閣の財政運営の課題”, 2015.11.18.

그런데 과거 정부가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적었던 금융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일본은행과 아베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 배경은 무엇인가? 통화량을 확대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자산가격의 상승, 실질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투자의 자극, 통화약세 등의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에 빠진 일본은 이러한 통화정책의 경로가 작동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아베정부는 통화재정정책에 관하여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하나는 확고한 엔화약세를 공언한 것이다. 2012년 총선을 앞둔 2012년 11월 15일 당시 야당 총재였던 아베는 엔화약세 유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연설하였다. 두 번째는

20) 일본경제재생을 향한 긴급경제대책(2013.1), 선순환 실현을 위한 경제대책(2013.12), 지방으로 선순환 확대를 위한 긴급경제대책(2014.12)을 추진하였다.

물가목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물가목표제의 도입은 무제한 통화공급의 정당성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엔화약세를 촉발시키는 것이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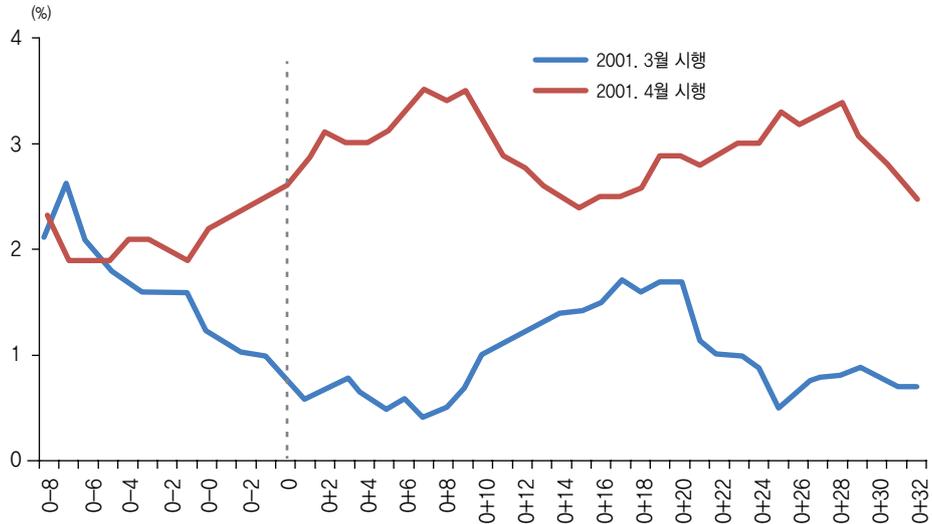
이처럼 확고한 엔화약세 공언과 물가목표제의 도입을 통해 경제주체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엔화약세와 실질금리 인하를 유도하여 경기부양효과를 배가시키려 하였다.²²⁾ 이때 통화량의 확대를 위한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은 재정정책의 재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가 상업은행에 국채를 매각하고, 다시 상업은행 보유 국채를 일본은행이 매입하면, 통화와 국채의 거래를 통해 통화확대와 재정지출 확대가 서로 밀접하게 결합한 하나의 정책이 되는 것이다. 결국 아베정부의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은 대규모 통화방출을 기반으로 한 엔화약세, 실질금리 하락,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정부 하 통화·재정정책이 과거 일본정부 하에서 추진되었던 정책과 다른 점은 경제주체의 신뢰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확고한 엔화약세정책을 공언하고 물가목표제의 도입으로 아베정부의 정책이 매우 지속성이 높은 정책이라는 점을 시장에 전달한 것이다.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높다는 것은 2001년 당시 양적완화정책과 2013년 추진된 정책 간에 광의의 통화량(M3) 증가율을 비교할 때 알 수 있는데, 아베정부 당시의 M3 통화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3년 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기대물가의 상승 및 실질금리의 하락을 유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1) Svensson(2001)의 연구는 이러한 방안을 지지한다.

22) 앞서 언급된 Ugai(2007), Krugman(1998) 등은 확고한 공언으로 경제주체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통화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림 28] 2001년 3월 및 2013년 4월 전후 M3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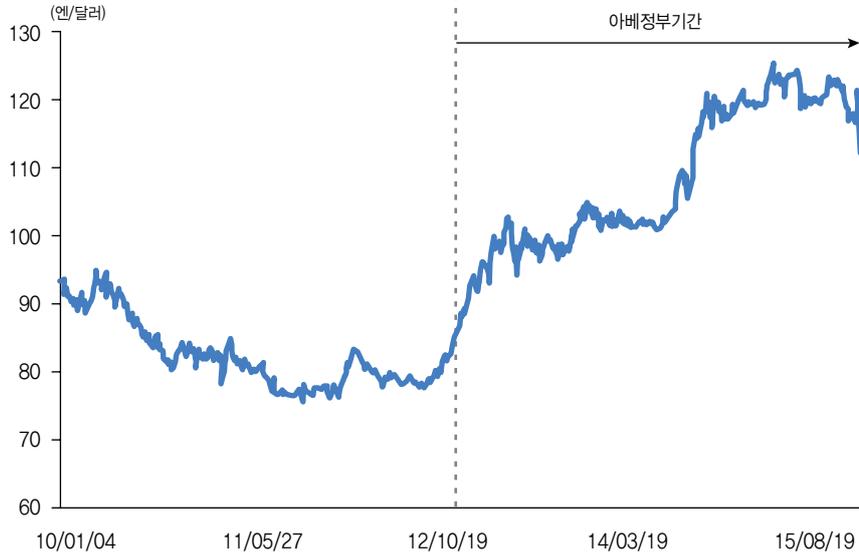


주: 수직 점선은 양적완화정책이 시행된 시점을 의미
 자료: 일본은행

나. 성과

엔/달러 환율은 2012년 12월 총선에서 당시 야당 총재였던 아베의 승리가 확실 시 되자 출범(2012.12.26) 이전부터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출범 이후 2015년 말까지 엔/달러 환율은 약 42%가 상승하였다.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의 추이를 볼 때에도 아베정부 출범 당시 1% 내외에서 2014년 1월~2015년 12월 중 월평균 -0.8%로 하락하였으며, 2014년 5월에는 -3.1%까지 하락하기도 하였다. 이는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아베정부가 추진 중인 통화·재정 정책(제1, 2화살)이 경기회복세를 보인 이후에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29] 아베정부 출범 전후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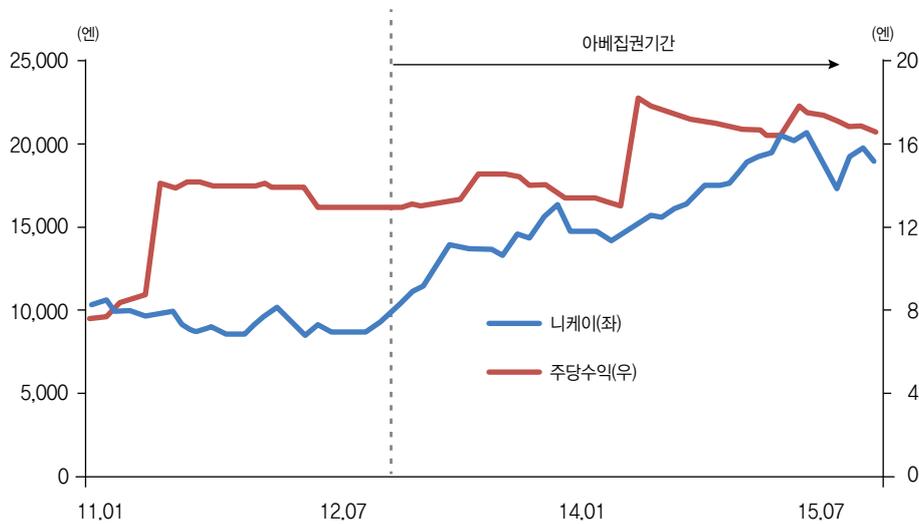
[그림 30] 아베정부 출범 전후 실질금리 추이



주: 실질금리는 10년만기 국채수익률-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데이타스트림

엔화약세와 실질금리 하락에 힘입어 기업의 수익이 크게 증가하였다. 동경증권 거래소 1부 기업들의 주당 수익이 2012년 말 12.97엔에서 2013년 말 13.83엔, 2014년 말 16.99엔, 2015년 말 16.63엔으로 뚜렷이 높아졌다. 엔화의 약세로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호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익호전에 힘입어 일본주가도 크게 상승하였는데 니케이지수가 2012년 말 10,395에서 2015년 말에는 19,033으로 83%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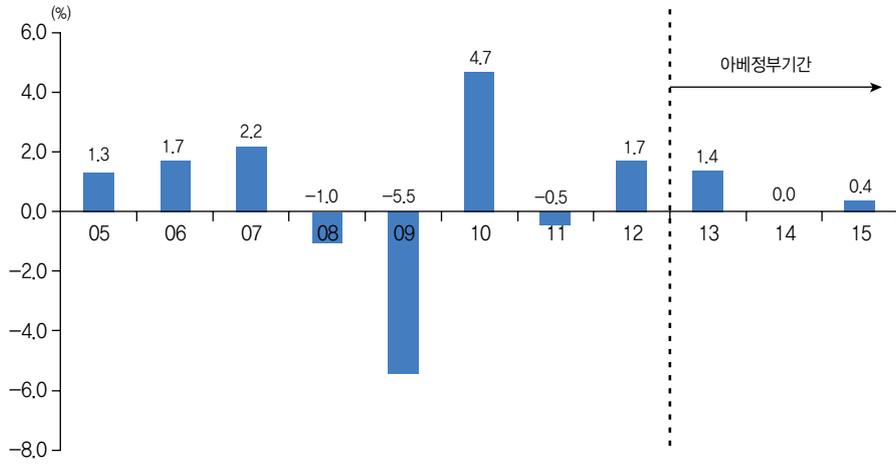
[그림 31] 아베정부 출범 이후 주당수익 및 니케이지수 추이



주: 주당 수익은 1부기업 기준
 자료: 도쿄증권거래소

그러나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금융시장의 반응과 기업수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의 회복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3가지 화살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질경제성장률 2%(명목경제성장률 3%)의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일본경제성장률은 2013년 전년대비 1.4%를 기록했으나 2014년, 2015년에는 각각 0%, 0.4%에 그쳐 목표성장률(2%)에 미치지 못하였다. 소비세율 인상(2014년 4월)의 여파, 2014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의 폭락, 중국경제의 둔화 등이 일본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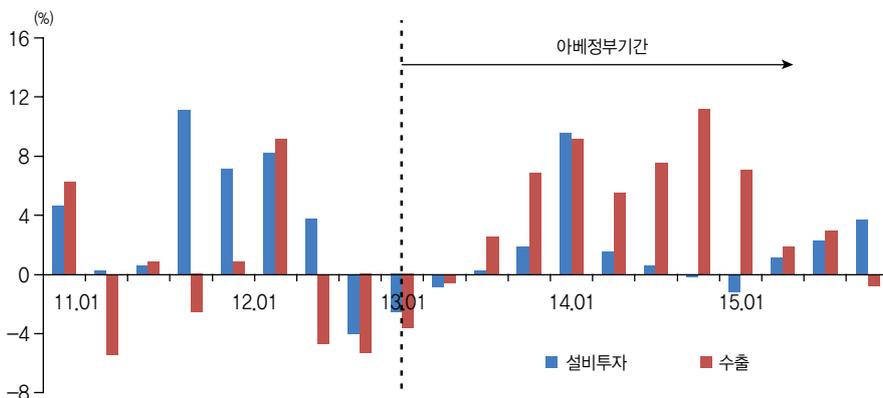
[그림 32] 아베정부 출범 전후 일본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부문별로 살펴보면 설비투자는 기업수익 및 주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양상이 이어졌다. 아베정부 출범 후 2015년 1/4분기까지 엔화약세와 수출이 개선되었음에도 설비투자는 미약한 추세가 이어졌다. 이는 일본기업들이 수출개선, 금융비용의 하락, 수익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에는 소극적임을 보여준다. 일본 기업들이 일본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해 미래 기대수익률을 높게 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5년 2/4~4/4분기 중에는 설비투자가 완만히 회복되고 있으나 증가세가 낮은 수준이고 수출도 전년에 비해 둔화되고 있어 향후 설비투자 증가세가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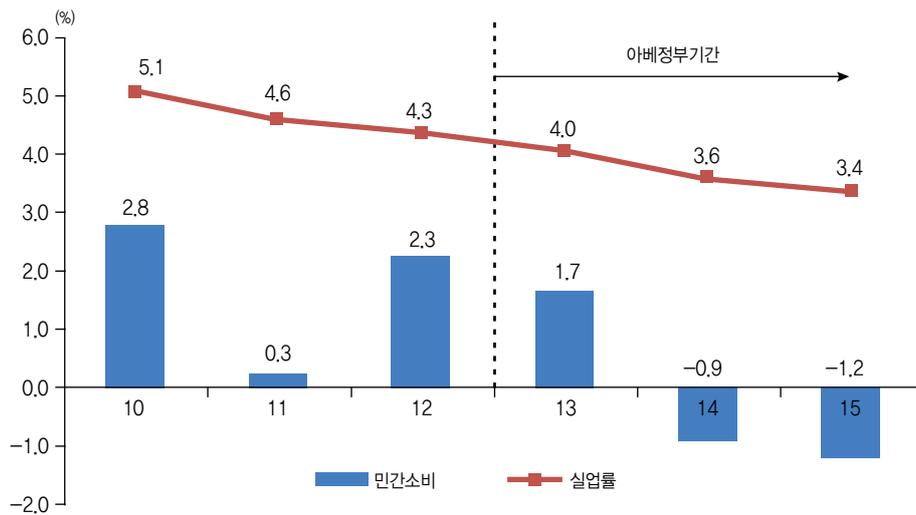
[그림 33] 아베정부 출범 전후 수출과 설비투자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가계 측면에서 보면 고용이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2012년 4.3%에서 2015년에는 3.4%로 상당폭 하락하였다. 또한 임금 상승률도 2012년 전년대비 -0.2%(5인 이상 제조업 기준), 2013년 -0.7%였으나 2014년 1.8%, 2015년에는 0.3%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고용·임금 부문에서는 개선을 나타냈으나 민간소비는 2014년(-0.9%), 2015년(-1.2%)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시장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부진한 것은 2014년 4월 시행된 소비세율 인상(5% → 8%)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민간소비 감소율이 2014년 2/4분기~2015년 1/4분기 기간 중 전년동기대비 2.1~4.2%로 큰 폭이었는데 이 정도의 충격은 일본정부도 예상치 못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직도 고용시장의 개선이 민간소비를 탄탄히 뒷받침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림 34] 아베정부 출범 전후 민간소비와 실업률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한국은행

한편 물가를 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2년 전년대비 0%에서 2013년 0.4%, 2014년 2.7% 기록하여 연평균 1.3% 상승하였다. 국제유가 하락의 충격으로 인해 2015년 0.8%로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2009~2012년 간 계속되었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일본은행의 목표치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수익 개선이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임금인상

을 통해 민간소비의 회복이라는 선순환의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선순환이 형성되기에는 아직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미약하다. 따라서 소비자물가가 지난 3년간 하락세에서 벗어나고 일본은행의 목표치 2%를 일시적으로 넘기는 했으나 아직 실물경제 수요 측면에서는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탈피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일본경제가 민간경제의 자생적 힘이 아닌 강력한 통화공급에 의해 인위적으로 지탱되고 있어, 경제성장세는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2013~2015년 간의 아베경제정책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은 경제성장동력을 되찾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새로운 통화정책을 시도하는 일본은행

2016년에 들어서자 세계경제는 불안한 모습을 표출하고 있다. 2015년 중 저유가와 중국의 경제둔화가 세계경제를 압박하더니 12월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세계 각국의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아베정부 출범 후 크게 상승하였던 일본의 주가도 2016년 2월 10일 니케이지수가 2015년 말 대비 17.4% 하락하였다.

이렇게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1월 29일 일본은행이 세계적으로는 5번째, 일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하였다.²³⁾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한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아베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화약세가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강제로 전환된 점이다. 엔/달러 환율이 미국 금리인상 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강해지면서 2015년 12월 17일 122.4엔에서 2016년 1월 26일에는 118.4엔으로 낮아졌다. 일본은행의 입장에서는 시장심리가 엔화 강제로 전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새로운 경기부양 수단을 확보하려는 일본은행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일본은행은 장기간 제로금리정책을 수행했지만 제로금리정책만으로는 강한 경제회복세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Goodfriend(2015)는 제로금리 하에서는 기준금리 변동의 운신이 좁아 통화당국의 경기부양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제로금리 수준에서는 투자자들이 투자보다는 저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

23) 일본은행은 일본은행 내 개설된 상업은행 당좌예금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0.1%의 수수료를 부과기로 하였다.

기고 은행들 간에도 단기자금을 상호대출하려는 동기가 적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양적완화정책으로 제로금리정책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양적완화정책은 금리정책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정책에다 추가적인 통화완화효과를 강화시킴으로써 통화약세와 실질금리 인하를 더욱 촉진시키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게 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정책이 2020년에는 일본 국채의 부족으로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²⁴⁾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으로 국채 보유 비중이 전체 국채의 70%에 이르러 추가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제로금리정책과 양적완화정책의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2014년부터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 3개국(덴마크, 스웨덴, 스위스)이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하자 일본은행은 새로운 통화정책수단으로 마이너스금리를 주시해온 것으로 보인다.²⁵⁾ 이들 유럽지역에서 마이너스금리정책이 2015년까지는 예상치 못한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점²⁶⁾에 주목하고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를 전격 도입한 것이다. 만약 큰 부작용 없이 마이너스금리정책이 수행된다면 일본은행으로서는 새로운 금융완화정책 도구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2015년 중 엔화약세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금리 도입 당시에 2015년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2%를 한참 하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경기부양의 목적도 있다. 실제로 2015년 경제성장률은 0.4%에 그쳤다.

최근 마이너스금리의 도입 후 일본의 금융시장은 일본은행의 의도와는 달리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엔/달러 환율은 112엔대까지 하락하여 엔화강세가 더욱 심화되어 단기적으로는 일본은행이 시장심리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은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 도입이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아베정부와 일본은행이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고한 통화공급정책을 공언함으로써 확보한 시장의 신뢰를 기반으로 경제회복을 도모해왔음을 상

24) みずほ総合研究所, “安倍改造内閣の財政運営の課題”, 2015.11.18.

25) ECB는 중앙은행 예치금(Deposit Facility Rate)에 대해 2014년 6월 -0.1%, 2014년 9월 -0.2%로, 덴마크는 2014년 9월 CD금리를 -0.75%로, 스웨덴은 2014년 7월 환매채금리를 -0.1%, 2015년 2월 -0.35%, 2016년 2월 -0.5%로, 스위스는 2014년 12월 3개월 목표금리를 -0.75%로 낮추어 기준금리를 운용중이다. 이중 ECB와 스웨덴은 경기부양, 덴마크와 스위스는 통화가치 방어가 마이너스금리 도입의 주요 목적이다.

26) Jackson(2015)에 따르면 ECB와 유럽 3개국이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한 이후 ① 마이너스금리정책이 금융시장에 작동하고, ② 아직 올바른 평가하기에는 충분한 기간 동안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2015년까지는 마이너스금리정책이 과도한 금융불안을 야기하지 않았으며, ③ 통화정책도 정상 작동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기해야 한다. 시장불안을 진정시켜 마이너스금리의 도입이 잘못된 정책이 아님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경제주체의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일본은행의 신뢰가 약화된다면 아베경제정책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2. 구조개혁 추진

아베경제정책의 세 번째 화살은 민간 투자를 유발하는 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으로 건강, 에너지, 차세대 인프라, 농림수산업 등의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민관협동을 통해 일본 경제의 성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참여율 제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금융재정정책을 통한 공격적인 양적 완화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일시적으로 경기를 호전시킬 수 있으나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만이 과거의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 농업부문의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며, 구조개혁 없는 경기부양정책이나 공급부문 개선(고생산, 고수익, 고경쟁력 부문으로 자원 집중 ↔ 저생산, 저수익, 저생산성 부문의 자원 배분조기 축소 : 자원의 재배분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법, 제도를 조기 마련하여 민간부문에서 자금, 인력, 기술 등을 효율적인 부문으로 재배치)없는 수요확대정책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본 내각부(중기성장전략)는 구조개혁에 중점을 둔 생산성 제고정책(규제개혁, 노동시장개혁, 재정재건, 로봇산업 혁명, 서비스산업 육성 등)으로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신성장전략은 향후 10년간 평균 명목GDP성장률 3%, 실질GDP성장률 2%와 10년후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GNI)을 150만엔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총요소생산성 제고(현재 : 0.77%p → 향후 : 1.18%p)로 2015~2020년 중 연 평균 경제성장률을 0.79%에서 2.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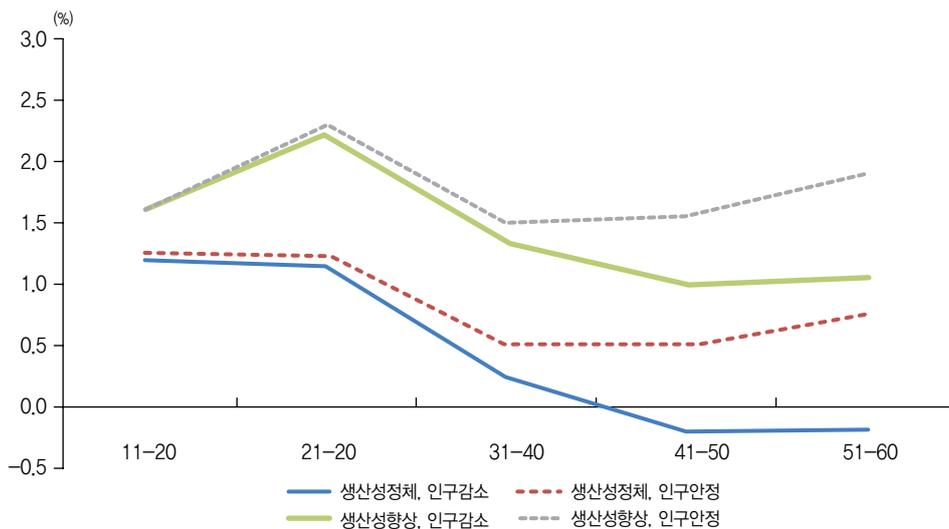
[표 5] 일본경제 중기(2015~2020년) 성장 전망

(단위: %, %p)

	실질GDP			총요소 생산성 기여도	비고 (성장전략정책)
		노동 기여도	자본 기여도		
표준 시나리오	0.79	-0.48	0.48	0.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양육지원 - 조세, 사회보장개혁 - 노동시장 미스매치 축소 - 외국인노동자 확대 - 규제개혁, 특구 육성 - 법인세 인하 - 올림픽(동경: 2020년) 효과
성장전략 달성 시나리오	2.0	-0.08	0.89	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성장률 상승 환경 조성 - 기업의 리스크테이크 환경 조성 - 재정재건 - 노동시장 개혁 - 로봇혁명 - 서비스산업 활성화 - 인적자본 육성

주: 1. 표준시나리오: ① 노동투입량 중 취업률(취업자수/15세이상 인구)과 노동시간이 2013년 수준 유지 ② 자본투입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2001~2010년 수준(연평균) 유지시
 2. 성장전략 달성 시나리오: ① 노동투입량 중 20~64세의 취업률 5% 상승
 자료: 일본 내각부

[그림 35] 일본의 GDP성장률 시나리오



자료: 일본 내각부

아베정부의 일본재흥전략은 일본산업재흥계획, 전략시장창조계획, 국제활동전개전략 등 3대 실천계획과 관련된 13대 전략분야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노동시장, 기업투자환경조성, 재정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표 6] 일본재흥전략의 3대 실천계획의 주요 목표 및 내용

3대 실천계획	주요 목표	주요 내용
일본산업재흥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경쟁력 강화 ○ 고용제도 개선, 산업특구 조성 등 시장 환경 정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긴급 구조개혁 프로그램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 (2) 고용제도 개혁 및 인재역량 강화 (3) 과학기술 혁신 추진 (4) 세계 최고 수준의 IT 사회 실현 (5) 산업 입지 경쟁력 강화 (6)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혁신
전략시장창조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환경·에너지, 농림수산, 인프라 등을 전략분야로 선정 ○ 2020년과 2030년의 미래상을 예측하고 정책적 로드맵을 제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8)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수급 실현 (9) 안전·편리하고 경제적 차세대 인프라 구축 (10) 세계를 매료시키는 지역사회 실현
국제활동전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해외 자본과 인력의 국내 유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전략적 통상관계 구축과 경제협력 추진 (12)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 (13) 일본 성장을 지원하는 자원 및 인재 기반 조성

자료: ‘일본재흥전략 분석,’ 미래창조과학부(2014), p. 8. <표 4>

가. 노동시장 개혁

‘일본재흥전략’에 나타난 노동시장 개혁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지원, 경제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른 고급인력의 유치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고용 유지형 노동정책에서 노동이동 지원형 노동정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청년층·여성층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대기 아동 해소 가속화, 대학 개혁, 글로벌 인력 양성 강화, 외국인재의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위와 같은 노동개혁이 여성, 고령자 등의 노동참가

촉진, 교육과 능력개발을 통한 인적자본 강화, 생산성이 낮은 부분에서 높은 부분으로의 노동이동 촉진 등을 통해 경제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5년간에 실업 기간 6개월 이상인 사람의 수를 20% 감소시키고, 2020년에 여성의 취업률(25~44세)을 73%(2012년 68%)로 높이는 것을 성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대학 개혁과 글로벌 인력 양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세계 100대 대학 랭킹에서 일본대학이 10개 이상 차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표 7] 일본재흥전략의 노동시장개혁 정책 및 목표

주요 정책	목표 및 계획	목표달성 시기
여성인력 활용 활성화	○ 보육시설 대기 아동을 없앴	2017년
	○ 여성의 취업률(25~44세)을 73%로 높임	2033년
실업자 감축과 고용확대	○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의 실업자 20% 감축	2018년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 세계 100대 대학 중 일본대학 10개교 이상	2023년

자료: ‘일본재흥전략 분석,’ 미래창조과학부(2014), p. 8. <표 4>

일본 정부는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이차 소득자(second earner)의 근로유인을 감소시키는 조세 및 사회보장시스템을 개혁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성 불평등 축소를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는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임신과 출산, 육아 중인 여성 직원을 차별하는 ‘Maternity harassment(일본식 표현 : 마타하라, マタハラ)’ 방지를 관련 법안을 2016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출산에 따른 해고와 퇴직강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²⁷⁾ 또한 장시간 근무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노동관청의 기업대상 제재 강화와 여성의 창업지원체제 구축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여학생의 이공계 선택 확대를 위한 산학관 지원체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학금 등의 경제적 지원과 여학생의 이공계 선택 사례 등을 홍보하여 이공계 여성 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업부문의 여성 인력 육성을 위해

27) 닛케이신문 (2015. 6. 24)

연수확대와 여성 농업경영자 네트워크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OECD는 최근 일본 경제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²⁸⁾ 특히, 여성은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는 경향이 많고 비정규직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등 노동시장에서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여성의 38%만이 출산 후에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며, 남성과 여성간 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확충하고, 제조업·간병·가사도우미 등 세 분야에서 외국인의 일본 현지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확충하기 위해서 개도국에서 파견하는 실습생의 대상인원, 대상직종, 실습기간(최대 3년→5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의 일본 현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일본 해외자회사 외국인근로자의 일본 현지 채용 추진, 일본 간병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일본 현지 취업 확대, 국가전략특구에서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 허용 등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부터 외국인 기능실습 수료자가 건설업에 2년간 종사할 수 있는 한시조치(2020년까지)를 취한 바 있고 이를 조선업 분야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베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노동시간, 파견근로자 등에 관한 노동규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 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정 정규직’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한정 정규직은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보장은 정규직과 동일하나 근무지역과 시간, 직무는 비정규직처럼 한정적인 고용형태이다. ‘한정 정규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무, 노동시간, 근무지 등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 일본식 정규직 고용 시스템인 ‘정사원’의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식의 직무에 따른 고용형태와 구분되는 것이다. 일본식 정규직인 정사원이 가지는 직무의 무한정성은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어렵게 하고 그로 인해 비정규직의 고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 전체의 인적 자본 축적을 저해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참여도 제약한다고 보고 있다. 노동비용의 측면에서도 지난 2013년 4월부터 “동일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무기고용 전환이 의무화”(개정 노동계약법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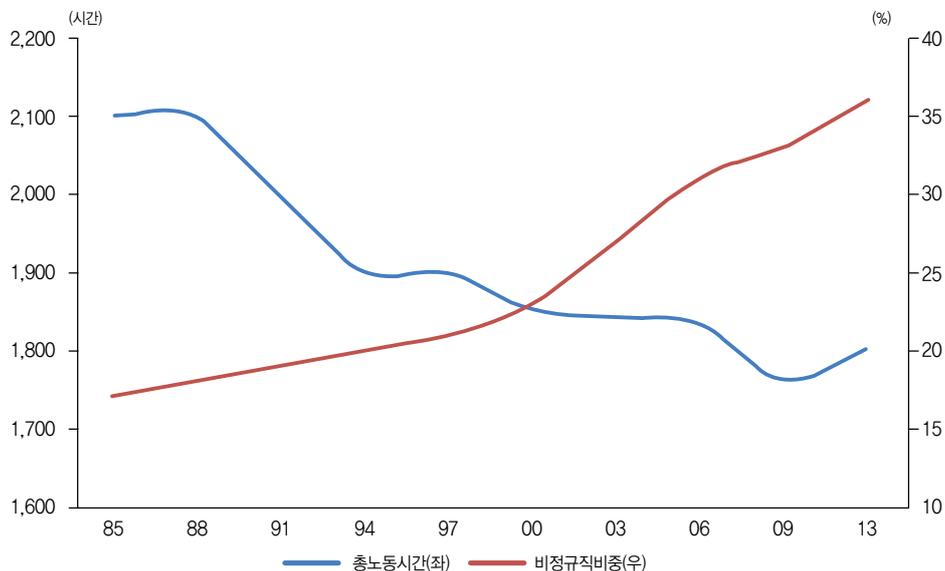
28) OECD Economic Surveys: Japan 2015(2015. 4)

하였다.²⁹⁾ 대부분의 한정적 정규직 임금은 일반 정규직 임금의 80~90% 정도였다.

아베정부는 비정규직 고용 문제의 해결과 경직적인 일본식 정규직 제도의 개혁 방안으로서 ‘한정 정규직’에 주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반 정규직도 한정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미국·유럽식의 고용형태로 점차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근로조건의 명시나 정규직과의 동등대우 등 한정 정규직 정착을 위한 실무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한정 정규직의 해고 규정에 관한 이해 당사자 간 이견이 적지 않아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된 규제개혁 회의에서는 한정 정규직의 경우 해고 가능 사유로서 ‘취업 장소나 종사해야 할 업무가 사라진 것’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정리해고 요건 중의 하나인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 의무 조건을 완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노동자 측의 반발과 기존 정리해고 요건과의 법리적 논란으로 현재까지 보다 진전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³⁰⁾

[그림 36] 일본의 1인당 총노동시간 및 비정규직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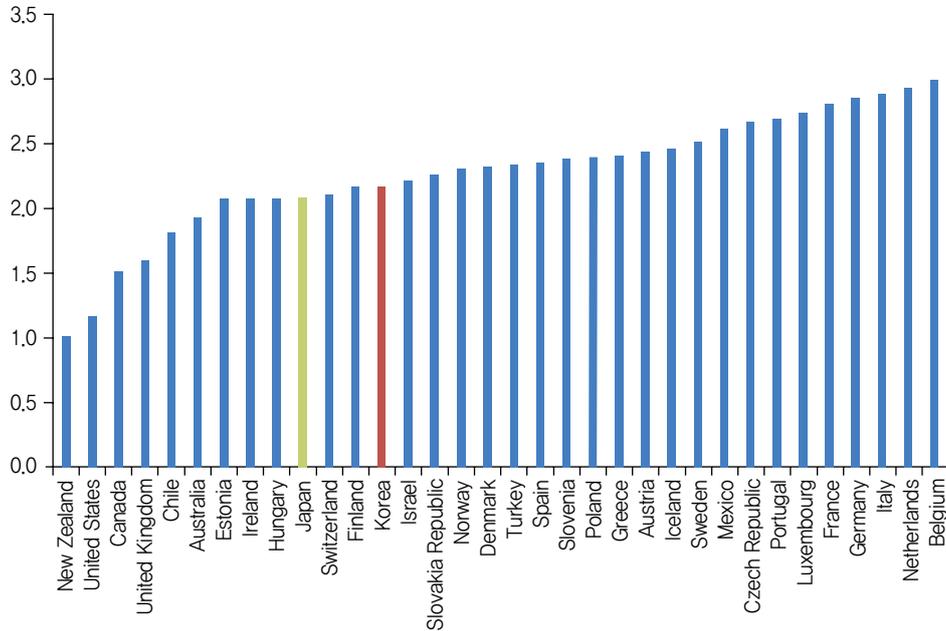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29) 지난 2014년에는 유니클로 1만 6,000명, Japan Post Holdings(日本郵政그룹) 4,700명, 이케아 2,400명의 한정 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졌다.

30) 류상순·문명순(2015)

[그림 37] OECD국가의 고용보호지수 비교



주: 2013년 기준임

자료: OECD, <http://stats.oecd.org>

노동시간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과로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탄력근무제 청산 기간의 연장, 재량노동제 확대, 화이트칼라 면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여성이 탄력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 1개월 단위(청산기간)로 근무하고 있다. 재량노동제란 기업에서 기획,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면 계약에 따라 일정 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대상범위가 제한적이고 절차도 복잡하다.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는 업무, 수입 등에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시간 규제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직무범위가 명확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고연봉 화이트칼라에 대해서는 노동시간규제를 배제하여 100% 성과급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베정부는 이와 같은 노동시간 개혁을 통해 기존의 탄력근무제, 재량노동제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처럼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중심의 임금체계와 비교하면 잔업수당이 없고 무제한의 노동시간을 강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관련된 개혁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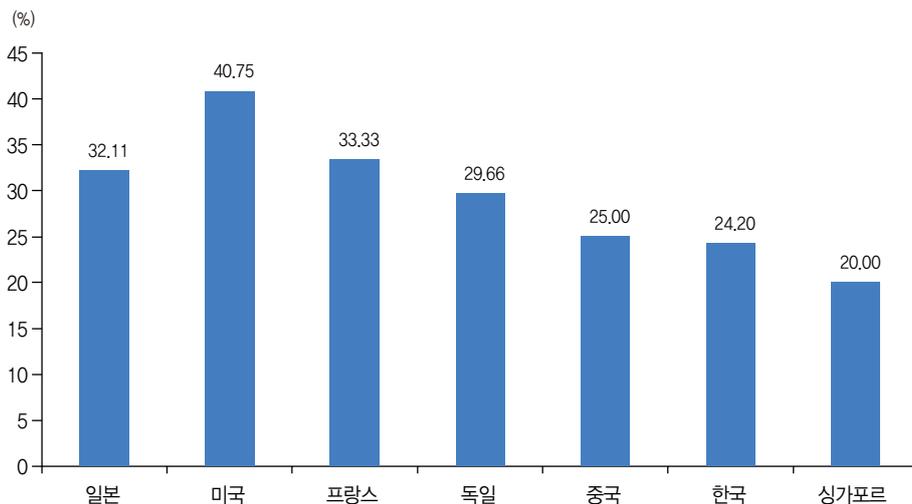
파견근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노동규제개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근로자파견법은 1985년 제정된 이래 파견할 수 있는 업종과 기간이 점차 완화되었으며 2003년 고이즈미정부 때는 제조업 파견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견근로자가 우선 해고 대상이 되면서 파견근로 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2009년 민주당이 집권하자 파견 규제가 강화되어 2012년 일용·단기 파견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아베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통과된 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 규제를 다시 완화하여 일용·단기 파견을 다시 허용했으며 업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오던 파견기간 제한을 사실상 없애 파견노동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기업투자환경조성

(1) 법인세 인하

일본 정부는 2014년 6월 24일 발표한 신성장전략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본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설비투자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인식에 기반 한 것이다.

[그림 38] 주요국의 법인실효세율 비교



주: 2015년 4월 현재
 자료: 일본 재무성

일본의 높은 법인세율은 그동안 자국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실제로 주요 국가들과의 국제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법인실효세율(2013년 35.64%, 도쿄도 기준)은 최대 제조업경쟁국인 독일(29.66%)은 물론 주요 아시아 국가인 중국(25.00%), 한국(24.20%), 싱가포르(20.00%)와 대비되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법인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함으로써 수년 내에 20%대로 낮추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일본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법인실효세율은 2014년 34.62%로 인하되었으며, 2015년 32.11%, 2016년 31.33%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³¹⁾

[표 8] 일본의 법인실효세율 인하 계획

	2014년	2015년	2016년
법인세율	25.5%	23.9%	23.9%
법인사업세율(지방세)	7.2%	6.0%	4.8%
법인실효세율(국세·지방세)	34.62%	32.11%	31.33%

자료: 일본 재무성

한편,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자국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대기업은 법인세 인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일본 경단련은 법인세율 10% 인하 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입지 경쟁력 강화, 기업의 적극적 경영, 이노베이션 추진 등에 힘입어 실질GDP가 35.3조엔 증가하고 세수입은 4.3조엔 증가할 것으로 시산한 바 있다.

반면 법인세 인하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 근거로 법인세 납부대상이 전체기업의 30%에 불과한 점,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보완할 재원 마련 대책이 불확실하다는 점, 2013년부터 즉시상각제도 등 이미 설비투자

31) 일본 언론은 현재 32.11%인 실효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16년 4월에 20%대로 낮추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촉진세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그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인데 비해 부작용은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는 일본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일 법인세율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확대 → 성장률 제고 → 세수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미 국가부채가 GDP의 226%(2014년)에 달하는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표 9]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시산

	효과	구체적 방안
입지 경쟁력 강화	실질GDP 5.2조엔 세수입 0.5조엔	제조업 해외생산비율 1.5% 저하 대일 직접투자 24% 증가 자본비용 2~2.5% 저하
기업의 적극 경영	실질GDP 13.9조엔 세수입 3.0조엔	감소분(4.2조엔)의 인적·자본 투자 내부유보자금(8.3조엔)의 설비·R&D 투자 경제 선순환 실현으로 결손금 감소
이노베이션 추진	실질GDP 16.2조엔 세수입 0.8조엔	경쟁촉진에 의해 TFP 1% 상승
계	실질GDP 35.3조엔, 세수입 4.3조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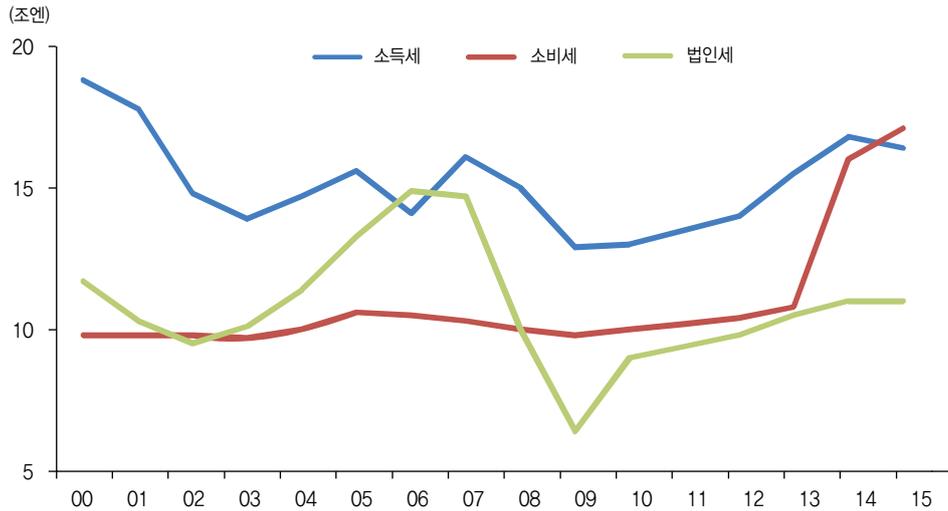
자료: 경단련(2014.5.22.)

2014년 기준 일본의 법인세수액은 소득세수액과 소비세수액에 비해 낮은 11조 엔으로 전체 세수액(54조 엔)의 20.4%를 차지하였다. 법인세수액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최저(6.4조 엔)를 기록한 뒤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2005~2007년 기간 평균인 14.3조 엔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법인세율 1%p 인하 시 약 5,000억 엔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에 아베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추는 대신 법인세 비용 계상 범위를 좁히고,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설비투자 감세액을 축소해 줄어드는 세수를 충당할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입·세출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과세 기반을 넓히고 부족한 세수를 보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과 경제성장 정체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 인하에 따르는 세수 부족분을 보완해줄 정책대안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9] 일본의 세목별 세수액 추이



주: 2015년 4월 현재
자료: 일본 재무성

(2) 국가전략특구

일본 아베정부는 핵심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2013년 4월 ‘국가전략특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한 목적은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타과함으로써 해외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전략거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는 데 있다.

이번 국가전략특구의 지정은 일본에서 추진되는 경제특구로서 처음은 아니다. 일본의 경제특구는 1972년에 제정된 오키나와 진흥개발 특별조치법을 1998년에 개정해 자유무역지구 및 이를 확충한 특별자유무역지구로 지정한 것이 시초이다.³²⁾ 이후 국가전략특구는 2003년 고이즈미정부의 “구조개혁특구”, 2010년 민주당정권의 “종합특구”로 이어지게 된다.

32) 여경진(2013)

[표 10] 일본 특구정책의 시대적 변천

	중앙정부정책	주요 지역	지원제도
구조개혁 특구 (2003년)	지방정부가 특구 계획을 입안하면 중앙정부는 인정하는 소극적 정책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오이타시·오이타시 키타큐슈시·키타큐슈시, 쿠시로시	특구별로 규제특례조치 활용 금융, 세제 지원은 시행하지 않음
종합특구 (2010년)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의를 통해 통합적으로 추진	지방정부의 책임성에 의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역 홋카이도, 삿포르, 츠쿠바	금융, 세제 종합 지원
국가전략특구 (2013년)	총리주도하에 통합 본부를 통해 중앙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여 추진	지방이 아닌 도쿄도, 오사카부·시, 아이치현을 개발	금융지원, 규제개혁, 세제조치 등 종합 지원

자료: 강병호, “일본 아베노믹스 국가전략과 한국의 특구정책 비교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지, 2014.

아베정부에서의 국가전략특구가 이전과 비교해 크게 차별화되는 것은 총리주도 하에 중앙정부가 강력히 추진한다는 점이다. 고이즈미정부의 구조개혁특구와 민주당 정부의 종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먼저 특구선정을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수용하는 Bottom up형의 소극적 방식이었다면, 아베정부의 국가전략특구는 중앙정부가 특구선정을 주도하는 Top down형으로 보다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경제특구제도는 당초 의도했던 목적과 달리 경기활성화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반성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지방정부 주도로 특구가 지정되다 보니 경제과급효과가 큰 핵심지역을 벗어난 경우가 많았고 관료주의 만연으로 부처 간 협업이 어려웠다. 또한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에 의한 획기적인 규제완화도 부족하였다. 아베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강력히 추진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2014년 5월에 도쿄권, 간사이권, 니가타현 니가타시, 효고현 야부시,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오키나와 등 6곳이 1차로 지정되었다. 이어서 2015년 3월에는 아키타현 센보쿠시,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이치현 3곳이 2차로 추

가 지정되었다. 이들 국가전략특구는 지역특성에 맞는 각각의 목표와 정책과제가 설정되었다.

[표 11] 6개 전략특구의 목표 및 중점과제

권역	목표	정책과제
도쿄권 (카나가와현, 치바현 나리타시)	국제비즈니스 이노 베이션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기업·인재·자금 등의 유치 촉진 • 다양한 근무 형태 등 여성인력의 활용 촉진 • 외국인 거주 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의 정비 • 2020년 도쿄올림픽 대비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도시교통 기능 강화 • 기업 등의 혁신 촉진, 신약 개발 등 허브 형성
간사이권 (오사카부, 효고현, 교토부)	의료 등 이노베이션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연구기관·제조회사 등의 집적 및 연계 강화 • 첨단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연구 개발에 대한 장해 요인의 제거
니가타현 니가타시	농업혁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농업 분야의 창업 및 고 용 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품 수출 촉진 • 농지의 집약·집적, 기업 진출 확대 등에 의한 경영 기반의 강화 • 농업벤처 창업 지원
효고현 야부시	고령자를 활용한 휴 경기 경작, 민간사 업자와의 제휴를 통 한 농업 구조개혁, 수출가능한 새로운 농업 모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경기 등 생산농지의 재생 • 새로운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 • 농업과 관광·역사 문화의 통합적 발전을 통한 지역 진흥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창업을 위한 고용개 혁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창업 지원을 통한 개업률 향상 • 벤처기업 고용조건 정비 • 다양한 외국인 수용과 체류자격 재검토
오키나와현	국제관광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정비 • 지역의 강점을 살린 관광 비즈니스 모델의 진흥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5월; 한국무역연구원, 「Trade Brief」, 2015.2. 참조

우선 도쿄권 특구는 국제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글로벌 기업·인재·자금 등의 유치 촉진, 다양한 근무 형태 등 여성인력의 활용 촉진, 외국인 거주 환경 및 비즈니스

스 환경의 정비,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도시교통 기능 강화, 기업 등의 혁신 촉진, 신약 개발 등 허브 형성 등을 정책과제로 설정해 두고 있다.

간사이권 특구는 의료 이노베이션 거점으로 육성할 전략이다. 주요 대상지역은 오사카부, 효고현과 교토부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첨단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 기관·연구기관·제조회사 등의 집적 및 연계 강화와 첨단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연구 개발에 대한 장해 요인의 제거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니가타현 니가타시 특구는 농업혁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농업분야의 창업 및 고용확대 지원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농산품 수출 촉진, 농지의 집약·집적, 기업 진출 확대 등에 의한 경영 기반의 강화, 농업벤처 창업 지원 등이다.

효고현 야부시 특구는 고령자를 활용한 휴경지 경작, 민간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농업 구조개혁, 수출이 가능한 새로운 농업모델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휴경지 등 생산농지의 재생, 새로운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 관광·역사 문화의 통합적 발전을 통한 지역 진흥 등이 추진되고 있다.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특구는 창업을 위한 고용개혁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기업창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개업률의 향상, 벤처기업 고용조건 정비, 다양한 외국인 수용과 체류자격 재검토 등이 포함된다.

오키나와 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국제관광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정비, 지역의 강점을 살린 관광 비즈니스 모델의 진흥 등이 추진되고 있다.

2015년 3월 19일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는 기존 6곳의 1차 국가전략특구 외에 3곳(아키타현 센보쿠시,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이치현)을 2차 전략특구(지방창생특구)로 추가 선정하였다. 특히 2차로 지정된 국가전략특구는 주로 지방과 중소기업의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대도시에 집중되었던 1차 국가전략특구 지정 때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1차와 2차 특구 모두 신속한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국가전략특구의 기본 틀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2차 국가전략특구의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무인비행기(드론), 자동주행 자동차

차, 로봇 등 일본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센보쿠시는 무인비행기를 화산감시, 농작물 피해 조사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며, 아이치현은 무인주행 차량을 이용해 택시서비스 및 무인택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표 12] 2차 국가전략특구의 주요 사업

	특구 성격	주요 사업
아키타현 센보쿠시	농림·의료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의사를 활용한 의료관광 추진 • 국유임야의 민간개방 • 무인비행기(드론) 등 첨단기술의 기술실증
미야기현 센다이시	여성노동력 활용· 사회적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 아동 해소 차원에서 지역 한정의 보육 • NPO 법인의 설립절차 간소화 • 법무국 외에서의 정관승인 허용
아이치현	산업일군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노하우를 활용한 공설민영학교 설립 • 자동주행 자동차 등의 실증 실험 확대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베노믹스의 국가전략특구 추진 현황과 시사점’, 2015.5.

일본 국가전략특구 제도는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 라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중점과제가 논의되고 관련 후속 조치가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에서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 없이 즉시 규제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 암반규제(바위처럼 큰 덩어리로 된 단단한 규제를 칭함)로 통하는 농업, 의료, 고용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까다로운 규제 탓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업계를 비롯해 농업 분야에서 실제 기업투자도 연결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국가전략특구가 과거 시행되었던 특구제도에 비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것은 기존 특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을 통해 총리 주도 하에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아베정부의 장기집권이 이 보장된 상황에서 향후에도 전략특구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일본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결

일본은 2015년 10월 5일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을 포함해 12개국이 참여한 TPP협정을 타결했다. 이번 TPP타결로 세계 GDP의 36%, 교역규모 26%를 차지하는 최대 자유무역경제권이 탄생하게 되었다.[BOX 참조]

BOX.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1. 개요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광역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처음에는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출발하였다. 이후 2008년 미국, 2013년 일본의 참여가 확정되는 등 참여국은 12개국으로 늘었다. (한국은 2013년 11월 29일 가입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2. TPP 경제규모

[TPP협상 참가국의 경제 규모]

(단위: 10억달러, %)

국가	GDP	총무역규모	역내무역	총무역/GDP
세계	77,297	31,325	-	40.5
미국	17,419	3,368	1,357	19.3
일본	4,616	1,267	344	27.4
캐나다	1,789	824	601	46.1
호주	1,444	414	136	28.7
멕시코	1,283	697	495	54.3
말레이시아	327	372	139	113.8
싱가포르	308	658	186	213.7
칠레	258	124	38	48.0
페루	203	70	24	34.6
뉴질랜드	198	71	28	35.7
베트남	186	132	35	71.0
브루나이	15	14	3	93.6
TPP전체 <세계비중>	28,046 (36.3)	8,012 (25.6)	3,387 (10.8)	28.6

주: 2014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3. TPP의 주요 특징

TPP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고 분야도 광범위하다. 일반적인 FTA의 기본적 구성요소인 상품시장 접근(관세철폐)과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 경쟁, 지적재산, 정부조달, 환경, 노동 등 비관세 분야를 포함한다.

TPP 협상분야: 상품시장 접근, 원산지 규칙, 무역원활화, 위생식물검역(SPS), 기술적 무역장벽(TBT), 무역 구제조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서비스교역, 상용관계자의 이동, 금융서비스, 전기·통신서비스, 전자상거래, 투자, 환경, 노동, 제도적 사항, 분쟁해결, 협력, 협상분야 간 포괄사항

4. TPP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차이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TPP와 별도로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이 포함된 RCEP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다. RCEP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와 포괄적인 범위의 FTA를 지향하고 있으나 무역자유화와 협상대상 포괄범위가 TPP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RCEP는 참가국의 사정을 배려하여 어느 정도 무역자유화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며, 협상분야도 정부조달, 노동과 환경 분야는 일부 참가국들의 반대로 제외되어 있다.

일본은 TPP체결로 11개 TPP참여국에 수출(약 19조엔)의 99.9%에 대해 관세가 철폐(즉시철폐 비율은 76.6%)되어 수출확대와 시장점유율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공산품을 중심으로 대부분에서 TPP체결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쌀과 육류로 대표되는 농축산물 분야에서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관련 주요 TPP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산품은 자동차의 경우 부품의 55% 이상을 역내에서 조달하면 관세가 면제되며, 일본차에 대한 캐나다의 6.1% 수입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FTA가 체결되지 않았던 미국으로의 수출은 TPP발효시점에서 무관세대상 공산품의 비율이 39%에서 67%로 높아지게 된다.

[표 13] 일본 관련 주요 TPP 합의 내용

쌀·쇠고기 등 농축 산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효 13년째부터 미국과 호주로부터 각각 7만톤, 8,400톤으로 무관세가 늘어남 • 일본산 소고기는 대미 수출용으로 새로운 수출한도 설정
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등으로부터의 수입확대 • 버터의 부족난 해소에 일조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치, 연어 등의 관세 철폐
자동차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 55% 이상을 역내에서 조달하면 관세 제로 • 일본차에 대한 캐나다의 6.1% 수입관세 철폐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의약품의 데이터 보호기간 8년 → 후발 약의 개발·유통과 균형을 맞출 수 있음
저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기간 50년을 70년으로 연장 → 장기간 수익확보 가능
외자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에 편의점, 은행 진출이 용이

자료: 한일재단

농산품의 경우에는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됨으로써 일본 국내 농가의 타격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쌀은 미국에 5만톤, 호주에 6천톤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입한도가 설정되고 발효 4년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13년째부터는 미국으로부터 7만톤, 호주로부터 8,400톤으로 무관세가 늘어나게 된다. 육류의 경우 관세 철폐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나 이미 관세인하 폭이 큰 돼지고기 생산자단체처럼 거센 저항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일부 농산품의 경우에는 해외수출 기회도 동시에 늘어난다. 예를 들면 와규의 경우 대미 수출한도가 현재 수준의 30배 이상인 6,250톤으로 확대된다. ‘아베노믹스와 TPP가 창조하는 일본’의 저자인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학 교수는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그는 일본은 세계 5위의 농업대국으로 TPP를 계기로 일본농업의 체질이 개선되어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강한 농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한다.

공산품과 농산품 분야 외에도 TPP협상에 포함된 지적재산권, 서비스교역,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금융서비스, 투자, 환경, 노동 분야 등에서 역내 규칙정비를 통

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으로 해외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외자진출 규제 완화에 따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에 편의점, 은행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는 특히 일본 국내시장의 축소로 해외활로를 모색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베정부는 TPP타결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첫째, TPP타결로 인한 무역자유화는 수출확대와 소비증가를 통해 성장률을 제고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TPP교섭에 참가한 2013년 시점에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는 것을 전제로 실질 GDP가 약 3.2조엔 증가하는 것으로 TPP타결의 경제적 효과를 시산한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렴한 농축산물 수입으로 쌀과 육류 등의 국내생산이 2.9조엔 감소하나, 관세철폐에 의한 공산품 수출증가와 값싼 해외제품 수입으로 소비가 증가하여 GDP가 6.1조엔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둘째, TPP를 활용해 농업, 노동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했던 부문에서의 암반규제 개혁을 좀 더 손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당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셋째,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에 밀려 FTA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어온 것을 만회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은 FTA에 적극적인 한국과 중국에 밀려 고전해 왔으나 TPP타결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FTA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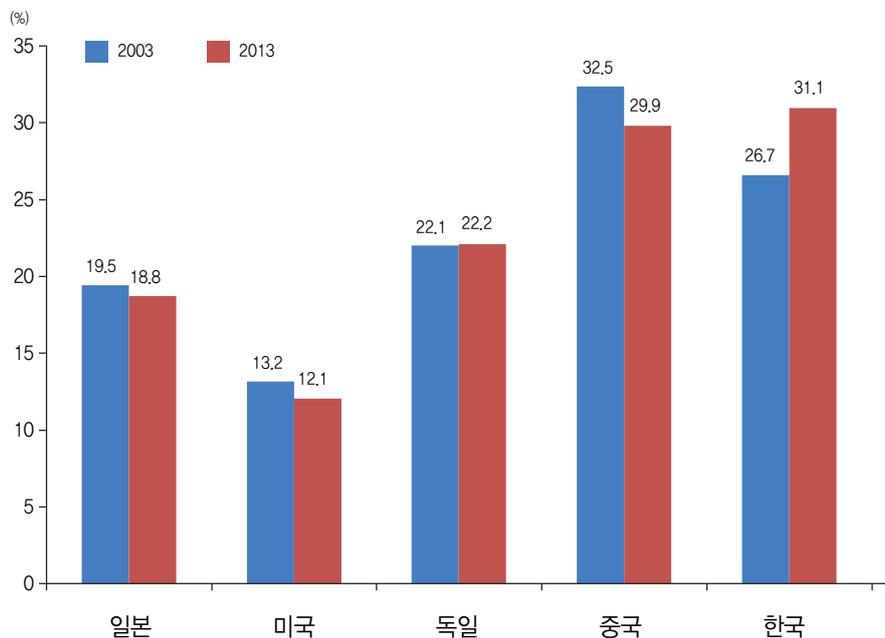
일본의 TPP체결은 우리나라에도 무역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 가운데 6개 나라가 TPP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으로 무역금액은 3,553억 달러,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4%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TPP회원국 간 관세 감축으로 인해 우리의 TPP 6개국에 대한 수출 일부가 TPP 역내국간 교역으로 대체되는 무역전환효과는 최소 약 5.97억 달러에서 최대 25.0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³³⁾

33)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3)

(4)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일본은 제조업 강국으로 통한다. 일본 제조업은 GDP(명목, 2003년 기준)의 약 20%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혁신과 기술, 그리고 다른 산업에 강력한 파급효과(ripple effect)를 미치며 일본경제 성장을 주도해왔었다. 하지만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 과정에서 경쟁력 약화와 경영환경 악화에 직면하여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었다. 이는 일본의 최대 제조업 경쟁국인 독일이 꾸준히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시키고 산업 비중을 유지해 온 것과는 대비된다.

[그림 40] 주요국의 제조업 비중(GDP대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진행됨에 따라 200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발표하고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의 자국이탈과 산업공동화는 점점 심화되었으며, 제조업 경쟁력 회복은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아베정부는 경제산업성을 주무부처로 지정해 기존 전략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제조업의 시장환경과 기업행동 변화를 진단해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산업성은 일본 제조업이 당면하고 있는 시장환경과 기업행동 변화들로 인
구 감소 등으로 인한 국내시장의 축소, 해외시장의 확대, 기업의 글로벌 최적생산,
디지털화에 의한 산업구조 개혁 등을 거론하였다.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일본의 제
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응 과제로 ①국내 모노즈쿠리³⁴⁾ 기반정비, ②수익력 향
상, ③디지털화에 의한 변혁에 대응, ④인재 육성 등이 제시되었다.

① 국내 모노즈쿠리 기반 정비

일본 모노즈쿠리 기반 정비를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법인세 인하, FTA추진, 에
너지 비용 상승 대응, 환경규제 대응,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임금인상 등이 제시되
었다. 우선 세제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20%대까지 인하하는 것을 목
표로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FTA추진과 관련해서는 일본 무역의 FTA 커버율
을 현재 22.7% 수준에서 2018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1월 일본·호주 FTA발표, 2월 일본·몽골 FTA서명, 10월 TPP협
정 타결의 성과를 이미 도출하였으며, 이외 일본·EU FTA, RCEP, 한중일 FTA교
섭을 추진 중에 있다.

모노즈쿠리 기반 정비 차원에서 일본의 에너지비용 상승에 대한 정책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의 에너지비용 상승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산업용 전
기요금의 평균단가가 약 30% 상승한 것은 단적인 예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최신
에너지설비 도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절약 진단 등 에너지대책을 강
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30년을 목표로 저탄소사회 실현계획을 세워
놓고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미 56개 업종을 계획 대상으로 책정
하고 산업·에너지부분의 CO2배출량 기준의 73%를 커버하고 있다. 이외 경제의 선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금인상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
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34) 후지모토 다카히로 동경대 대학원 교수가 제조업에 강한 일본기업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한 말. 물건을 뜻하는 '모노'와 만들기를 뜻하는 '즈쿠리'가 합성된 용어로, '혼신의 힘을 쏟
아 최고의 물건을 만든다.'는 뜻.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독특한 제조문화를 일컫는 대
명사로 사용

② 수익력 향상

제조업 수익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사업재편 및 협력관계 구축, 신시장 창출, 글로벌 수익 획득이라는 기본 틀이 제시되었다. 사업재편의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산업경쟁력강화법 50조에 의해 상품·서비스의 수급동향, 각 사업 분야의 과잉공급 상태 여부, 기타 시장구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책당국은 신 시장 창출을 위하여 미래 유망업종 발굴과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미래 유망업종으로는 차세대자동차, 항공기, 우주, 로봇, 신소재, 재생의료, 바이오 의약품 등이 선정되었다. 또한 규제개혁으로는 기업실증특례제도(기업단위의 규제개혁)와 그레이존 해소제도³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 글로벌 수익력 향상을 위해서는 외국에 불공정무역이나 비관세장벽 문제를 개선토록 요구하기로 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규제도입이나 물 등의 제도 수출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③ 디지털화에 의한 변혁에 대응

일본은 향후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진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혁 등 급격한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제조업 경쟁국인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생산시스템[BOX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전략 참조]전략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자체 전략개발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방의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적극 도전하도록 독려하고, 2014년부터 글로벌 니치톱(GNT : Global Niche Top) 100개 기업의 선정을 개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나아가 장래 GNT기업이 될 수 있는 중견기업에는 범정부차원에서 인재확보와 육성, 제품 개발 및 생산, 글로벌 진출에 이르기까지 정책패키지로 지원키로 하였다.

35) 그레이존 해소제이란 기업이 추진하는 신사업이 기존 제도에 없거나 규제가 적용될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기업이 요청하면 정부 주무부처가 1개월 이내에 명확한 해석을 해주는 제도

BOX.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전략

독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미래 경쟁력을 더욱 제고시키기 위해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이라는 제조업 진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과 같은 전통 산업에 IT시스템을 결합하여 인텔리гент한 스마트 공장으로 진화하자는 것이다. 독일은 IT와 기계산업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생산 과정이 최적화되는 ‘4차 산업혁명(2013년)’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인더스트리 3.0’에서 생산이 부분적 최적화에 그쳤다면 ‘인더스트리 4.0’은 사물인터넷을 통해 완전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최적화된 상품제조 플랫폼(완전자동 생산공정시스템)을 조성해 전체 생산공정을 최적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더스트리 4.0’은 사람, 사물, 서비스 간 임베디드 시스템(기계 또는 전자장치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두뇌역할을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칩에 담아 기기에 내장시킨 장치로 대부분의 디지털기기, 전자기기에 사용)을 통해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지능형 생산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기존 제조업의 생산방식을 스마트 및 그린형 생산 방식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혁신 단계 비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기	18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1970년 이후	2020년 이후
혁신 부문	물증기의 동력화	전력, 노동분업	전자기기, ICT 혁명	ICT 제조업 융합
커뮤니케이션 방식	책, 신문 등	전화기, TV 등	인터넷, SNS 등	사물 인터넷 서비스 간 인터넷
생산 방식	생산 기계화	대량 생산	부분 자동화	시뮬레이션을 통한 자동 생산
생산 통제	사람	사람	사람	기계 스스로
독일 산업정책	Industry 1.0	Industry 2.0	Industry 3.0	Industry 4.0

자료: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독일은 사물 간 인터넷, 서비스 간 인터넷의 확산으로 사람, 제조과정, 제품 까지도 양방향의 정보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이들 간에 형성된 빅데이터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생산시물레이션을 가능케 하는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을 구축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기존 생산방식을 맞춤형, 소량 생산으로 변화시키고 생산주체와 과정 등도 유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 생산과정, 서비스 등 임베디드 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빅 데이터가 형성됨으로써 이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고용 형태의 변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독일 국가과학위원회는 ‘인더스트리 4.0’으로 산업부문에서 생산성이 30% 가량 개선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을 통한 기대 효과]

	진화 방향	내 용
생산체계	미래형 생산체계로 변화	- IT 시스템에 기반한 정보로 정확한 수요 예측 - 맞춤형·소량의 미래 생산 방식으로 전환
	유연한 생산체계 자원 효율성 제고	- 다른 곳에 위치한 공급자의 신속한 참여 유도 - 생산 과정의 질적·가격·자원 효율성을 제고
가치창출	신사업 기회 창출 고용 형태 다변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빅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 고용 형태 다변화 - B2B서비스의 촉진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창업도 활성화
업무환경	일-가정 양립	- IT와 생산체계의 결합으로 업무 유연성이 확대 - 도심형 생산으로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

자료: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④ 인재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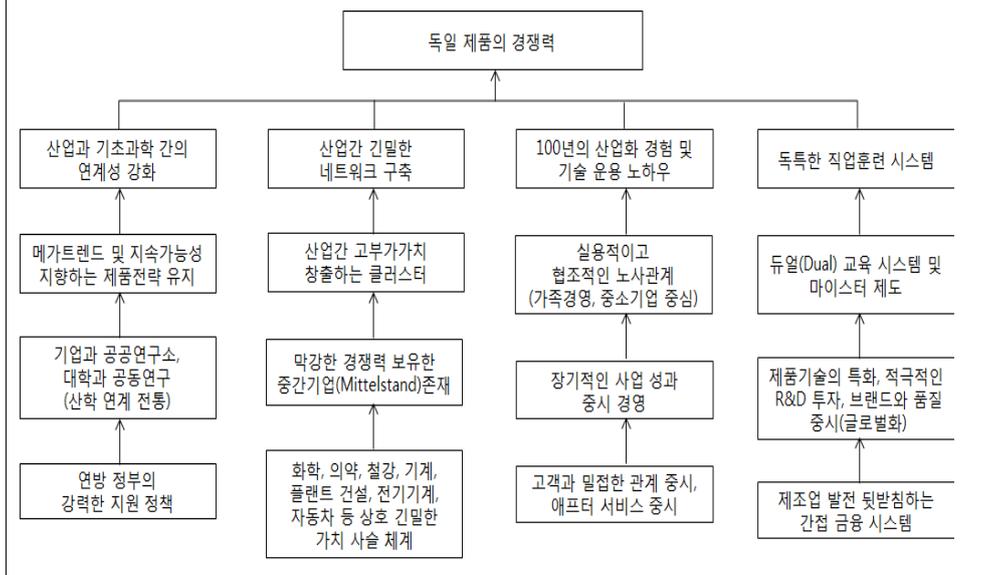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인재 확보와 육성도 중요하다. 일본의 모노즈쿠리 산업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여 왔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종업원 수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정책당국은 각종 지원을 통해 모노즈쿠리 산업을 유지하고 확대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장인의 역할이 중요한 모노즈쿠리 산업에서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폴리텍칼리지 등과의 연계, 모노즈쿠리 마이스터에 의한 모노즈쿠리 매력 홍보, 기업 내 인재육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업 니즈를 고려한 여성 기능자 인재 육성 프로그램 실시, 주문형 직업훈련의 활용 촉진, 기능검정 시험의 촉진 등이 실천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BOX.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 상승 요인

독일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원천은 글로벌화로 국가 간 분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여타 선진국이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서비스업의 발전에 중점을 둔 반면 독일은 비교 우위를 가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온 데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은 첫째, 막강한 경쟁력을 유보하고 있는 많은 중견기업(Mittelstand), 산업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산업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클러스터 활성화, 둘째, 100년의 산업화 경험과 기술운용 노하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장기적인 사업성과 중시 경영, 셋째,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제품기술의 특화, 듀얼 교육시스템(마이스터 제도) 등 독특한 직업훈련시스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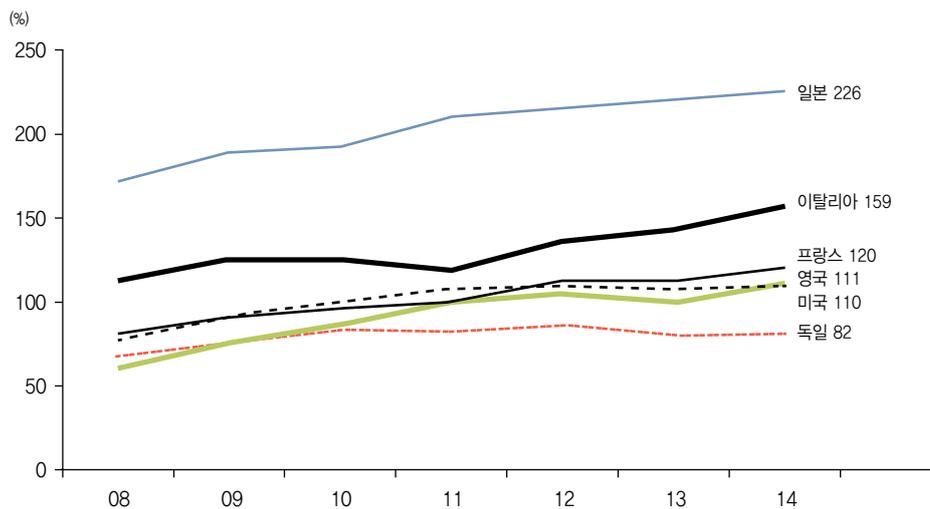


다. 재정부문 개혁

(1) 재정개혁의 배경

일본의 국가채무는 2014년 기준 명목GDP 대비 226%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른 선진국을 보면 이탈리아 159%, 프랑스 120%, 영국 111%이며,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도 110%에 불과하다. 채무비율뿐만 아니라 채무비율이 상승하는 속도도 높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유럽 각국이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하면서 2008년 대비 2014년 국가채무비율이 영국 49.3%p, 이탈리아 49.0%p, 프랑스 38.6%p, 미국 32.0%p, 독일 14.1%p 증가하였으나 일본은 이보다 현저히 높은 54.9%p가 증가하였다.

[그림 41] 일본 및 선진국 국가부채 추이



주: 명목GDP 대비 비율,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포함)
 자료: 일본 재무성, 「日本の財政關係資料」, 2015.9.

[표 14] 일본의 GDP대비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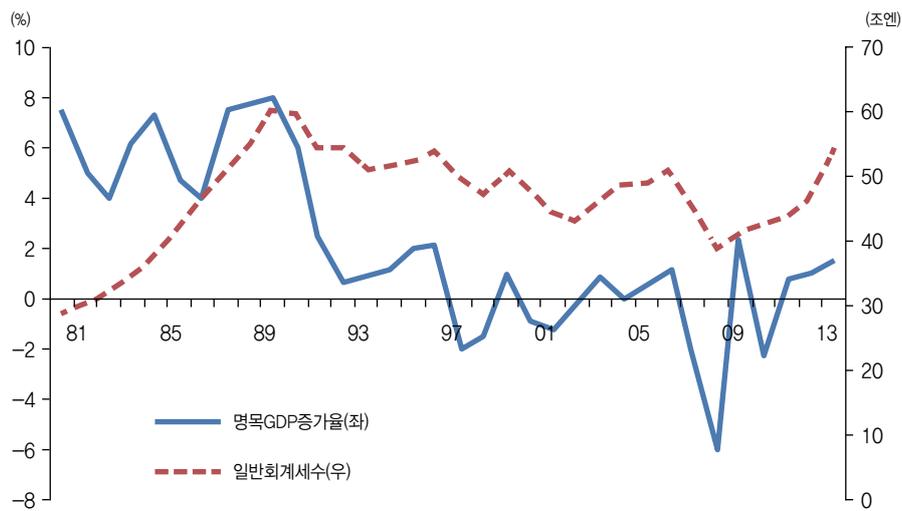
(단위: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재정적자	-1.3	2.1	-4.6	-7.5	-4.8	-8.3	-8.8	-8.7	-8.5	-7.7	-6.7
정부부채	70.9	65.3	88.2	136.1	169.6	193.2	209.4	215.4	220.3	226.1	229.2

자료: OECD

이처럼 일본의 국가채무가 높은 것은 경제침체 및 그에 따른 세입부진, 세입을 초과하는 세출이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일본경제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 부진한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1998년부터는 명목성장률이 0%를 중심으로 변동하여 1998~2008년 기간 중 연평균 명목성장률이 -0.6%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장기간 명목성장률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은 물가하락기조가 이어지는 소위 디플레이션 하에 놓임에 따라 일본경제가 만성적인 경기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하락기조 하에서는 물가상승기조에 비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경제가 장기간 침체양상을 보이자 조세수입 부진으로 이어졌다. 일반회계 기준 조세수입이 1998년부터 감소세로 들어서면서 2009년에는 38.7조 엔으로 1990년 60.1조엔의 64% 수준으로 감소하기도 하였다.

[그림 42] 일본의 명목GDP성장률과 세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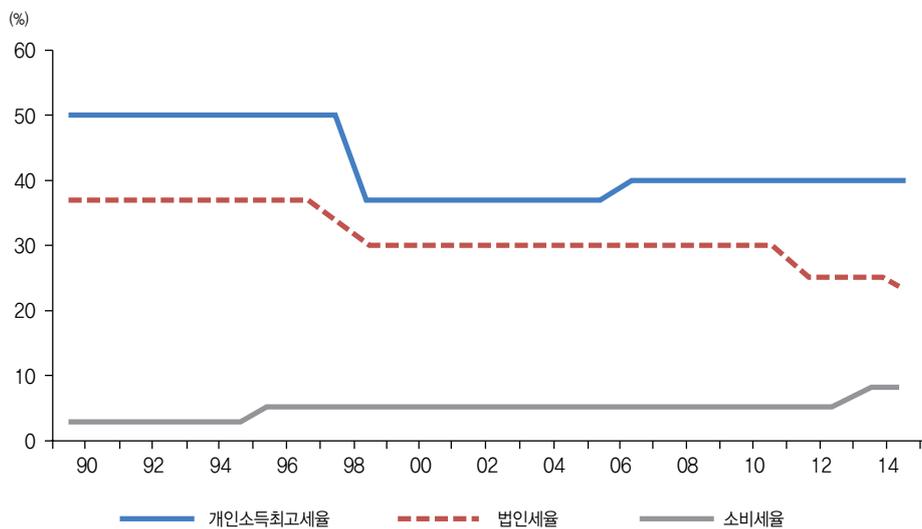


자료: 일본 재무성, 「日本の財政關係資料」, 2015.9., IMF Database

조세수입의 부진은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일본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하여 실시한 감세정책에도 일부 기인한다. 조세수입 중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세율 추이를 보면 개인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1990년 50%에서 1999년에는 37%로 낮아졌다. 2007년부터는 과세구간을 기존 4개 구간에서 6개 구간으로 확대하면서 최고세율이 40%로 상승하기는 했지만 최저세율도 10%에서 5%로 낮추는 조치도 함께

취해졌다. 법인세율은 1987년 43.3%에서 42%로 인하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조치가 취해졌는데 1990년에는 37.5%, 2015년에는 23.9%까지 하락하였다. 다만 1989년 도입된 소비세율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1997년 3월까지 3%를 유지하다 4월부터 5%, 2014년 4월 8%로 인상되었다. 이처럼 소비 및 투자를 자극하여 경기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인하가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하였고 결과적으로 세수감소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재정적자는 더욱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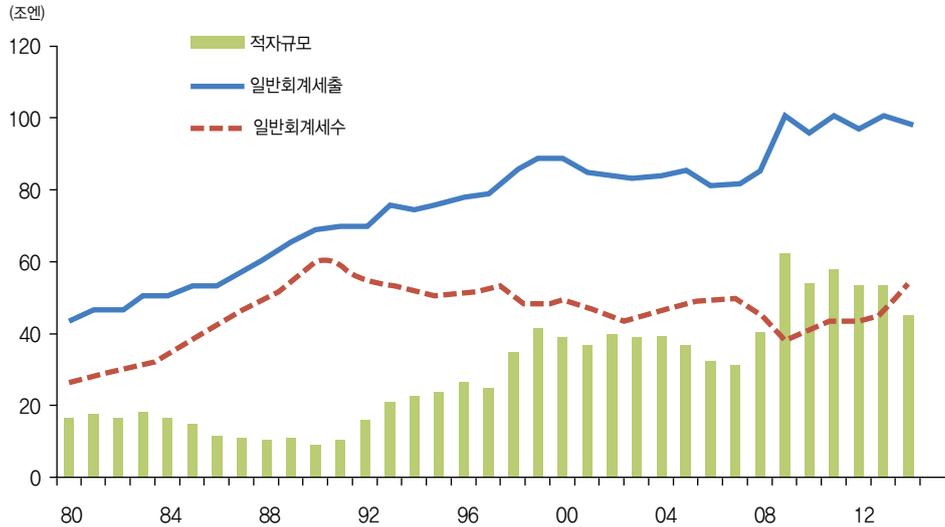
[그림 43] 일본의 3대 주요 세율 추이



자료: OECD Tax Database

세출측면에서 보면 일본정부는 1990년대부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기부양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세출을 확대시켜 왔다. 1992~2000년 중 10회의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136.3조엔의 재정을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일반회계의 지출증가율이 연평균 2.8%에 이르렀는데, 동기간 중 일반회계 세수 증가율이 -1.7%였음을 감안할 때 과감한 재정지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1990년대에는 재정적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2000년대에도 대규모 재정적자가 구조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3년 중에는 적자규모가 조세수입(일반회계) 규모보다 커지기도 했다.

[그림 44] 일본정부의 일반회계 세출·세입과 재정적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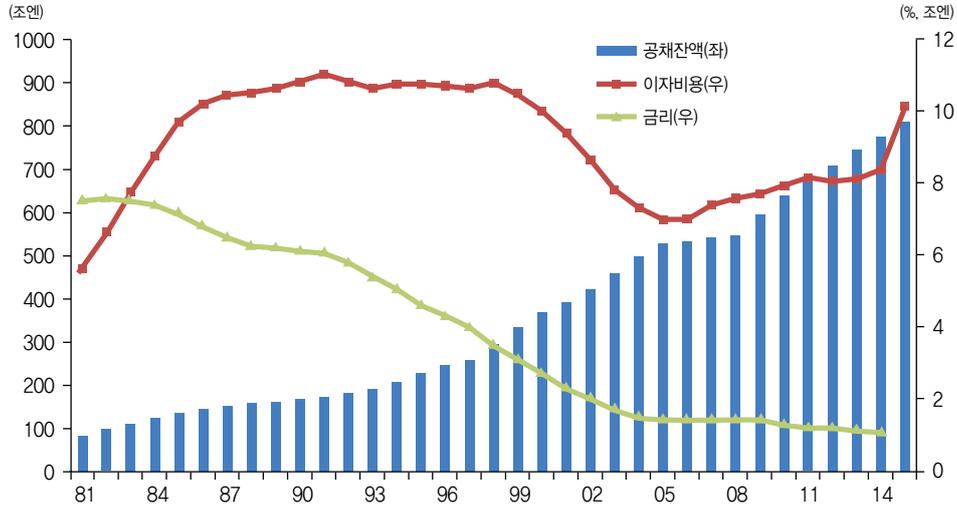


자료: 일본 재무성, 「日本の財政關係資料」, 2015.9.

일본정부의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의 둔화세 및 세수부진으로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한 공채발행이 급증하였다.³⁶⁾ 1990년 공채잔고가 166조엔(GDP 대비 36.9%)이었으나 2014년에는 774조엔(GDP 대비 158.7%)에 이르렀다. 이자비용은 1990년 10.8조원 수준에서 2000년대에는 시장금리의 하락세에 따라 감소세를 보였으나 국채잔액이 급증하면서 2007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6) 일본의 경우 국채는 「재정법」 제4조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4조 공채, 특례법을 제정하여 발행되는 특례공채, 동일본재해복구를 위해 제정된 「부흥재원확보법」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부흥채로 구분된다. 「재정법」 제4조 1항은 “국가의 세출은 공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공사업비, 출자금 및 대출금의 재원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 안에서 공채를 발행하거나 차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4조 공채는 공공사업비 등의 재원 조달을 위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건설국채라고도 한다. 「재정법」은 4조 공채 이외의 국채발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적자국채는 그에 따른 특례법을 제정하여야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특례공채는 적자국채라고도 하는데, 공공사업비 이외의 사업 목적으로 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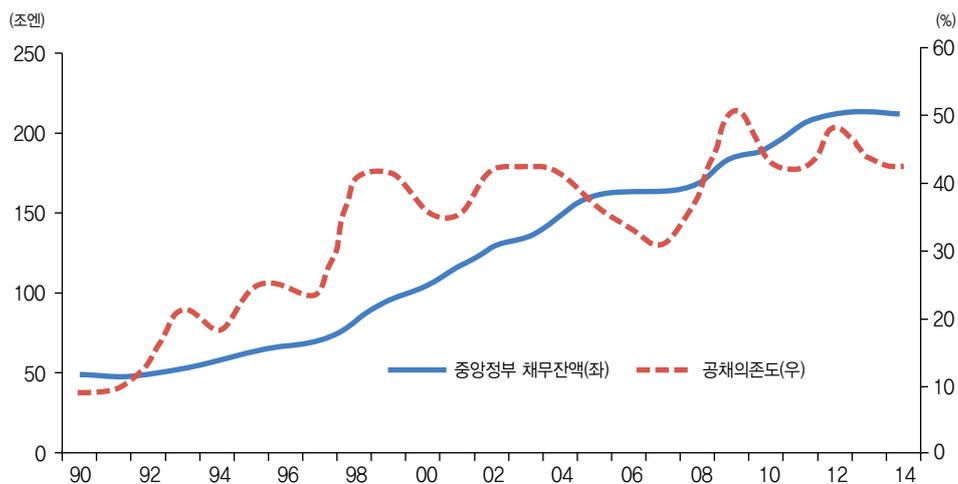
[그림 45] 일본 공채 잔고와 이자율 · 이자 비용 추이



자료: 일본 재무성, 「日本の財政關係資料」, 20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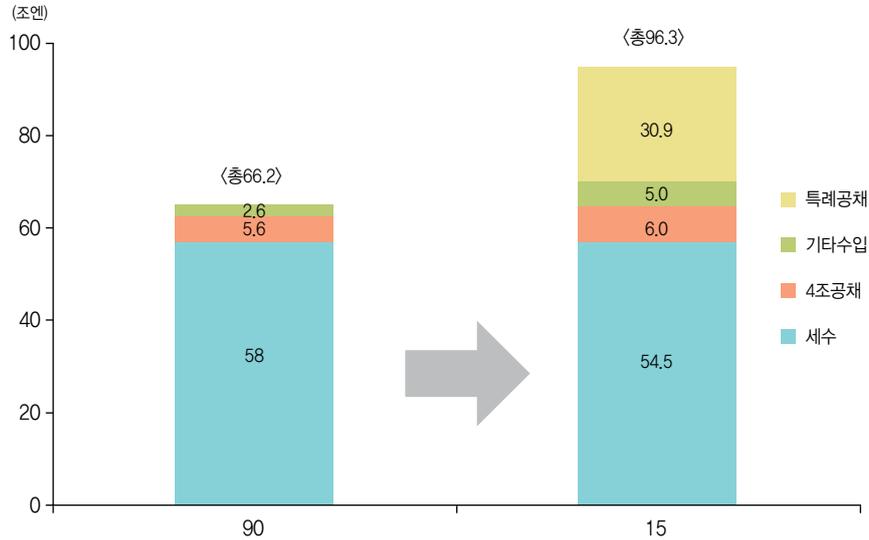
공채의 발행은 재정적자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지만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되자 공채발행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국가 재정의 공채의존도)이 상승하였다. 1990년 공채수입이 5.6조엔으로 전체 재정수입(일반회계)의 8.5% 정도였으나 2015년에는 36.9조엔으로 38.3%까지 공채수입 의존도가 크게 상승하였다.

[그림 46] 일본정부의 채무비율 및 공채의존도 비율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용역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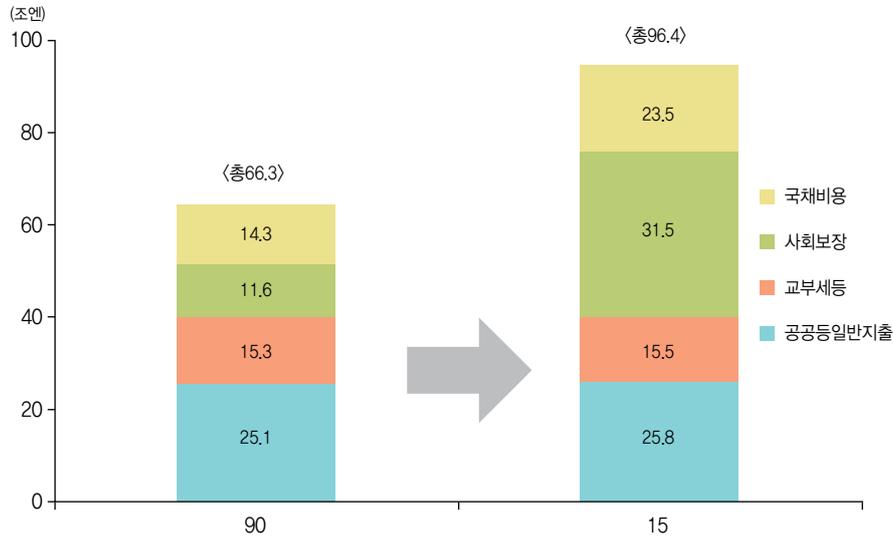
[그림 47] 일본 세입(일반회계)구조 변동



자료: 일본 재무성, 「日本の財政關係資料」, 2015.9.

이러한 공채발행의 증가는 세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공채발행이 급증하자 일본정부의 세출에서 차지하는 국채비용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1990년에 14.3조엔(전체 세출의 21.6%)이었던 국채비용지출이 2015년에는 23.5조엔(전체 세출의 24.4%)으로 증가하였다. 국채비용의 비중이 동기간 중 2.8%p 상승하여 다소 높아진 것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재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문제는 재정의 경직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2015년에는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와 사회보장지출이 199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지출의 비중이 1990년 37.9%에서 2015년 26.8%로 크게 하락하였다. 결국 국채원리금 상환비용을 개선하지 못함으로 인해 재정자금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둘째, 공채잔액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국채비용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시장금리 하락 때문이다. 만약 재정적자의 개선이 없이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국채비용의 상승에 따라 재정사정은 더욱 악화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림 48] 일본 세출(일반회계)구조 변동



자료: 일본 재무성, 「日本の財政關係資料」, 2015.9.

(2) 아베정부의 재정개혁 방향

아베정부는 2015년 6월 30일 경제 및 재정의 회복을 위한 계획³⁷⁾을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 가지 목표(디플레이션 탈출·경제 재생, 세출개혁, 세입개혁)를 설정하였다. 그 중 재정건전성 회복을 목적으로 또 다른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실현하고 둘째, 2020년 이후에는 GDP 대비 채무잔액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적자의 축소를 추진함에 있어서 2018년에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비율을 1% 정도로 축소한다는 중간 목표도 설정하였다.

세출개혁에 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첫째, 공공서비스 산업화의 추진이다 공공서비스는 의료·개호, 육아 등의 사회보장서비스를 포함하는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37) 아베정부는 2012년 말부터 3가지 화살(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성장전략)로 대표되는 경제회복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전략에 관해서는 매년 조금씩 내용을 조정해왔다. 아베는 2014년 12월 총선에서 경제·재정재건계획을 2015년 여름까지 발표한다는 공약에 따라 이를 2015년 6월 30일 일본 정부 각의 결정을 통해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5’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동 계획 중에는 경제회복과 재정개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는데 이를 “경제·재정재생계획”이라고 부른다.

둘째, 인센티브 개혁을 통해 낭비를 없애고 공공서비스의 양적인 증가는 억제하지만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공서비스의 혁신으로,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업무의 간소화·표준화, 선진적인 서비스를 보급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공공지출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출 개혁은 공공 부문의 효율성 향상, 공공자본스톡(사회자본, 토지, 정보 등)과 민간 자금의 활용,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적절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경제회복을 도모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려 하고 있다.

세제개혁에서 핵심은 성장지향적인 세제개편이다. 먼저 법인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단기에는 세수감소를 감수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구조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새로운 세입의 확대를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의 산업화’와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점유율을 높여 과세 기반을 확대하려하고 있다. 반면 사회보장용 재원확보를 위하여 소비세율은 10%로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젊은 세대의 활력 유지, 소득형태별 및 세대간·세대내 과세의 형평성 등에 기여하고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과세구조의 재설계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국가·지방정부가 보유한 재산의 활용,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세외 수입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수익을 채무 상환 또는 재해 복구 등 세출요인이 추가로 발생 시 활용키로 하였다.

[표 15] 아베정부의 재정개혁정책 방향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정부의 기초재정수지를 2020년까지 흑자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에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비율을 1% 수준으로 축소 ○ 2020년 이후에는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비율을 안정적으로 인하
<p>세출 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베 내각 출범 후 지난 3년간 실질적인 일반세출의 증가폭이 1.6조엔 수준에 그쳤으며, 이러한 억제기조를 2018년까지 지속 ○ 사회보장지출도 동기간 중 실질적으로 1.5조엔 증가로 억제되었으며, 이러한 기조를 2018년까지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재정의 효율화 측면에서 제도개혁을 지속: 인센티브 개혁으로 효율화, 사회보장분야의 산업화, 공공서비스 혁신(업무 간소화, 표준화, 선진기법 도입, 정보 공시 등) - 특히 사회보장 분야에서 후발약 사용 촉진, 75세 이상 자기부담 인상 등 검토 ○ 사회간접자본 정비를 통해 비용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의 세출은 중앙정부의 세출 기조에 부합되도록 운영하되 교부금은 2018년까지 2015년 세출 수준을 실질적으로 유지
세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방침: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상호 밀접하다는 인식 하에 동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장지향형 법인세 개혁 ② 저소득 청년층 육아세대의 활력을 유지하고 사회적 격차의 고정화 방지 ③ 근로방식과 소득의 형태에 따라 중립성·공평성을 확보 ④ 세대간·세대내 공평성 확보 ⑤ 지역간 세원의 편중 시정 ○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기반을 재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맞벌이 가정의 육아편의 도모 ② 사회적 격차의 경직을 방지하여 젊은이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 성장을 구현 ○ 개혁의 중심이 되는 개인소득세의 경우 종합적으로 세부담구조를 재검토

자료: 일본 내각부, “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 2015.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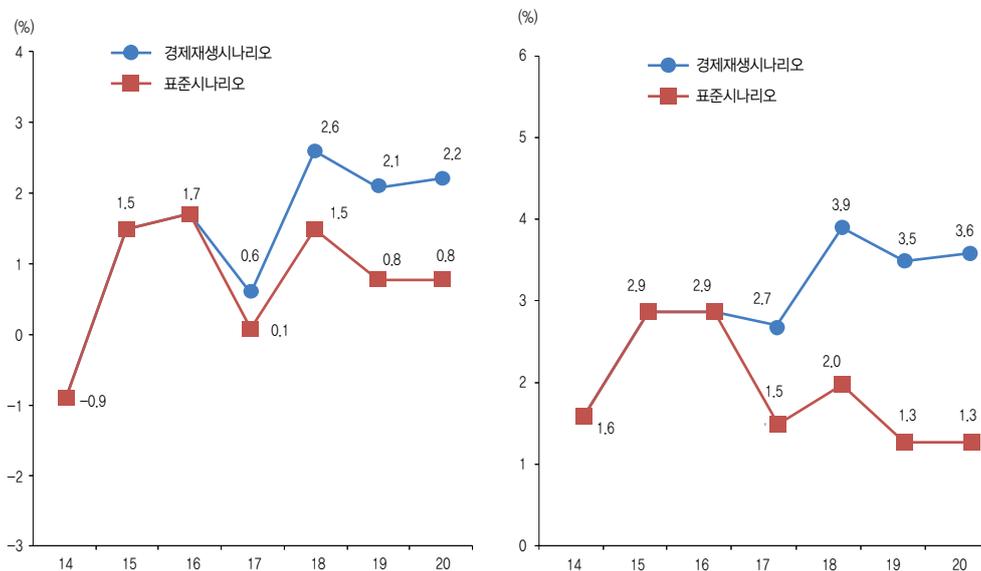
아베정부는 경제·재정재생계획을 통해 경제와 재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화와 경제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즉, 경제회복이 재정을 건전화시키고 건전성이 높아진 재정이 다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시키려 하고 있다. 경제회복을 위한 성장지향형 법인세 개편(법인세율 인하 등), 규제 개혁, 외국인 직접 투자 등을 더욱 촉진하고, 건강 산업, 관광, 농림수산업, 에너지 등의 성장 산업화, 로봇·인공지능과 빅 데이터의 오픈을 통해 구체적인 경제산업전락을 수립하고 있다. 기업의 수익 개선이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에 결합되어, 그것이 소비와 투자 확대요인으로 작용토록 하는 선순환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다. 즉 기업의 수익성이 임금상승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는 경로를 중요 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실질경제성장률 2%, 명목경제성장률 3%를 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아베경제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본정부 분석

일본 내각부는 2015년 7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세 가지 화살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복정책의 거시적·재정적 효과를 전망하였다. 표준시나리오는 현재와 같이 일본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이다. 이에 대비되는 것이 경제재생시나리오인데 경제회복정책이 효과가 발휘되어 중장기적으로 일본경제가 실질기준 2%, 명목기준 3%를 성장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재생계획이 원활히 추진되어 일본의 경제성장세가 높아지는 경제재생시나리오의 경우 2018년에 전년대비 2.6%, 2020년에는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표준시나리오에서는 각각 1.5%, 0.8%에 그쳐 경제재생시나리오와 경제성장률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명목경제성장률의 경우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데 2020년에는 표준시나리오와 경제재생시나리오의 격차가 2.3%p에 이르러, 실질성장률(1.4%p)보다 확대되었다. 이는 경제·재정재생계획을 통해 현재 일본경제가 당면한 디플레이션이 극복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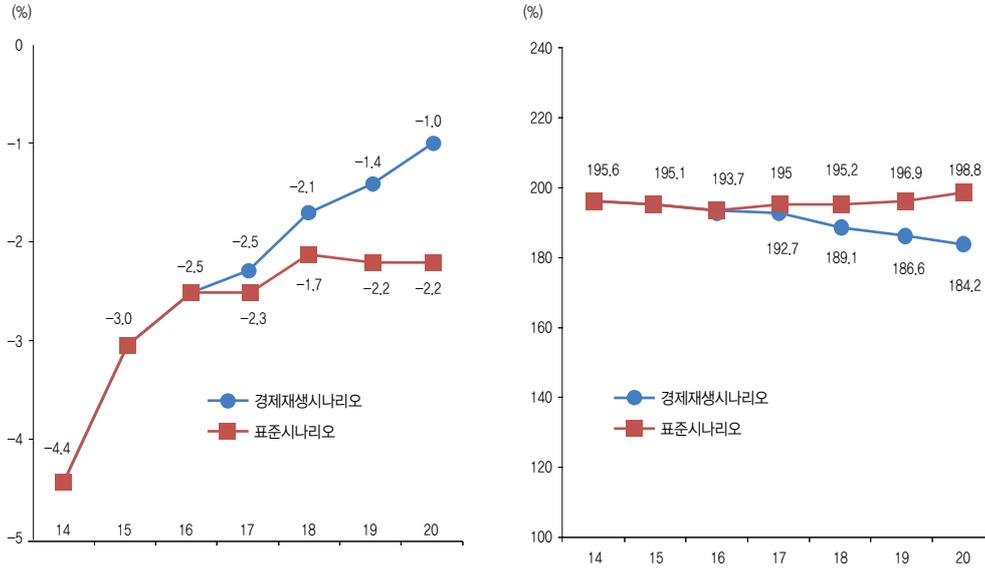
[그림 49] 시나리오별 실질GDP성장률(좌)과 명목GDP성장률(우) 비교



자료: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關する資料 試算”, 2015.7.

양 시나리오 간 경제성장률에 차이가 재정의 지출·수입의 차이를 야기하여 2017년부터 재정수지에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2020년에는 표준시나리오에서는 GDP 대비 기초재정적자비율이 2015년 3.0%에서 2020년 2.2%로 소폭 개선되지만 경제재생시나리오에서는 1.0%로 다소 큰 폭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명목 GDP에 대한 공채잔액비율도 2020년에 표준시나리오에서는 198.8%로 2015년 (195.1%) 이후 악화되는 추세가 이어지지만 경제재생시나리오에서는 184.2%로 하락하여 재정사정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0] 시나리오별 기초재정적자 비율(좌)과 공채발행잔액비율(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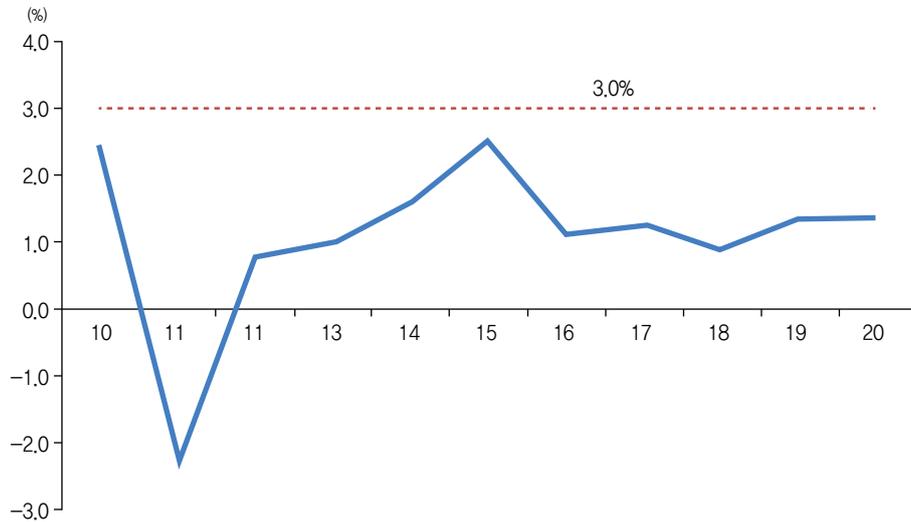


주: 1. 기초재정수지비율은 중앙·지방정부의 일반회계수지에서 국채 순이자를 공제한 후 명목GDP로 나눈 것
 2. 공채잔액비율은 국채, 연금특례공채, 지방채, 교부세특회차입금의 합을 명목GDP로 나눈 것
 자료: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關する資料 試算”, 2015.7.

(4) 아베정부의 재정개혁에 대한 국내외 평가

최근 3년 동안 아베정부의 3가지 화살 중 2개의 화살(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성 있는 재정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의 상승에다 소비세율의 인상(2013년 4월 5%에서 8%로 인상)과 세출효율화 노력이 더해지면서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적자비율이 2010년 6.6%에서 2015년에는 절반 수준인 3.3%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에도 아베정부가 목표하는 재정개혁이 달성될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그 이유는 첫째, 일본정부가 전제하고 있는 경제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것이다.

[그림 51] IMF 일본 명목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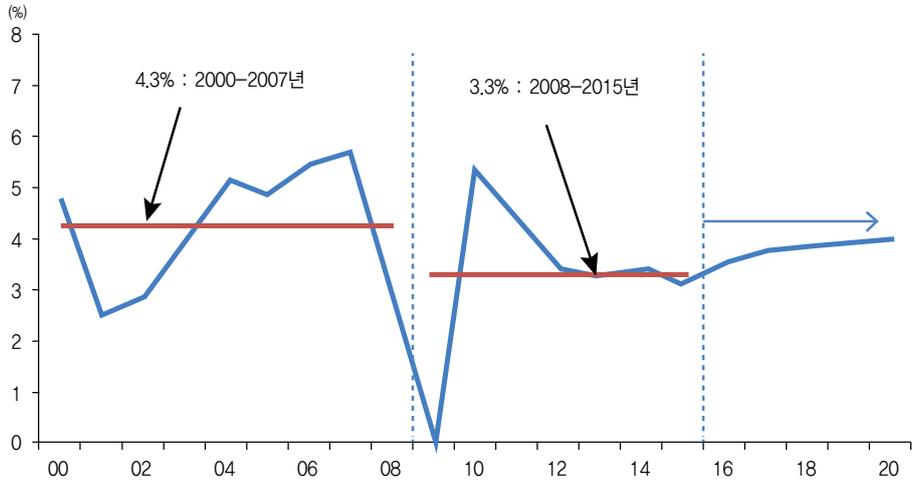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Database, October 2015

아베정부의 재정개혁은 중장기적 실질경제성장률 2.0%, 명목경제성장률 3.0%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만 해도 명목경제성장률이 2.5%(IMF, 2015.10)에 그칠 전망이다. 또한 IMF는 2016~2020년 중 명목경제성장률이 0.9~1.4% 구간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아베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3%와는 괴리가 크다. 실질경제성장률도 2015~2020년 기간 중 0.4~1.0%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경제 성장세가 아베정부의 예상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세계경제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과 후에 다른 경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로지역 등 선진국의 경제성장세가 위축되면서 세계경제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풍부한 국제유동성에 힘입어 신흥개도국들이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으나 최근에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락, 중국경제의 둔화에 따라 신흥개도국 주도의 세계경제성장세가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0~2007년 중 연평균 4.3%이었던 세계경제 성장률이 2008~2015년에는 3.3%에 그쳤고, IMF는 2016~2020년 중에도 연평균 3.8%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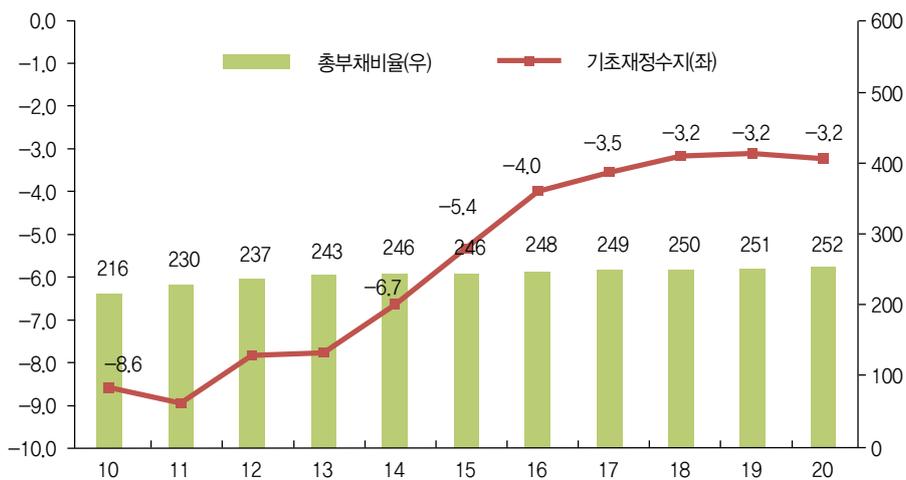
[그림 52] IMF 세계경제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Database, October 2015

IMF는 일본 경제의 성장세가 아베정부의 기대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베정부의 현 정책이 유지되는 경우 명목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2017년부터 3%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보였다. 적자가 억제된 데 힘입어 2020년까지는 국가부채비율도 250%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본정부가 2020년에는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예상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그림 53] IMF의 일본재정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Database, October 2015

일본경제연구센터도 금융완화정책 및 그에 따른 엔화의 약세가 이어진다고 하여도 2020년까지 일본경제가 1% 근방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며, 아베정부의 경제전망의 전제가 낙관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GDP갭의 축소에 따라 일본 물가의 하락은 멈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여도 2018년 중간목표로 삼고 있는 기초재정수지 -1.0%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2020년 흑자전환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평가는 아베정부의 사회보장비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성 의료비용의 급증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표 16] 일본경제연구센터 경제전망

(단위: %)

	2011-15	2016-20	2021-25
실질GDP ¹⁾	0.7	0.9	0.4
소비자물가 ¹⁾	0.8	1.0	0.4
기초재정수지비율 ²⁾	-5.1	-3.2	-3.8
정부부채비율 ³⁾	196.3	204.1	223.7

주: 1. 기간 중 평균 2. 중앙정부, 지방정부 포함, 명목GDP대비, 기간 중 평균
3. 명목GDP대비, 기간 중 마지막 연도

자료: J CER, “The 42nd Medium-Term Economic Forecast: Baseline Scenario for FY2015-FY2030”, Aug. 20, 2015.

두 번째는 세출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IMF는 일본의 재정개혁이 성과를 발휘하려면 중기재정개혁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³⁸⁾ 이를 위해서는 중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채를 축소하기 위한 목표의 설정, 재정수지구조 조정내용의 구체화, 향후 예정된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구조를 변화시키는 조치에 대한 사전 공표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재정적자, 기록적인 공공부채, 낙관적으로 보이는 경제전망, 반복되는 추경편성으로 야기되는 불확실성 등 많은 요인들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규율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중기재정계획에 신뢰를 높인다면 재정개혁의 추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재정개혁을 통한 재정조정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규율에는 지출억제, 추경편성의 제한, 재정전망에 대한 재정제도 심의회(Fiscal System Council)의 독립성 있는 평가서 출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38) IMF(2015)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IMF는 아베정부의 현 정책이 유지된다면 2020년까지는 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GDP 대비 공공부채비율이 250% 내외에서 억제될 것이나 2020년을 넘어서는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제성장 모멘텀(연 0.7% 성장 수준)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지출의 억제를 위한 법개정 등 재정규율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아베정부가 그간 세출억제노력으로 사회보장부문에서 2015~2018년 중 연간 5천억엔의 절감효과 있다고 하였으나 재정개혁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고령자 중심의 사회보장제도의 과감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중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부담의 증대가 불가피한데, 실제로 재정에서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의 비중이 1990년 17.5%에서 2015년에는 32.7%로 크게 상승하였다. 향후에도 인구감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육아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며, 이 때문에 사회보장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의료보험에 투입되는 재정을 대폭 축소하고,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을 크게 인상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금의 경우 기초연금은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하지만 2층 연금 이상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³⁹⁾ 또한 소비세율도 2017년 10%에 인상에 멈추지 말고 경제상황을 고려하면서 매년 1%씩 25%까지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세 번째, 재정개혁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시각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일본은행의 과감한 금융완화정책이 경제성장률을 상승시켜 재정개혁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일본은행이 이러한 금융완화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본 미즈호연구소는 일본은행의 양적·질적완화정책으로 국채발행잔고 중 일본은행이 보유하는 국채의 비중이 2020년에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⁴⁰⁾ 이때에는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이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정개혁은 2020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조만간 더욱 과감한 개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그러한 조치가 부재하다면 아베정부의 재정개혁은 목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39) 일본의 공적연금은 전국민(20세 이상~60세 미만 피용자, 피용자 배우자, 자영업자)을 포괄하는 1층(기초연금),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대상의 2층(민간직장인 대상 후생연금, 공무원·교직원 대상 공제조합, 국민연금기금),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여부를 선택하는 적립식 연금의 3층(후생연금기금, 적격퇴직연금 등) 구조로 되어 있다.

40) みずほ総合研究所(2015)

V.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본 보고서는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 과정에서의 특성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아베 정부 이전과 현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일본 장기침체의 진행과정을 초기 버블발생과 붕괴,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장기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985년 플라자합의로 엔화가치가 급등하자 통화당국은 경기위축을 억제하고 내수부양을 위해 과도한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는 자산시장의 버블을 빠르게 형성하였다. 이후 자산버블과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금융긴축 정책을 강화하면서 주가와 부동산 등 자산버블이 붕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자산버블 붕괴에서 시작된 일본의 경기침체 장기화는 대체로 1990년대 중반까지는 민간부문의 부채조정과 투자부진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까지는 본격적인 디플레이션과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특성을 보였다. 2000년 이후로는 일본 경제구조 개혁의 잇따른 실패와 IT버블 붕괴(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유럽 재정위기(2012년) 등 반복된 해외경제위기를 경험하며 저성장이 지속되었다.

제3장에서는 아베정부 이전 시기의 일본정부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노력들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통화 및 재정정책, 구조개혁 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통화정책 측면의 경우 통화당국은 불황을 극복해낼 만큼 과감한 금융완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정책금리 조정시점 및 강도 조절에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990년대에는 일본 금융시스템이 취약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 자체가 낮았던 점도 경기부양 실패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통화당국은 뒤늦게 제로금리정책(1999년 2월)과 양적완화정책(2001년 3

월) 등 보다 과감한 금융완화정책을 도입하였으나 경기회복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통화당국이 경제주체들의 물가하락 기대를 조정하지 못한 데 상당한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경제주체들은 통화정책에 대한 낮은 신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디플레이션 진행으로 실질금리 하락이 충분치 않았던 한계가 있었다. 다만 과감한 금융완화정책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기업 자금 조달여건이 완화되는 등의 일부 성과는 있었다.

재정정책의 경우 일본정부는 버블붕괴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기조를 줄곧 견지해 왔었다. 실제 1990년부터 아베정부 이전 기간 동안에 경기부양용 재정지출액은 2015년 일반 회계예산(96.3조엔)의 3.5배에 이르는 339.7조엔 규모에 달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 효과는 일시적이고 낮은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그 이유로는 재정지출이 정치적인 요인으로 실질 수요와는 배치되는 분야에 주로 투자되었으며, 산업경쟁력 하락에도 경제구조 개혁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던 소비세율 인상 등의 정책적 오류가 지적된다.

일본의 장기침체는 수요측면 외에도 공급측면의 생산성회복을 위한 구조개혁 실패에도 상당부분 기인했다. 일본경제는 버블붕괴 이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주간평균 근로시간의 감소로 노동공급이 둔화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결과적으로 생산성회복을 위한 구조개혁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소홀히 함으로써 장기침체의 근원을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구조개혁 정책에 있어 일부 성과가 나타난 시기는 고이즈미 정부 때였다. 2001년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은 ‘성역 없는 구조개혁’이라는 정책목표를 표방하고 이후 5년간 금융부실 해소, 재정건전화, 연금제도 개혁 등을 추진해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고이즈미 내각의 핵심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꾸준히 처리한 결과 부실채권비율은 2001년 8.4%에서 2005년 2.4%로 축소되었다. 이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되는 등 경제활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와 동일본대지진(2011년)여파로 다시 경제는 부진의 늪에 빠져들었다.

제4장 아베정부의 경제정책 부문에서는 역대 일본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2013년부터 야심차게 추진 중인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인 소위 ‘아베노믹스’의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 개의 화살’로 지칭되는 현 아베정부의 경제정책

은 전통적·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모두 포함하는 공격적인 통화정책, 과감하고 확장적인 재정정책, 단기적인 경기부양책과 병행하여 경제구조 개혁에 중점을 둔 신성장전략으로 나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초기 아베정부의 경기부양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2013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 달성목표를 2%로 하는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하였고, 4월에는 양적·질적통화완화정책(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netary Easing)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본원통화를 연간 60~70조엔 추가 공급하고, 국채매입을 매년 50조엔씩 증액(2014년 10월 80조엔으로 확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재정정책의 경우 2013년부터 3차례의 경제대책을 추진하면서 본예산 이외에도 정부일반회계(2015년 기준)의 19.6%에 이르는 총 18.9조엔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이 이전정부의 경제정책과 크게 달라진 점은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확고한 엔화약세정책의 공언과 물가목표제 도입 등을 통해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전달하려는 노력에도 잘 나타나 있다.

아베정부는 단기적인 통화·재정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한 신성장전략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는 구조개혁 없는 경기부양정책이나 공급부문 개선 없는 수요확대정책은 그 효과가 매우 한정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신성장전략은 향후 10년간 평균 명목GDP성장률 3% 달성과 10년 후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GNI)을 150만엔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총요소생산성을 현재의 0.77%p에서 향후 1.18%p로 제고시킴으로써 2015~2020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0.79%에서 2.0%로 높이려는 목표를 설정해 놓았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베정부는 노동시장, 기업투자환경 조성, 재정부문 등에서의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다.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지원, 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른 고급인력 유치 등이 주요 정책목표이다. 이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해소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사항이다. 기업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는 법인세 인하, 국가전략특구 지정, 제조업 경쟁력 강화, TPP타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베정부는 주요 제조업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현 30%대에서 가까운 시기에 20%대로 인하할 계획이며, 국가전략특구 지정은 중앙정부가 특구선정을 주도하는 Top down 방식으로 이전의 수동적인 Bottom up 방식에서 벗

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정개혁의 경우 2015년 6월 각의에서 재정개혁을 위한 3가지 추진 방안(디플레이션 탈출경제 재생, 세출개혁, 세입개혁)을 담은 경제·재정 재생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까지 재정흑자를 실현하고, 그 이후에는 GDP 대비 채무잔액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현 시점에서 아베정부 경제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으로 볼 때,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기대를 하회하고 향후 전망도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아베정부의 경제정책 시행 초기에는 엔화약세와 기업수익 증가, 경제성장률 제고 등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었던 게 사실이다. 엔/달러 환율은 아베정부 출범 이후 2015년 말까지 약 42%가 평가절하 되었고 물가를 반영한 실질금리도 하락추세를 보였다. 이에 힘입어 대외수출이 증가하고 기업이익과 주가가 상승하는 등 우호적인 경제상황이 연출되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3~2015년 연평균 1.3% 상승하여 2009~2012년 간 지속되었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소비세율 인상(2014년 4월)여파, 2014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폭락, 중국경제 성장 둔화 등이 일본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2014년, 2015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0%, 0.4%에 그치는 등 아베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를 크게 하회하였다. 2016년 들어서도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이 다시 재연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5년 12월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강해지면서 엔화는 강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일본은행이 엔화약세 유도와 새로운 경기부양 수단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마이너스금리(2016년 1월 29일)를 전격 도입하였으나 엔화 강세는 여전히 지속되는 등 일본경제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2. 시사점

최근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의 장기침체과정을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세계경제여건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측면이 없진 않지만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생산성 저하, 서비스산업의 후진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요인 등은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기 특성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일본 장기침체의 또 다른 요인이었던 엔화가치 급등, 자산가격의 급격한 붕괴와 대규모 금융부실, 경제정책 대응 실패, 재정적자 누적과 막대한 규모의 국가부채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는 일본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일본식 장기침체기의 특성과 일본정부의 경제정책 대응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경제부흥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부문별로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통화당국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절한 정책처방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일본은행은 경기침체기 중에도 낙관적 경제전망으로 일관하여 잘못된 정책처방과 정책타이밍을 실기하여 장기 디플레이션을 방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통화정책상의 물가목표치를 밀도는 저물가와 대내외 악재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통화당국은 우리 경제의 기초적인 물가흐름과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객관적인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화당국은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향 고착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물가안정목표 준수 의지를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행은 당시 경제주체들의 물가하락 기대를 조정하지 못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 하락이 충분하지 않아 통화정책효과가 약화된 경험이 있다. 한편 아베정부의 과감한 통화정책이 성공할 것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일본 통화당국이 물가목표 달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엔저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수출경쟁력에서 계속적으로 밀려날 수 있음을 감안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일본정부의 국가부채가 2014년 기준으로 GDP 대비 226%에 달해 OECD 평균(115%)의 2배가량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일본의 국가부채가 높아진 것은 경기부양을 위한 반복적인 재정지출과 감세정책 남발로 재정적자가 급속히 확대되었고, 경기부진과 디플레이션으로 명목경제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재정수입 기반이 약화되어온 데 기인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하는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사회보장지출 확대에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건전화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로는 첫째, 실현 가능한 경제전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기초로 작성된 재정건전화계획은 과도한 세출 및 세입계획을 포함하게 되어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둘째, 재정건전화 정책은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추진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하며, 재정수입 및 지출구조 변화에 대한 예상 등의 정보가 사전에 공표되어야 한다. 셋째,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은 투자수요와 적절히 매칭 되어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투자수요가 적고 타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미흡한 분야는 재정투입 대상으로 부적절하며 제외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의 경우, 일본의 노동시장 정책이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 하에 비정규직을 통한 유연화 전략을 사용해왔으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만 심화시켰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현 아베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개선에 두어져 있지만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와 조정의 어려움으로 다른 어떤 부문보다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쟁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격차 해소,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고용유연성 제고라 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고용보호 수준을 충분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 등을 통한 고령자 인적자원의 활용,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 활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베정부는 기업투자환경을 조성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려는 전략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로는 법인세 인하, 국가전략특구 지정, TPP타결, 제조업경쟁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분야는 아베정부가 핵심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인 국가전략특구 지정과 제조업경쟁력 강화 방안들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지정은 과거 일본 역대정권에서도 명칭만 달랐지 존재했었다. 다만 이번 아베정부의 국가전략특구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범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아베정부의 국가전략특구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와 범부처 차원의 협업 강화로 규제개혁의 추진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시행중인 우리나라의 다양한 특구제도가 일본의 의료 및 농업 분야 등의 특례처럼 국가경쟁력 강화로 직결될만한 굵직한 규제개혁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아베정부의 2차 국가전략특구 지정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특성을 고려한 미래 신성장산업을 선정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약화되어온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아베정부에서도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실천적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국내 모노즈쿠리 기반정비, 수익력 향상, 디지털화에 의한 변혁에 대응, 인재 육성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일본정부는 디지털화에 의한 변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일례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는 시장의 확대를 예상하여 체계적인 전략과 관련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방의 유망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예를 들면 글로벌 니치톱(GNT: Global Niche Top)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인재확보와 육성, 제품개발 및 생산, 글로벌 진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정책패키지로 지원하는 식이다.

한편 아베정부는 경제 분야의 성과 사례로 2015년 10월 5일 타결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 등 12개국으로 구성된 TPP타결로 일본은 세계GDP의 36%, 교역규모의 26%를 차지하는 최대 자유무역경제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TPP타결은 우리 경제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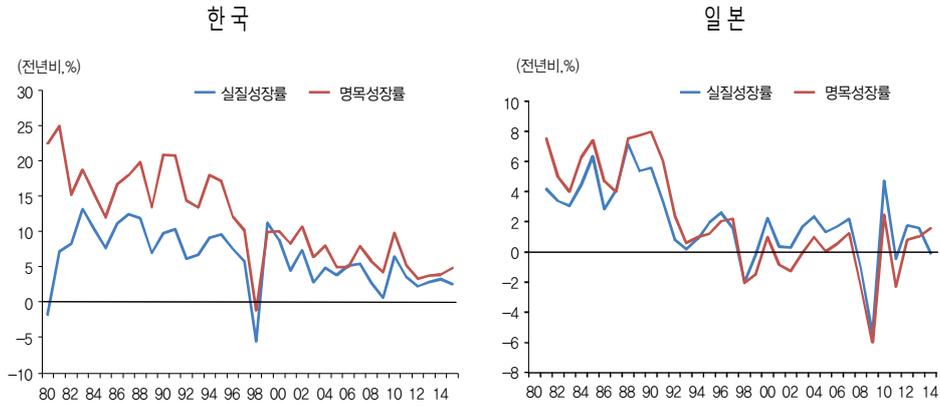
칠 것으로 예상된다. TPP는 다자간 FTA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통상 규범의 제시와 글로벌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TPP는 관세철폐 품목 비중의 자유화율이 높아 양자 FTA의 경제적 효과를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우리나라도 TPP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TPP참여 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치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통합 논의 등과도 병행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최근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내 및 산업 간 활발한 사업재편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과잉투자 산업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산업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만일 일본의 사업재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대일본 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심각한 타격과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경쟁력이 약화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좀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경쟁력과 경제체질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구조개혁의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 고용 둔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대상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교육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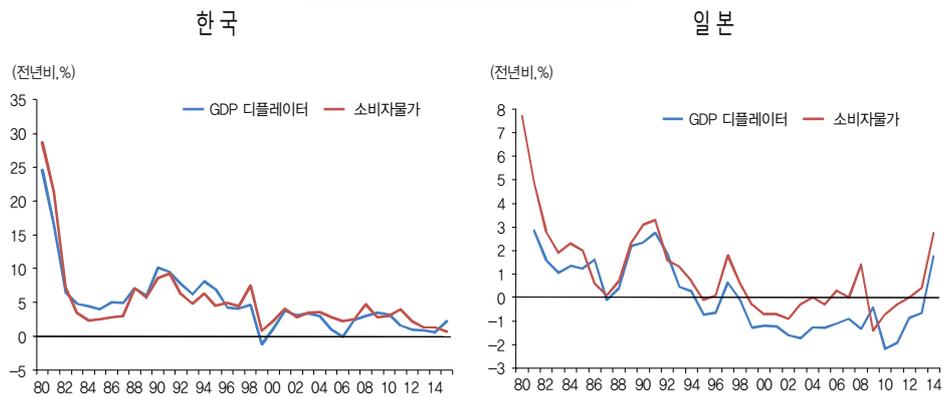
우리 경제는 수출환경 악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상당기간 저성장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선진국과의 기술경쟁력 격차를 축소시키지 못하거나, 새로운 성장산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거나, 구조개혁을 통해 비용구조를 극소화시키고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과 유사한 장기간의 경기침체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부록] 주요 경제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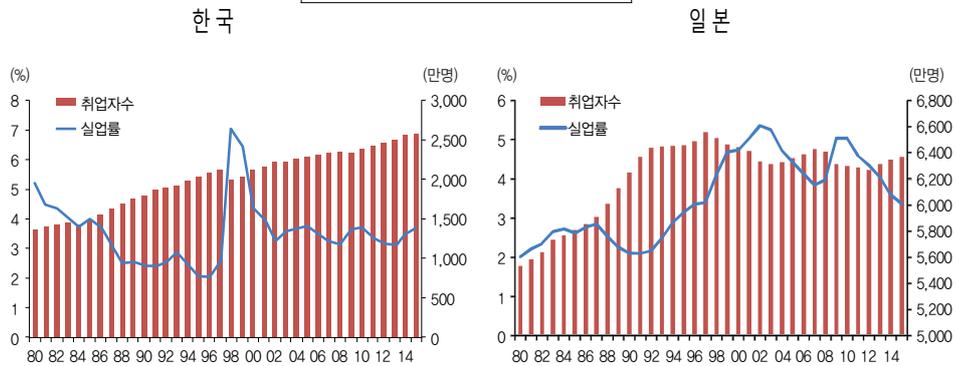
실질 및 명목 성장률



물가 및 디플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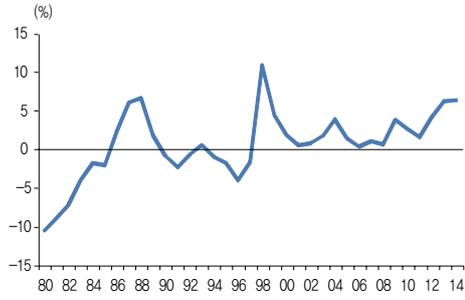


취업자수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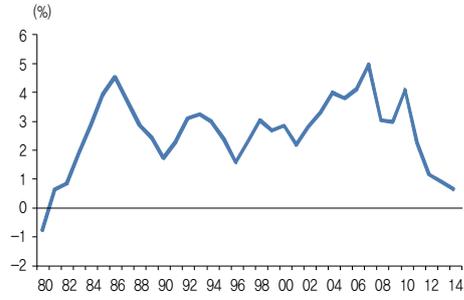


GDP대비 경상수지 비중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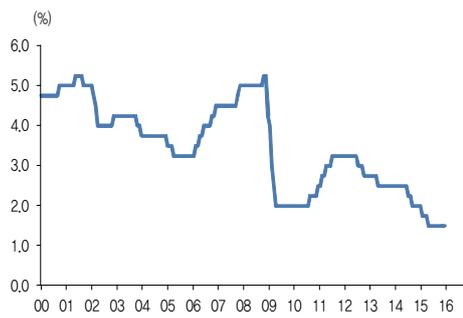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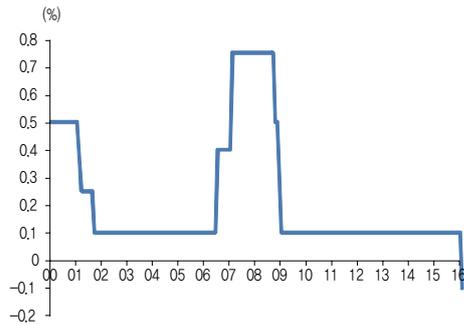


기준금리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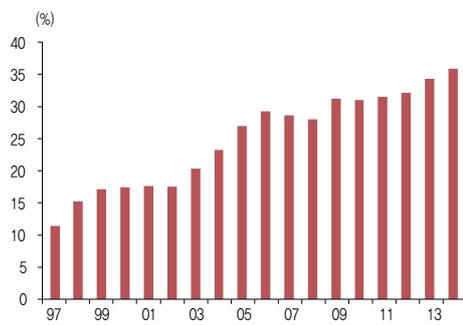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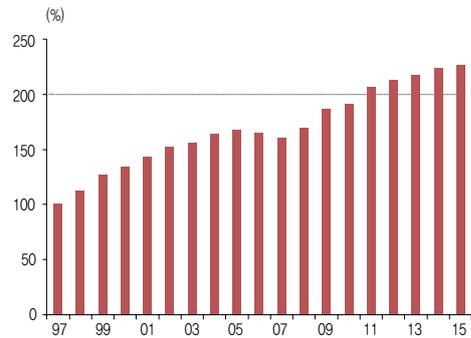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

한국



일본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IMF, 일본은행, Bloomberg, OECD

참고 문헌

- 강두용·민성환·정인환·사공목·김양평,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침체 가능성 검토」, ISSUE PAPER 2014-371, 산업연구원, 2014.12.
- 강병호, “일본 아베노믹스 국가전략과 한국의 특구정책 비교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8권 제1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4.3, pp.217-226.
- 국회예산정책처, 「일본경제 장기침체 특성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2015.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고이즈미 2기 내각의 출범과 주요 정책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 03-37호, 2003.9.
- _____,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효과분석」, 산업통상자원부 외부용역보고서, 2013.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아베노믹스 2년 성과 진단 및 향후 전망”, 「Global Market Report」 15-007, 2015.1.27.
- 류상순·문병순, “아베노믹스 발목 잡고 있는 일본의 노동개혁”, LG경제연구원, 2015.9.
- 류상윤, “고비 넘긴 아베노믹스 관심의 초점 세 번째 화살로”,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2015.6.16.
- 미래창조과학부, “일본재흥전략 분석”, 「과학기술 동향 심층 분석보고서」 1호, 2013.10.2.
- 박기임, “일본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 사례 분석 및 시사점,” 「Trade Focus」 Vol. 13 No. 6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 12.
- 박종규, 「일본의 장기침체와 회생과정: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금융조사보고서 2007-04, 한국금융연구원, 2007.9.
- 사공목, “아베노믹스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분석」, 2013.7.
- 산업연구원,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e-KIET 산업경제정보」 제610호, 2015.4.13.
- 서세욱, “일본 재정개혁 사례의 시사점”, 「예산정책연구」, 제1권 제2호, 2012. 11, pp.203-235.
- 안순권, “일본 민주당 정권의 구조개혁 추진 및 시사점,” 「KERI Zoom-In 09-01」, 한국경제연구원, 2009. 1.
- 원종학·전병목, “일본의 재정악화 원인과 시사점”, 「조세·재정 BRIEF, 조세재정연구원」, 2010.5.
- 윤석명, “일본 공무원연금 운영 현황과 시사점”, 한국행정학회 주체 세미나 자료, 2015. 2.
- 이남수·서세욱, 「최근 일본의 재정개혁과 시사점: 고이즈미 내각의 개혁을 중심으로」, 경제현안분석, 제14호, 국회예산정책처, 2007.

- 이재준, “일본의 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KDI 경제전망」 2014 하반기, 2014.12.
- 여경진 “일본 아베정권의 국가전략특구”, 한국관광정책(2013)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조사보고서 2014-6, 보협연구원, 2014.5.
- 조경엽·허원제,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정책연구」 14-18, 한국경제연구원, 2014.11.
- 최성백, “일본정부의 경제정책 이슈에 관한 고찰”, 「일어일문학」 제22호, 대한일어일문학회, 2015.5, pp457-474.
-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 및 재정건전화방침의 주요내용 및 평가”, 2013.6.
- 한국은행,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개혁 사안항과 평가”, 한은 해외경제정보 제2007-41호 (2007.5)
- _____,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일본경제의 특징 및 당면과제”, 2013.11.
- _____, “일본은행, 자산매입 등 기금 10조엔 증액 및 대출증가 지원을 위한 자금공급 상세 방안 결정”, 현지정보, 2012.2.
- _____, “일본 노동시장의 주요 구조변화 및 정책과제”, 2014.5.
- _____, “일본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동향분석, 2014.7.
- _____, “일본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 논의 및 시사점”, 2014.7.
- _____, “일본의 recession기 정책당국의 주요 대응사례 및 시사점”, 조사자료, 2014.12.18..
- _____, “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 동향분석, 2015.6.4.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TPP 타결이 한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2015.10.12.
- Bernanke, Ben S., “Essays on the Great Depress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rsey, 2000.
- Botman, D, Danninger, S, and J. Schiff, “Can Abenomics Succeed? Overcoming the Legacy of Japan’s Lost Decad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2015.
- Goodfriend, Marvin, “Overcoming the Zero Bound with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May 2015.
- Hausman and Wieland, “Abenomics: Preliminary Analysis and Outlook,”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Spring 2014.
- IMF, 「JAPAN」, Staff Report for the 2015 Article IV Consultation, June 30, 2015.

- _____, World Economic Database, October 2015.
- Jackson, Harriet,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with Negative Policy Rate,” Staff discussion Paper 2015-13, Bank of Canada, Nov. 2015.
- JCER, “The 42nd Medium-Term Economic Forecast: Baseline Scenario for FY2015-FY2030”, Aug. 20, 2015.
- Jones, Randal, “Reforming the Labour Market in Japan to Cope with Increasing Dualism and Population Ageing”, OECD Working Paper ECO/WKP(2008/60), OECD, 2008.
- Koo, Richard C., “The Holy Grail of Macroeconomics: Lessons from Japan’s Great Recession”, John Wiley & Sons, USA, 2009.
- Krugman, Paul, “It’s Baaack: Japan’ Slump and the Return of the Liquidity Trap,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1998, pp. 137-205.
- OECD, OECD Economic Survey: Japan 2015, 2015.4.
- OECD, OECD Tax Database.
- Posen, Adam S., “Restoring Japan’s Economic Growt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1998.
- Svensson, Lars, “The Zero Bound on an Open Economy: A Foolproof Way of Escaping from a Liquidity Trap,” Monetary and Economic Studies(Special Edition), Feb. 2001.
- Ugai, Hiroshi, “Effect of the Quantitative Easing Policy: A Survey of Empirical Analyses,” Monetary and Economic Studies, Mar. 2007.
- 日本 財務省, 「日本の財政関係資料」, 2015. 9.
- 日本 内閣府,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 2015. 6. 30.
- 日本 内閣府,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資料 試算”, 2015. 7.
-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 “財政破綻への道, 加速化の恐怖”, 2015. 7. 2.
-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 “財政健全と人口トレンドの転換に挑む日本経済”, 第41回 中期経済予測, 2015. 3.
- みずほ総合研究所, “安倍改造内閣の財政運営の課題”, 2015.11.18.

목 록

	제 목	집 필	발 간
89	조세지출제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채은동·이영숙	2015. 9
8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세제개편 동향 연구	이영숙	2015. 2
87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채은동·태정림	2015. 2
86	북유럽 국가의 금융·재정위기 극복과 시사점	조은영	2014. 4
85	우리나라 투자지원 조세제도 현황과 주요국 제도와의 비교 연구	이영숙	2013.12
84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동향과 정책시사점	김정미·이강구	2013. 9
83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신영임·서재만	2013. 7
82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	신동진	2013. 7
81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	채은동	2013. 5
80	남부유럽재정위기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신후식·유승선	2012. 10
79	고령화가 근속 및 연공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장인성	2012. 9
78	고령자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서재만	2012. 9
77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	채은동	2012. 8
76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김대철·심혜정	2012. 8
75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신동진	2012. 8
74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혜정	2012. 7
73	201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과 분배효과	장윤정	2012. 7
72	출산·보육지원 재정소요 추계와 정책과제	조은영	2012. 6
71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세입 결산에 미치는 영향	신영임·장윤정	2012. 6
70	외국자본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최천규	2012. 5
69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와 시사점	성명기	2011. 12

	제 목	집 필	발 간
68	경제성장률 단기예측 모형 - 베이저인 VAR 접근방식에 의한 예측 -	황종률	2011. 12
67	재정통계 개편의 주요 쟁점과 과제	윤용중, 이강구, 윤준승, 서재만, 김정미	2011. 11
66	소득계층별 물가지수의 차이가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장인성	2011. 11
65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서재만	2011. 9
64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신동진	2011. 8
63	2010년 결산상 재정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준승	2011. 8
62	재정의 경제안정화 효과 분석 - 자동안정화장치를 중심으로 -	박승준 · 이강구	2011. 6
61	한·중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와 시사점	원동아	2011. 2
60	고령화가 생산성 및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장인성	2010. 12
59	위안화 절상의 영향과 시사점	신후식 · 유승선	2010. 12
58	재정정보 공개 현황 및 개선방안	서재만	2010. 12
57	2010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이영환 · 신영임	2010. 10
56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및 개선방향	윤준승, 정지은, 이남수	2010. 9
55	가계부채의 문제점과 정책개선방안	신동진	2010. 7
54	경기선행지수의 향후 경기에 관한 시사점	유승선	2010. 7
53	남유럽 재정위기와 정책시사점	김정미	2010. 7
52	외평기금 이자비용 처리문제로 본 통합재정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심혜정	2010. 6
51	경제위기와 각국의 조세정책 동향 및 시사점	신영임 · 이영환	2010. 5
50	외화예산의 환위험 관리방안	연훈수	2010. 2
49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 및 과제	나아정 · 박승준	2009. 12
48	소득격차의 확대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장인성	2009. 12
47	금융위기와 한국의 잠재성장률	황종률	2009. 12
46	사회복지 기능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분석	심혜정	2009. 12

	제 목	집 필	발 간
45	2009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항목 운용현황	정지은	2009. 11
44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과제	정지은	2009. 11
43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 과제	이영환, 황진영,신영임	2009. 11
42	금융안정화대책의 정책효과와 출구전략의 방향	신동진	2009. 11
41	2008년 이후 세계개편의 세수효과	이영환·신영임	2009. 8
40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분석	신동진	2009. 7
39	재정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박승준	2009. 4
38	경제위기의 전개와 대응	신후식, 유승선, 연훈수	2009. 3
37	우리나라 외환금융시장 취약성 비교 분석	신후식, 유승선, 연훈수	2008. 12
36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제정에 따른 입법적 시사점 검토	황진영	2008. 12
35	지방정부 재정자주권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심혜경	2008. 12
34	2008년 세계개편안 분석 : 목적세 정비안을 중심으로	이영환·정지은	2008. 11
33	2008년 세계개편안 분석 :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정지은	2008. 11
32	2008년 세계개편안 분석 : R&D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이상훈	2008. 11
31	2008년 세계개편안 분석 : 종합부동산세	이영환·신영임	2008. 11
30	OECD 주요국가 초과세수 발생과 재정규율 사례	이남수·이성규	2008. 9
29	유가환급금 지급(안) 평가	정지은, 홍인기, 전승훈	2008. 9
28	청년층 고용현황과 시사점	정상훈·이충언	2008. 8
27	환율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연훈수	2008. 4
26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이영환, 이성규	2008. 1
25	은행산업의 경쟁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신동진	2007. 12

	제 목	집 필	발 간
24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 필요성 검토	황진영	2007. 12
23	원화가치 변동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	성명기	2007. 11
22	한국의 실질GDP 장기 예측 : 2007~2050년	장인성	2007. 11
21	세법체계 개편작업의 동향분석	황진영	2007. 9
20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정상훈	2007. 9
19	과세정보 공개제도의 현황	문성환	2007. 8
18	구조조정 이후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	신동진	2007. 8
17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자연실업률 추정	황종률	2007. 7
16	유가 상승의 원인 및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쟁점 분석	이영환·전승훈	2007. 7
15	미국 기준선전망의 의의와 우리 예산과정에 대한 시사점	정문종	2007. 6
14	최근 일본의 재정개혁과 시사점	이남수·서세욱	2007. 6
13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한 검토	전승훈	2007. 5
12	DDA 농업협상의 논의동향 및 영향에 대한 고찰	송원근	2006. 6
11	미국의 재정개혁 논의동향과 시사점	정문종	2006. 6
10	2000~2005년 경제예측의 경험과 단기예측 방식의 개선방향	유승선	2006. 5
9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향	문성환	2006. 5
8	자영업 진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김기승	2006. 2
7	분야별 자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전승훈	2006. 1
6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현황 및 과제	송원근	2005. 12
5	국세행정에 대한 새로운 감독체제의 모색	문성환	2005. 7
4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규율의 확립-지출상한선을 중심으로	정문종	2005. 6
3	일자리 창출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기승	2005. 5
2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전승훈	2004. 12
1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기승, 임일섭, 전승훈	2004. 10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발간일 2016년 4월 28일

발행인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유월애 (tel 02·859·2278)

1.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88·3775)
-

ISBN 978-89-6073-885-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6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